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A Study of Changes to Political Institutions
Designed to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2025. 12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기관 : (사)한국정치학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사업 RS-2025-02173110

정책연구 25-28-07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A Study of Changes to Political Institutions
Designed to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김범수 외

2025. 12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기관 : (사)한국정치학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 보고서는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디지털 전환
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의 연구결
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사)한국정치학회

총괄책임자: 김범수 교 수

참여연구원: 김정연 교 수

양지수 박 사

유성진 교 수

장우영 교 수

조계원 교 수

목 차

요약문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	1
제2절 연구목적과 주요 질문	4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7
제2장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위와 메커니즘 분석	11
제1절 미시적 수준: 감정화된 시민성과 정치적 행위 변화	11
1. 정서적 공중과 감정의 정치화	11
2. 정서적 공중과 음모론의 접점: 정서적 동원과 인지적 단순화	20
3. 음모론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반감	25
제2절 중시적 수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분극화	28
1.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사례 도출	28
2.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분석: 구조와 특성	36
3.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동영상 분석: 이슈입장과 연결망 구조	45
제3절 거시적 수준: 알고리즘·AI 기술과 민주주의	90
1. AI 기반 기술과 민주주의 영향	90
2. 알고리즘 인식과 민주주의 질: 구조방정식 모형과 잠재프로파일 분석 통합 접근	91
3. 기본권·정당성·실질적 민주성 측정	93
4. 기술과 민주주의 인식의 경로	97
5. AI 기술 혁신과 민주주의 기대·불신의 구조	103
제3장 디지털 폴리아키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106

제1절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과 적용	106
1.	디지털 폴리아키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106
2.	민주적 회복력의 동적 과정	110
3.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의 적용: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전략	114
제2절	포용적 참여와 숙의적 회복력 증진	118
1.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 구축	118
2.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을 통한 디지털 역량 증진	122
3.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	127
제3절	공정한 정치경쟁과 정보 다양성 보장	130
1.	알고리즘 투명성과 편향 감시 체계: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 설립	130
2.	정치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 규제	134
3.	정당 내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138
제4절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 구조 개선	147
1.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 회복 해외 사례	147
2.	우크라이나-Diia 플랫폼: 리더십 회복 사례	148
3.	독일-연방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정당 회복 사례	151
4.	에스토니아-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선거 회복 사례	153
5.	대만-vTaiwan: 참여(공론장) 회복 사례	155
제5절	민주적 회복력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159
1.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위기 유형별 해외 사례-한국 적용 매핑	160
2.	민주주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	163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국내 정치제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 진단 및 평가	166
1.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의 재구성	166
2.	국내 정치제도의 대응 현황과 문제	167
제2절	정책제언 및 단계별 영역별 실행전략	180
1.	참여 및 대표성 강화	180

2.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	181
3. 거버넌스 적응력 강화	184
참고문헌	187
[부록 1]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설문지	200
[부록 2] 빅카인즈 대표기사 세트 목록	218

표 목 차

〈표 1-1〉 연구주제와 분석방법	9
〈표 2-1〉 ‘디지털+민주주의+리더십’ 대표기사 중심성	32
〈표 2-2〉 ‘디지털+민주주의+정당’ 대표기사 중심성	33
〈표 2-3〉 ‘디지털+민주주의+선거’ 대표기사 중심성	34
〈표 2-4〉 ‘디지털+민주주의+참여’ 대표기사 중심성	35
〈표 2-5〉 분석 대상 유튜브 뉴스·정치채널의 일반적 특성	37
〈표 2-6〉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유형 및 이념별 상관관계	45
〈표 2-7〉 채널 유형별·이념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46
〈표 2-8〉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46
〈표 2-9〉 채널 유형별·이념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51
〈표 2-10〉 채널 유형별·구간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점유율	53
〈표 2-11〉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54
〈표 2-12〉 ‘비상계엄 사건’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56
〈표 2-13〉 채널 유형별·이념별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58
〈표 2-14〉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58
〈표 2-15〉 채널 유형별·이념별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63
〈표 2-16〉 채널 유형별·구간별 ‘팬덤정치’ 동영상 점유율	64
〈표 2-17〉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65
〈표 2-18〉 ‘팬덤정치’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67
〈표 2-19〉 채널 유형별·이념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69
〈표 2-20〉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70
〈표 2-21〉 채널 유형별·이념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72
〈표 2-22〉 채널 유형별·구간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점유율	74

〈표 2-23〉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75
〈표 2-24〉 ‘드루킹 사건’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76
〈표 2-25〉 채널 유형별·이념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78
〈표 2-26〉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79
〈표 2-27〉 채널 유형별·이념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84
〈표 2-28〉 채널 유형별·구간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점유율	85
〈표 2-29〉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86
〈표 2-30〉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88
〈표 2-3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94
〈표 2-3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8
〈표 2-3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98
〈표 2-34〉 구조모델 결과	99
〈표 2-35〉 표준화 간접효과(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결과	100
〈표 2-36〉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적합도 검증	101
〈표 2-37〉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분석	103
〈표 3-1〉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정의들	110
〈표 3-2〉 디지털 시민의회 5단계별 AI 활용 방안	121
〈표 3-3〉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의 설계 방향	133
〈표 3-4〉 정당 내 디지털 속의 플랫폼 설계 방향	143
〈표 3-5〉 디지털 폴리아키 분석틀 3대 평가 축과 질문	148
〈표 3-6〉 해외 민주주의의 회복 사례 비교	158
〈표 3-7〉 해외 사례와 대응 단계	162
〈표 3-8〉 한국 적용 및 협치 구조	164
〈표 4-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현황	171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방법의 체계와 구성	9
[그림 2-1]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 구독채널 수	17
[그림 2-2] 이념성향이 다른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 구독채널 수	18
[그림 2-3]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유튜버 이념성향 같음 여부에 따른 신뢰 정도	19
[그림 2-4] 알고리즘과 정치적 다양성	19
[그림 2-5] 부정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인식	24
[그림 2-6] 디지털 민주주의 연관어 언론기사량 추이	29
[그림 2-7] 대표기사 세트의 의미연결망 구조	31
[그림 2-8] 정치 인플루언서 채널간 댓글 연결망	44
[그림 2-9] 채널 유형별·구간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점유율	52
[그림 2-10]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55
[그림 2-11]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및 반응(좋아요) 추이	62
[그림 2-12] 채널 유형별·구간별 ‘팬덤정치’ 동영상 점유율	63
[그림 2-13] ‘팬덤정치’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66
[그림 2-14]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및 반응(좋아요) 추이	72
[그림 2-15] 채널 유형별·구간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점유율	73
[그림 2-16] ‘드루킹 사건’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75
[그림 2-17]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 및 반응(좋아요) 추이	83
[그림 2-18] 상위 1,000개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증가 추이	84
[그림 2-19] 채널 유형별·구간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점유율	85
[그림 2-20]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87
[그림 2-21] 잠재프로파일분석 시각화	102
[그림 3-1] 디지털 폴리아키 프레임워크	109

[그림 3-2] 동적 체계로서 디지털 폴리아키	112
[그림 3-3]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	123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2.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도 수준에서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시민의 정치적 인식, 공론장의 구조, 그리고 정치제도의 작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시적·중시적·거시적 세 층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알고리즘과 플랫폼 기술이 유발하는 담론의 분극화, 시민성의 감정화, 정당성과 대표성의 약화라는 현상을 실증 사례와 이론적인 분석틀을 통해 조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정치적 평등, 시민참여, 정치적 책임성—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닌, 정치제도의 정당성, 시민의 행위성, 공공성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경직성과 부적합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은 단순한 기능 회복의 개념을 넘어, 제도적 학습과 구조적 적응의 역량을 포함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 경로를 다층적 분석틀—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수준—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시민의 정치 인식, 감정, 참여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며, 중시적 수준에서는 사회집단 간 상호작용, 정서적 동조, 그리고 공론장의 분열과 정치적·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선거, 정당, 입법 제도 등 민주주의 운영의 구조적 기반에 발생한 변화와 함께 대표성, 포용성, 책임성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의 후퇴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같은 다층적인 분석틀은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의 단일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 전반에 걸쳐 복합적 위기를 촉발하는 총체적 변화임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주의 회복력의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 폴리아키(digital polyarchy)’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고전적 폴리아키 이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서 정치적 경쟁성과 시민적 포용성—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재해석하는 시도이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알고리즘적 불평등과 플랫폼 통제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견제하면서도, 정치적 다양성, 정보 접근의 형평성, 정서적 반응과 합리적 토론의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정치 참여를 미시적이고 비제도적인 행위로 전환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서적 공중’(affective publics) 개념으로 설명된다. 정서적 공중은 네트워크 기술이 만든 상상된 집단으로, 개인의 사적 경험이 공론장으로 확장되는 ‘개인-정치적 수행’과 ‘자기의 정치’를 통해 감정은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감정의 정치화는 놀이적 참여나 알고리즘의 증폭 구조 속에서 강화되며, 감정적 반응이 논리적 사고를 압도함으로써 민주적 숙의의 기반을 흔들고, 분노나 공포를 유발하는 콘텐츠의 확산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정서적 역학은 정치적 양극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확산, 그리고

음모론의 대중화를 초래한다. 특히 음모론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우리 대 그들’의 대립 구도로 해석하며, 복잡한 사회 문제를 소수의 악의적 행위자의 의도적 결과로 환원시켜 개인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단순하고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강화한다. 이러한 감정적 동원과 인지적 단순화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시민들이 대의제 정치에 실망하여 직접민주주의나 엘리트가 배제된 결정 구조를 선호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공중의 부상은 민주주의의 감정적 기반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내구성을 위협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정치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의제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과 정서적 양극화의 교합으로 온라인 공론장의 분극화는 심대한 위기 국면을 경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론장은 분극화를 넘어 형해화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상계엄, 팬데믹, 여론조작, 부정선거론이 공론장을 균열시키는 중대이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은 유튜브로 운위되는 플랫폼의 뉴스·정치채널 생태계를 매개로 사회 파급력을 증폭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채널이 이 생태계의 정보 유통과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널리즘과 게이트키퍼를 우회함으로써 선택적 노출-반향실 효과-확증편향으로 이어지는 분극화 메커니즘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핵심 채널들의 연결망 분석 결과, 상위의 채널들을 기축으로 상호 대항담론을 형성하며 강한 이슈 클러스터를 구조화함으로써 공론장의 분극화를 촉진하였다. 따라서 공론활동의 자유를 확립하는 원칙 아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허위조작정보와 편향 동원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플랫폼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 기반 기술이 민주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SEM)과 잠재프로파일분석(LPA)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AI 기술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민주주의 기대 형성 과정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미래 기대를 높이는 이중 경로(double mediation) 효과를 보였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인식이 가장 강한 부정적 매개효과를 나타내 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LPA 결과 ‘민주주의 고신뢰형·부분적 신뢰형·불신형’ 세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AI 기술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기대도 높았다. 본 연구는 시민이 AI 기술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가치 침식을 우려하는 낙관과 불신의 병존 구조를 밝히며, 향후 AI 거버넌스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디지털 전환은 정치체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디지털 폴리아키’(digital polyarchy)는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포용적 참여,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 민주적 회복력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개념적 틀이다. 디지털 기술은 시민에게 새로운 참여 공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과 감정 정치의 확산으로 참여의 질을 훼손하고 경쟁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 유지가 아니라 적응적이고 학습 가능한 구조, 즉 살아 있는 제도로서의 회복력을 요구받는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기술 통제, 정보 신뢰성, 숙의적 회복력, 시민참여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단순히 외부 충격을 견디는 체제를 넘어 위기를 통해 자기 갱신과 혁신을 이루는 동적 질서로 발전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론적·제도적 방향이다.

디지털 전환은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며, 민주주의의 신뢰와 숙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디지털 시민의회는 AI를 결합하여 대표성·포용성·숙의의 질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제도적 혁신이다. AI는 모집·학습·숙의·의사결정·후속조치의 전 과정에서 번역, 정보 요약, 논점 구조화, 합의 도출, 피드백 환류 등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시민의 비판적 판단과 투명한 검증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통합은 시민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허위정보나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인지적 탄력성을 키우는 핵심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접근성 법제화, 보편적 설계, 취약계층 참여 확대—는 민주적 평등과 숙의적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제시된다.

오늘날 플랫폼은 여론 형성과 정치정보의 유통을 좌우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으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은 정보 접근권과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ECAT)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알고리즘 감사, 이용자 권리 보호, 시민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감독받는 자율성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치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광고 타겟팅 규제 및 고위험 인공지능 지정과 같은 국제 규범을 참고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당 내부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 공개, 참여, 속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 폴리아키 관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포용성·경쟁성·제도적 통제와 신뢰를 어떻게 함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Diia는 전쟁 중에도 행정·시민권 서비스를 디지털로 유지해 참여의 연속성을 지켰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보안 위험 과제를 드러냈다. 에스토니아 i-Voting은 e-ID·PKI·블록체인으로 무결성과 추적성을 제도화해 선거 신뢰를 높였으나, 고령·저소득층 접근성 보장이 필요했다. 다만 vTaiwan은 AI 토론 분석으로 분열 이슈를 합의 가능한 의제로 번역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지만, 최종 제도화는 정치적 수용성에 달려 있었다. 독일의 e-청원은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참여를 가능하게 했으며, 정당과 의회가 시민 의견을 단순히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피드백 루프 속에 흡수하도록 만들었지만, 청원 수와 지지 서명 건수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제도 활용의 확산성과 포괄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조건적 촉매일 뿐이며, 효과는 접근성·리터러시·편향 억제 규범·설명가능성·독립 감사·시민 감시가 함께 갖춰질 때에만 나타난다. 한국은 위기 유형별로 예방-대응-회복의 연속 거버넌스를 다중행위자 협치로 돌려, 정보 공백엔 공동 디지털 허브, 정당 폐쇄성엔 전자 참여·청원 연계, 선거 불신엔 인증·투표·검증 전자화, 공론장 분열엔 AI 속의+공개 기록을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세 축을 거버넌스에 내장할 때, 기술은 ‘감독받는 자율성’ 아래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및 대표성 강화,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 거버넌스 적응력 강화의 차원에서 정책적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참여 및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우선 다수결주의를 벗어나 입법 청원으로 온라인 청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의정치 참여 메커니즘에 속의와 토론의 기능을 장착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패넌과 전문가지성 결합한 공론조사 등 집단적 합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 측면에서 우선 플랫폼·AI 고도화 환경을 반영하여 게이트

키퍼의 책임성을 강화한 시장자율규제를 정착해야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법률 입법에서 개념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과의 양립을 담보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유통에 대한 책임과 수익활동의 윤리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자율규제기구의 확대 제편, 팩트체크 시스템의 복원과 시민사회 핫라인 활성화, 규제 법률 입법에서의 초당적 전문가 협업과 시민 공청회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노출 추천 기준에 대한 사후 감사 체계 도입, 전자개표기 무결성 검증과 서버 접근권 관리 등 데이터 보안 강화를 통한 절차적 신뢰 확보, 분절적 규제기관의 협업 루프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플랫폼·디지털·미디어 권한을 조정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허브 구축, 공공부문에서 AI 등 IT 기반의 실험적 제도 도입, AI 알고리즘 등 신기술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민주주의 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치적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기 사회양극화 완화와 민주주의 패러다임 모색 방안을 제공한다.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계곡을 건넜으나, 사회양극화와 정보화 역기능의 도전으로 심각한 퇴행의 진입로에 서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된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위기 현상, 메커니즘, 본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디지털 폴리아키를 정초하는 데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고도화된 환경에서,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기술 규제와 진흥은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국가·산업·개인의 경쟁력과 성취를 좌우하는 인공지능·플랫폼 같은 자원은 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글로벌 표준 수용, 정책 수립의 합목적성,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 거버넌스의 운용은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이 성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정보 주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은 정보기술의 사회화를 넘어 사회화된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인과 공동체 발전의 촉매제로 체화하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AI·플랫폼 리터러시의 체득과 통합지향적 정보 공중(informed public)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f Changes to Political Institutions Designed to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2.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 the simultaneous unfold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at the institu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citizens' political awareness, the structure of the public sphere, and the functioning of political institutions at micro, meso, and macro levels. It sheds light on phenomena such as the polarization of discourse, the emotionalization of citizenship, and the weakening of legitimacy and representation caused by algorithms and platform technologies, through empirical cases and theoretical frameworks. The cor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directions for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that can preserve and strengthen the core democratic values—political equality, civic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ccountability—in response to these changes.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merely a matt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a political issue that demands a reconfiguration of the legitimacy of political institutions, citizens' agency, and the public sphere.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ies not only generates new threats but also exposes and reinforces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already embedded in democracy, revealing institutional rigidity and inadequacy in responding to them. Under

these conditions, democratic resilience must be understood not simply as functional recovery, but as a dynamic concept encompassing institutional learning and structural adaptabilit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pathways through which digital transformation affects democracy by employing a multi-level analytical framework—divided into the micro, meso, and macro levels—to examine how various manifestations of democratic crisis emerge and interact across these dimensions. At the micro level, the analysis focuses on changes in citizens’ political perceptions, emotions, and modes of participation. At the meso level, it investigates intergroup interactions, affective alignment,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public spher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political and affective polarization. At the macro level, it explores how structural foundations of democratic governance—such as elections, partie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are being transformed, while analyzing the mechanisms behind the erosion of democracy’s core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inclusiveness, and accountability.

This multi-layered analytical framework contributes to explaining that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a temporary malfunction of any single democratic function, but rather a comprehensive structural transformation that generates multi-dimensional crises across the entire democratic system.

In response to these crises,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digital polyarchy”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stitutionalizing democratic resilience. This concept represents an attempt to reinterpret Robert A. Dahl’s classical theory of polyarchy—which identifies political competition and civic inclusiveness as the core principles of democracy—with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environment. Digital polyarchy presents a new design principle for democracy that seeks to democratically check algorithmic inequality and platform control, while enabling the coexistence of political diversity, 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and a balance between affective engagement and rational deliberation.

4. Research Results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media has transformed political participation into a micro-level and non-institutional practice, a shift that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 of “affective publics.” Affective publics are imagined collectives formed by network technologies, where private experiences are extended into the public sphere through “personal-political performances” and “the politics of the self.” In this process, emotions are converted into political practices. However, such politicization of emotion is reinforced within structures of playful participation and algorithmic amplification. As emotional reactions overwhelm logical reasoning, they undermine the foundation of democratic deliberation and accelerate the spread of content that evokes anger and fear. These affective dynamics fuel political polarization, the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and the popularization of conspiracy theories.

Conspiracy theories, in particular, interpret complex realities through a simplistic “us versus them” framework, reducing multifaceted social problems to the intentional acts of a few malicious agents. This reduction alleviates individuals’ cognitive burden while amplifying emotionally persuasive narratives. Such emotional mobilization and cognitive simplification erode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eaken social trust, leading citizens to lose faith i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to prefer forms of direct democracy or decision-making structures that exclude elites. Consequently, the rise of affective publics exposes the emotional foundations of democracy while simultaneously threatening its durability. To respond,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politicization of emotion and to reconstruc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a way that allows citizens to feel genuinely represented.

Amid the interse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the

polarization of online public spheres has entered a critical phase of crisis. Big data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public discourse, particularly surrounding issues that challenge procedural democracy, has moved beyond polarization to a stage of disfiguration. Four major issues—martial law, fandom politics, opinion manipulation, and election fraud narratives—have been identified as key drivers of fragmentation. These issues amplify their social reach through the ecosystem of news and political channels on platforms such as YouTube. Influencer channels dominate this ecosystem’s information flow and discourse formation, bypassing journalism and traditional gatekeeping. As a result, a polarization mechanism rooted in selective exposure, echo chambers, and confirmation bias has taken hold. Network analysis of major channels further reveals that clusters of high-ranking channels form mutually antagonistic discourses, structuring strong issue clusters that intensify polarization in the public sphere. Therefore, under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freedom of public discourse,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to strengthen platform accountability and respond proactively to the problems of disinformation and biased mobilization—where bad information drives out goo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AI algorithm-based technologies on perceptions of democrac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Latent Profile Analysis(LPA). The analysis explored how perceptions of AI technologies influence citizens’ views of fundamental rights, procedural legitimacy, and substantive democracy, thereby identifying the process by which expectations for democracy are formed. The results show a double mediation effect: positive perceptions of AI have a negative effect on perceptions of the core functions of democratic institutions, yet simultaneously heighten expectations for democracy’s future. Notably, perceptions of procedural legitimacy exerted the strongest negative mediating effect, confirming the crucial role of social trust in technology adoption. LPA identified three citizen groups—high trust, partial trust, and distrust types—and revealed that higher awareness of AI technology corresponds to greater democratic expectations. The study thus uncovers the coexistence of optimism and distrust: citizens recognize AI’s utility while fearing the erosion of democratic values,

offering insights for future directions in AI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reform.

Digital transformation fundamentally reorganizes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political systems, revealing both the crisis and resilience potential of democracy. With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digital polyarchy” is propo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constructing democracy in the digital era, centered on inclusive participation, democratic competition, institutional control and trust, and democratic resilience. While digital technologies create new spaces for citizen participation, they also undermine the quality of participation and threaten fairness in competition through algorithmic bias and the expansion of affective politics. Consequently, democracy must evolve from a system of mere institutional maintenance into an adaptive and learning structure—a living system capable of renewal. Digital polyarchy offers a new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 by integrating mechanisms of technological oversight, informational reliability, deliberative resilience and civic participation enabling democracy not only to withstand external shocks but also to renew and innovate through crises.

Digital transformation has widened the gap between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deepe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weakening the trust and deliberative foundations of democracy. As an alternative, Digital Citizens’ Assemblies are proposed as an institutional innovation that combines AI technologies to enhance representation, inclusiveness, and deliberative quality simultaneously. AI supports every stage—from recruitment and learning to deliberation, decision-making, and feedback—by facilitating translation, information summarization, issue structuring, consensus building, and feedback loops, thereby improving efficiency and fairness. However,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I must remain a supplementary tool, paired with citizens’ critical judgment and transparent verification systems. Moreover, the integration of AI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is essential for developing citizens’ cognitive resilience against manipulation and misinformation by fostering understanding of algorithmic mechanisms. Finally, strengthening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digital inclusion—through accessibility legislation, universal design, and expanded participation of vulnerable groups

—constitutes a key democratic infrastructure that underpins political equality and deliberative resilience.

Today, platforms have emerged as major actors in shaping public opinion and distributing political information. Yet the opacity and bias of algorithms threaten the rights to information access and political equality. To address this, Kore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 Platform Fairness Commission, modeled after the EU’s European Centre for Algorithmic Transparency (ECAT). This body would institutionalize “supervised autonomy” by conducting algorithm audits, protecting user rights, and building civic oversight mechanisms that balance autonomy with accountability. In addition, legal reforms are needed to ensur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political information recommendation algorithms, referenc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political ad targeting regulations and the designation of high-risk AI systems. Furthermore, political parties should utilize digital technologies to enhance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structures, thereby preventing power concentration and restoring democratic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polyarchy, democratic recovery depends not on the mere adoption of technology but on how inclusiveness, competitiveness, institutional control, and trust are co-designed. Ukraine’s Diia maintained administrative and civic services digitally even during wartime, preserving participatory continuity but also revealing challenges of digital divide and security risks. Estonia’s i-Voting increased electoral trust by institutionalizing integrity and traceability through e-ID, PKI, and blockchain, yet accessibility gaps persisted among older and low-income populations. Taiwan’s vTaiwan used AI-based discussion analysis to translate divisive issues into negotiable agendas and enhance procedural transparency, though final institutionalization depended on political receptivity. Germany’s e-petition system enabled large-scale participation at low cost, integrating citizen input into a responsible feedback loop with parties and parliament, but showed limits in scalability and inclusiveness as petition numbers and signatures declined. Ultimately, technology is a conditional catalyst: its effectiveness appears only when accessibility, literacy, bias-mitigation norms,

explainability, independent audits, and civic oversight coexist.

For Korea, democratic resilience requires a continuous governance cycle of prevention-response-recovery, involving multi-actor collaboration according to crisis type: addressing information gaps through shared digital hubs, countering party closure via linked electronic participation and petition systems, restoring electoral trust through digital certification-voting-verification mechanisms, and mitigating public sphere fragmentation through AI-assisted deliberation and open-record transparency. When these three dimensions are embedded in governance, technology strengthens democracy under the principle of supervised autonomy.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in three domains: enhancing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restructuring the public sphere,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adaptability.

First, to enhance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Korea should move beyond majoritarianism by institutionalizing online petitions into legislative initiatives, embed deliberation and discussion functions into representative mechanisms, and promote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jects such as deliberative polling that combine citizen panels and expert knowledge.

Second, to restructure the public sphere, market self-regulation that strengthens gatekeeper responsibility must be established in line with the advancement of platforms and AI. Legal frameworks regulating disinformation should clarify conceptual ambiguities and ensure compatibility with fundamental rights to secure institutional stability. Moreover, the accountability of YouTube influencers mus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regulations on information distribution responsibility and the ethics of profit-making activities.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self-regulatory bodies, restoration of fact-checking systems, activation of civil society hotlines, and promotion of bipartisan expert cooperation and public hearings in legislative processes are also essential.

Third, to enhance governance adaptability, short-term efforts should include post-hoc audit systems for platform algorithms and recommendation criteria, data security

measures such as electronic ballot integrity verification and server access control, and creation of collaborative loops among fragmented regulatory agencies. In the long term, Korea should establish a digital governance hub to coordinate powers dispersed across ministries(platforms, digital, media), adopt experimental institutional models based on AI and IT in the public sector, and institutionalize democracy impact assessments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I algorithms.

5. Expectations

The anticipate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the study provides pathways for mitigating social polarization and re-envisioning the democratic paradigm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Korean society has crossed the threshold toward procedural democracy, it now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where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and the dysfunctions of informatization threaten democratic regression. Accordingly, the study's analysis of the phenomena, mechanisms, and nature of democratic crises during the digital transition will offer a crucial reference point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digital polyarchy.

Second,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achieving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promotion in an environment wher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ts impact on social change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nsified. Historically, regulation and promotion of technology have existed in tension, and strategic responses are now required for key resour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platforms, which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and vitality of nations, industries, and individuals. Thus, the study's proposals—embracing global standards, enhancing the purposefulness of policy formulation, and developing sustainable governance for technological progress—will provide valuable insights.

Third, from a social perspective, the study offers empirical implications for enabling citizens to adapt reflectively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 mature as autonomous subjects of in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ims not merely at the socia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but at cultivating a future in which socialized technologies are critically embraced and internalized as catalysts for personal and communal development. Through the acquisition of AI and platform literacy and the cultivation of an integrated, informed public, as discussed in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advance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digital transformation governance model.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1.1 Research Background and Problem Statement
- 1.2 Research Objectives and Key Questions
- 1.3 Research Methods and Structure

Chapter 2. An Analysis of the Layers and Mechanisms of Democratic Crisi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 2.1 The Micro Level: Affective Citizenship and Changes in Political Behavior
 - 1. Affective Publics and the Politicization of Emotion
 - 2. The Intersection of Affective Publics and Conspiracy Theories: Affective Mobilization and Cognitive Simplification
 - 3. Conspiracy Theories and Institutional Antipathy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 2.2 The Meso Level: Fragmentation of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 1. Digital Transformation and Democratic Backsliding: Case Selection
 - 2. Analysis of Political YouTube Channel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 3. Contents Analysis of Political YouTube Channel: Issue Position and Network Structure
- 2.3 The Macro Level: Algorithms, AI Technology, and Democracy
 - 1. AI-based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Democracy
 - 2. Algorithmic Perception and Democratic Quality: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d Latent Profile Analysis

- 3. Measuring Fundamental Rights, Legitimacy, and Substantive Democracy
- 4. Pathways of Technology and Perceptions of Democracy
- 5. Expectations and Distrust in Democracy in the Context of AI Technological Innovation

Chapter 3. Democratic Resilience through Digital Polyarchy

3.1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Digital Polyarchy

-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Digital Polyarchy
- 2. The Dynamic Process of Democratic Resilience
- 3. Applying the Concept of Digital Polyarchy: Practical Directions for a Resilient Democracy

3.2 Enhancing Inclusiv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Resilience

- 1. Building a Model for Digital Citizens' Assemblies
- 2. Strengthening Digital Resilience through the Integration of Digital and AI Literacy
- 3. Reinforcing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Digital Inclusion

3.3 Ensuring Fair Political Competition and Information Diversity

- 1. Algorithm Transparency and Bias Monitoring Systems: Establishing a Platform Fairness Commission
- 2. Regulating the Bias of Political Information Recommendation Algorithms
- 3. Strengthening Digital Democracy within Political Parties

3.4 Enhancing the Structur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ra

- 1. Democratic Resili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nternational Case Studies
- 2. Ukraine – Diia Platform: A Case of Leadership Resilience
- 3. Germany – Bundestag e-Petitions System: A case of Party Resilience

- 4. Estonia – Blockchain-Based i-Voting System: A Case of Electoral Resilience
- 5. Taiwan – vTaiwan Platform: A Case of Participatory(Public Sphere) Resilience

3.5 Democratic Resilience and Crisis Response Governance

- 1. International Cases by Type of Democratic Crisi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 2. Crisis Response Governance by Type of Democratic Crisis

Chapter 4. Conclusion

4.1 The Evaluation of the Domestic Political System's Response Level to Digital Transformation

- 1.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 2.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the Domestic Political System's Response

4.2 Policy Recommendations

- 1. Strengthening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 2. Restructuring the Order of the Public Sphere
- 3. Enhancing Governance Adaptability

Referenc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

21세기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질적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지도자가 민주주의 제도의 형식을 유지한 채, 그 작동 원리와 가치를 내부로부터 잠식하는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권혁용 2023; 김현섭 2023). 이 과정에서 제도적 정당성의 약화,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공론장의 분열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정치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정보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가 디지털 기술, 플랫폼 구조, 알고리즘 통제 등 외부적 요인과 결합하여 더욱 구조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이 점점 고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장우영 2024; 홍석한 2024).

AI, 플랫폼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기반 정치 소통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와 정보 접근 경로를 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혐오 표현의 확산, 정서적 동조의 강화, 그리고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요인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협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로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은 더 이상 중립적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선거 과정, 정당 구조, 입법 절차,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주적 조정 메커니즘은 이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는 분절화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증폭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 구조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까닭에 이에 대한 통합적 분석과 제도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오늘날 공론장은 더 이상 기성 언론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 구조에서 작동하

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론장은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의 유통은 물론, 의견 형성 방식, 정치 감정의 동원 구조까지 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논쟁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반응과 즉각적 동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론장은 점차 정치적 숙의의 장에서 정서적 투쟁의 장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은 자율적인 정치 주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 흐름에 반응하는 존재로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노, 조롱, 낙인과 같은 감정 기반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른바 ‘감정화된 시민성’(affective citizenship)의 확산은 다수 시민의 침묵 혹은 극단화된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숙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기반 공론장의 설계 논리와 감정화된 시민성의 확산 메커니즘에 대해 정치제도는 제대로 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시민의 정치 행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정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제도적인 설계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알고리즘 권력이 점차 정치영역에 침투하면서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조율 능력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AI 및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정보 추천을 넘어, 정치과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캠페인의 자동화, 맞춤형 정치광고, 여론 예측 및 조작,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등은 정치과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율적인 판단과 숙의 능력을 우회하거나 대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목적과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작동 방식이 비가시적이고 불투명할수록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책임성은 더욱 약화된다. 기존 민주주의가 전제해온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은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설계자, 데이터 분석가 등 새로운 비정치적 권력 주체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으며, 시민은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가 어떤 논리로 구성되는지 알 권리도, 이를 통제할 수단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알고리즘 권력의 확장과 시민 견제력의 약화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가시성(visi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민주주의의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력’(democratic resilience)이란 단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존속이 아니라, 기술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민주화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정치제도의 내부 조정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외부적 감시와 제어 능력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은 정치 권력의 구성 원리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알고리즘 시스템은 시민의 정보 접근, 여론 형성, 정치 참여 방식을 결정하는 사실상 새로운 ‘플랫폼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당, 의회, 행정부 등 전통적 권력 구조는 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권력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성의 원칙도,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민간 주체들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 공정성 훼손, 정치광고 조작, 공론장 왜곡, 감정 동원 정치와 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응력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정치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예컨대 플랫폼 알고리즘의 여론 조작 효과, AI 기반 정치 광고의 선거 영향, 감정화 된 집단행동의 조직화 등—이 확장됨에 따라, 정치적 응답성과 책임성의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제도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그러한 진단에 기반하여 정치제도를 재구성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디지털 전환은 민주주의의 도구적 조건이자 위기의 구조적 조건이다. 기술은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이에 걸맞는 통제 없이 방치될 경우 제도를 왜곡하고 시민을 소외시키는 경로로도 작동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정치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본질적으로 개입하는 지금, 민주주의는 단지 전통적인 제도와 절차를 보존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기의 권력구조와 시민성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평등, 참여, 책임—를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정치제도 체계의 구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회복의 이론적 틀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과 주요 질문

디지털 전환은 정치·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실시간 플랫폼 소통, 정서적 반응 중심의 정보 유통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참여 방식, 공론장의 작동 논리에 깊은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자, 동시에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 감정적 동조, 담론의 분절화, 대표성과 정당성의 침식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도 수준에서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시민의 정치적 인식, 공론장의 구조, 그리고 정치제도의 작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시적·중시적·거시적 세 층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알고리즘과 플랫폼 기술이 유발하는 담론의 분극화, 시민성의 감정화, 정당성과 대표성의 약화라는 현상을 실증 사례와 이론적인 분석틀을 통해 조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정치적 평등, 시민참여, 정치적 책임성—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닌, 정치제도의 정당성, 시민의 행위성, 공공성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로 인식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경직성과 부적합성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은 단순한 기능 회복의 개념을 넘어, 제도적 학습과 구조적 적응의 역량을 포함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 경로를 다층적 분석틀—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수준—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시민의 정치 인식, 감정, 참여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며, 중시적 수준에서는 사회집단 간 상호작용, 정서적 동조, 그리고 공론장의 분

열과 정치적·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선거, 정당, 입법 제도 등 민주주의 운영의 구조적 기반에 발생한 변화와 함께 대표성, 포용성, 책임성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의 후퇴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같은 다층적인 분석들은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의 단일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 전반에 걸쳐 복합적 위기를 촉발하는 총체적 변화임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디지털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를 재구성하고 있는가? 둘째, 알고리즘과 플랫폼 기술은 공론장의 구조와 담론 형성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정치적·정서적 양극화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가? 셋째, 디지털 전환은 대표성, 포용성, 책임성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약화하거나 재편하는가? 넷째,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정책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민주주의 회복력은 외부적 위협이나 내부의 구조적 충격 속에서도 민주주의 제도가 지속성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주로 군부 쿠데타, 권위주의 회귀와 같은 외부적 억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논의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 알고리즘, 플랫폼 권력, 감정 정치, 정보 환경의 왜곡 등 내부로부터의 침식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복력은 단순히 위기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위기를 학습의 계기로 삼아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역량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주의 회복력의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 폴리아키’(digital polyarchy)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고전적 폴리아키 이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서 정치적 경쟁성과 시민적 포용성—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재해석하는 시도이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알고리즘적 불평등과 플랫폼 통제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견제하면서도, 정치적 다양성, 정보 접근의 형평성, 정서적 반응과 합리적 토론의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은 회복력을 단지 민주주의의 보존 논리가 아닌, 기술 조건 속에서의 민주주의적 진화의 실험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이론적으로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제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걸맞은 민주주의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의 핵심은 기술에 종속되지 않되, 기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의 창조적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치제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영역별 제도개선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민주주의 구조 개편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도 수준에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을 담지하고 있는 이른바 ‘알고리즘 민주주의’의 다층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사례분석,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고안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이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 및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치이론과 실증적인 연구 등 관련 문헌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왜 상호 연계되어 있고 그 영향을 동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의 포괄성으로 인해 다층적인 검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정서적 공중과 감정에 기반한 음모론, 플랫폼화된 공론장, 알고리즘 민주주의, 그리고 디지털 폴리아키와 민주주의 회복력 등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인 도구로 제시된다.

디지털 기술이 실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갈등과 민주주의 퇴행을 어떻게 촉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온라인 공론장의 분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생산자의 온라인 데이터 및 그에 대한 이용자 반응의 동향과 특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중시적 차원에서 집단 간 상호작용에 따른 동조화와 분극화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인 분석 전략은 추세분석과 담론분석, 그리고 동영상 내용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의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접근가능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분석이 문헌조사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 수용이 민주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의 적용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이 직접적으로 가져온 소셜미디어, AI,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유통 구조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규범, 시민참여의 방식, 공공성의 구성 원리 등을 재편하며 민주주의의 기능과 작동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 정치적 주변부에

있었던 청년, 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참여의 경로를 활성화하지만, 알고리즘은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시민을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에 가두어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키며 때때로 시민의 자율적 판단을 왜곡하며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반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는 빅데이터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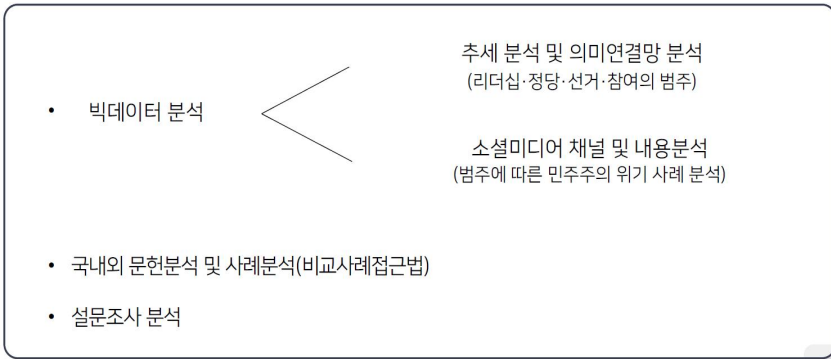
더불어 디지털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활용한 국내외의 제도적 실험 사례들을 검토한다. 핀란드의 ‘Open Ministry’는 이를 구현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24’, ‘국민참여플랫폼’, ‘국민동의청원’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시민참여 시스템이 운영된 바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와 성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 기술발전을 의사결정과정에 접목시킨 디지털 거버넌스 사례의 분석은 민주주의 회복력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증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주제별 분석방법에 더해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에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유권자 인식조사를 관련 주제에 맞추어 범용으로 활용한다. 이 설문조사는 연구주제에 맞추어 세심하게 고안되었으며 정치 인식과 행태, 소셜미디어 사용과 신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에 관한 인식, 디지털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규범, 기술과 민주주의 간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분석방법과 연구방법의 체계와 구성은 <표 1-1>과 [그림 1-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1〉 연구주제와 분석방법

연구주제	분석방법
AI·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이론 분석
디지털 기술이 촉발하는 갈등 및 민주주의 회복에 미치는 역할 사례 분석	빅데이터 분석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AI·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메커니즘 도식화	정치이론 분석 설문조사 분석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담론 분극화 관계 실증 분석	설문조사 분석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응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법제 비교분석
국내 정치제도 현황 분석과 중장기 개선 로드맵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그림 1－1〕 연구방법의 체계와 구성



디지털 전환기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단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대표성과 정당성의 기반 위에 반응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민주주의를 살아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학습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구조적 역량이다.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외부 충격에 맞서는 수동적 복원력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회복력을 요구받고 있다. 포용적 참여와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에 기반을 둔 디지털 폴리아키의 공고화는 디지털 전환기에도 민주주의가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나은 질서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동적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이론적 논의와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와 퇴행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정치적·정책적 제안으로 마무리된다.

제2장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위기의 층위와 메커니즘 분석

제 1 절 미시적 수준: 감정화된 시민성과 정치적 행위 변화

1. 정서적 공중과 감정의 정치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확장은 정치 참여의 양식을 미시적이고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정치 행위로 간주되지 않던 해시태그 참여, ‘좋아요’, 밈(meme) 공유, 짧은 댓글 등은 이제 감정의 표현을 통해 집단적 공명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된 정치적 주체를 생성하는 핵심 실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가 더 이상 제도권 내부의 공식적인 참여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이고 감정화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정은 단지 정치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로서 정치적 실천의 수행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정서적 공중’(affective publics)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시대 정치 행위의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으로 부상했다(Lünenborg, 2019). 이 개념은 2015년 파파카리시(Zizi Papacharissi)가 『정서적 공중』(Affective Publics)을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녀는 아랍의 봄, 월가 점령 시위와 같은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 참여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다. 이 개념은 당시의 저항운동이 단순히 정치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성적 결사체를 넘어서, 감정적 표현과 연결의 강도,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파파카리시는 공중을 단순한 물리적 집합이나 의견 공동체로 보지 않고,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재구성된 공간에서 사람, 기술, 그리고 실천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상상된 집단”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이러한 공중이 형성되는 조건으로 네 가지 핵심 속성을 제시한다. 지속성(persistence), 복제성(replicability), 확장성(scalability), 검색 가능성(searchability)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유 가능성(shareability)도 네트워크화된 공중을 구성하는 데 필수

적인 속성으로 작용한다. 이 다섯 가지 기술적 특성은 콘텐츠의 흐름을 강화하고, 개인의 감정 표현이 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Papacharissi, 2015).

정서적 공중은 이러한 네트워크적 특성 위에서 감정의 표현을 통해 구성되고, 연결되며, 때로는 단절된다. 이 개념에서 핵심은 감정 자체보다 그것이 지닌 ‘강도’(intensity)다. 즉, 정서는 구체적 감정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감정이 가지는 강렬함과 그것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에 둔다(Papacharissi, Lünenborg, & Röttger-Rössle, 2024). 예를 들어, 어떤 뉴스에 분노를 느꼈을 때, 그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우리는 댓글을 달거나 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처럼 감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파파카리시는 이러한 정서적 강도가 종종 언어 이전의 수준에서 발생하거나, 언어적 표현과 결합하여 메시지의 효과를 증폭시킨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서적 공중은 감정이 지닌 과장과 그 과장이 만들어내는 연결망, 그리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공동 실천의 가능성에 의해 정의된다.

정서적 공중이 디지털 환경에서 부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회문화적 조건이 있다. 첫째, 소셜미디어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공론장으로 끌어오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발화와 연결되는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의도된 정치적 행동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표현 방식 자체가 공적 의미를 획득하면서 정치화된다. 파파카리시는 이를 ‘개인-정치적 수행’(personal-political performance)이라고 부른다(Papacharissi, 2015).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게시물이 사회적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되거나, 일상의 불편을 토로한 글이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수행은 종종 ‘놀이’(play)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에게 감정의 진지한 표현뿐 아니라, 해학적이고 유희적인 방식의 참여를 장려한다. 해시태그 챌린지, 밈, 짧은 풍자 영상 등은 사용자가 자기표현을 감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규범을 재해석하거나 전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놀이는 단지 가벼운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의미 질서를 조정하고, 정치적 발화를 위한 정서적 몸짓(affective gestures)을 구성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파파카리시는 이러한 놀이적 행위가 종종 매우 강한 감정적 공명을 일으키며, 개인적인 표현이 파급력을 갖게 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한다(Papacharissi, 2015).

셋째, 정서적 공중은 알고리즘적 환경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현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관심사와 정서적 반응을 분석하여, 감정적으로 더 강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 이러한 ‘정렬 알고리즘’(sorting algorithms)은 가장 많은 감정적 반응—사랑, 미움, 놀라움 등—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먼저 노출되도록 설정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분법적인 서사, 흑백논리, 또는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가시성을 높인다. 감정의 균형이나 복잡성을 담은 표현보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상위에 배치된다. 그 결과, 디지털 공간에서는 감정이 진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설득 수단이 되기도 한다(Lim, 2021).

또한 정서적 공중은 기존의 공론장 개념과는 다른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중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공공성과 정치적 개입의 조건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한다.

먼저, 정서적 공중은 유동성과 일시성을 중심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형성되는 담론은 지속적인 결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의 흐름, 순간적인 충동, 참여자의 기분과 관심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된다. 파파카리시는 이를 ‘감정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로 설명하면서, 이 구조가 특정한 주제나 가치가 아니라 감정적 강도와 분위기의 반복을 통해 유지된다고 본다(Papacharissi, 2015). 이러한 성격은 일시적으로 공동의 관심사나 정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모였다가 빠르게 해체될 수 있는 ‘즉흥적 공중’(ad hoc publics)의 형태로 나타난다(Lünenborg, 2020). 이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과 함께, 공중의 정체성과 요구사항이 고정되기보다 유동적인 실천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서적 공중은 개인화된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강화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기존의 정당 중심 정치나 이념 공동체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을 공유하면서, 직접적인 이념적 동질성이나 조직적 경험 없이도 특정한 이슈에 참여할 수 있다. 파파카리시는 이를 ‘연결적 행동’(connective action)으로 개념화한다(Papacharissi, 2015).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하고, 그것이 해시태그와 같은 디지털 기호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대화나 정치적 맥락에 연결될 때, 그 표현은 단순한 사적 경험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SNS에 과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 글

에 #MeToo라는 해시태그가 붙는 순간, 이 경험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이자,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변모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개인의 글은 하나의 정치적 발화가 된다. 이처럼 사적인 이야기가 공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순간을 파파카리시는 ‘자기의 정치’(politics of the self)라고 부른다(Papacharissi, 2015). 이는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나의 감정이 공적 문제와 연결되어 정치적 효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감정적 자기표현을 통한 정치성의 획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중의 영향력은 주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 이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법이나 제도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과 인식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기존 담론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파파카리시는 이를 ‘의미론적 주체성’(semantic agency)이라고 개념화하며, 정서적 공중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의미체계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Papacharissi, 2015). 이러한 영향력은 특정한 사건이나 분위기 속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정서적 공중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순간적인 감정의 결집과 흐름에 기반하며, 특정 이슈나 담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지면 함께 소멸되기도 한다. 이들의 담론은 감정, 사실, 의견, 드라마, 수행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전통적인 이성 중심의 공론장과는 다른 역동성과 복잡성을 보여준다.

정서적 공중은 또한 일상에 스며든 디지털 환경과의 끊임 없는 접속 상태 속에서 작동한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모지, 리트윗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적 흐름에 참여한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정서 교류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이처럼 정서적 공중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감정적 연결의 장으로 기능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공감하고 반응하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정서적 공중은 제도 바깥에서 작동하면서도, 감정을 매개로 사회적 상상력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힘은 주로 상징적이고 의미론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며, 감정의 흐름이 확산되고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될 때에만 보다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정서적 공중의 부상은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중

요한 도전도 함께 제기한다. 감정이 개인들의 정치적 행위와 공적 소통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던 공론장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감정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적 담론이 질적으로 약화하고, 공적 논의가 감정의 급류에 휘말리는 양상이 뚜렷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정서적 공중은 합리적 담론을 약화시킨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고전적인 공론장 이론에서는 합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다(이용호, 2025). 그러나 정서적 공중의 경우 정보, 의견, 감정이 서로 뒤섞여 있으며, 무엇보다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이 논리적 사고를 압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분노’ 담론이 증가하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며, 그 결과 분노, 공포, 도덕적 의로움과 같은 강한 정서를 유발하려는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Sobieraj & Berry, 2011). 이러한 감정적 자극은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메시지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나 건설적인 해결책 모색을 방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경쟁의 심화와 함께 뉴스조차도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정서적 공중은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에만 노출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s)과 에코 챔버(echo chambers) 현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유사한 견해를 가진 이들과만 소통하게 되어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이견에 대한 접촉이 줄어들면서 집단 간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러한 양극화 환경은 단순히 정보의 분절화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렬된 사용자 집단 내부에서 ‘알고리즘적 고립지’(algorithmic enclaves)를 형성한다. 알고리즘적 고립지는 사용자들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폐쇄적 감정 공동체로 분노, 피해의식, 의분(義憤) 등 정치적으로 동원 가능한 감정이 공유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감정적으로 유사한 사용자들이 서로의 신념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며, 반대 의견이나 복합적인 현실을 배제하거나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Lim, 2021).

특히, 우파 포퓰리즘 세력은 이러한 정서적 역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의 #120db 캠페인은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면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Lünenborg, 2020). 120 데시벨은 개인 안전 경보장치에서 나는 매우 큰 소리를 말하는데, 위협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고음을 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상징한다. 이 캠페인은 피해자처럼 보이는 여성들의 감정적인 증언 형식을 차용하면서, ‘백인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백인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화하여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인종차별적 담론을 정당화한다. 즉,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극우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담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을 강화하고, 소외된 타자를 위협 요소로 구성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유도한다. 정서적 공중의 특성상, 이러한 감정적 내러티브는 합리적 토론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원성과 관용, 비차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론장을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장악하는 구조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Lünenborg,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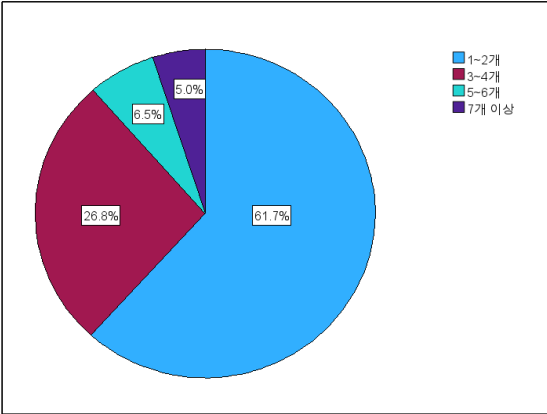
셋째, 정서적 공중은 허위정보와 조작된 콘텐츠의 확산에 취약하다. 감정적으로 구성된 공중은 진실 여부보다 감정적 공감과 반응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가짜뉴스는 낮은 사실성, 속이려는 의도, 그리고 진짜 뉴스 기사의 외관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며, 주로 독자의 믿음에 부합하는 감정적인 내용으로 클릭을 유도한다(김민정, 2019).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자들의 경제적 유인과 결합되어 급증했다.

정치 캠페인 역시 이러한 정서적 공중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의 심리적 성향을 파악한 뒤, 개별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식은 ‘마이크로타겟팅’(microtargeting) 전략의 핵심이다(Bartlett, Smith, & Acton, 2018).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캠페인에서 나타났듯이, 허위적이고 감정적인 메시지들은 유권자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이민자 혐오를 조장하는 데 활용되었다(Cummings, 2017). 이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적 동원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선거 결과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공감 미디어’(empathic media)와 ‘감정 AI’(emotional AI)의 발전은 이러한 감정 조작의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 기술들은 개인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감정에 대한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시민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동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적화된 데이터 폴로 변환될 위험을 내포한다(Bakir & McSta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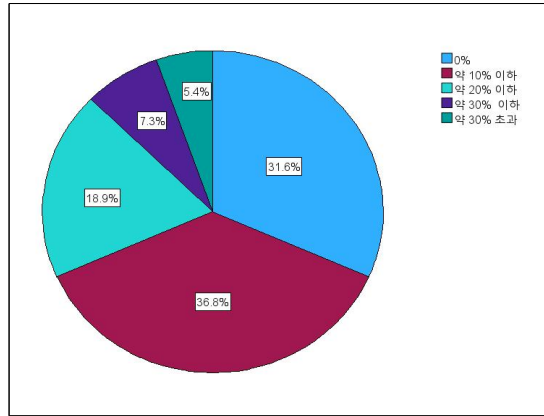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여론조사¹⁾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복수의 정치/시사 방송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대략 70% 가량이 동일한 이념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다고 답했다. 아래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보수집의 편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 담론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림 2-1]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 구독채널 수



1)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이 여론자료는 한국정치학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해 2025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되었다. 조사방법은 전국 단위로 해당 기관의 자체 구축 패넬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수는 1,000명이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2장 3절을 참조.

[그림 2-2] 이념성향이 다른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 구독채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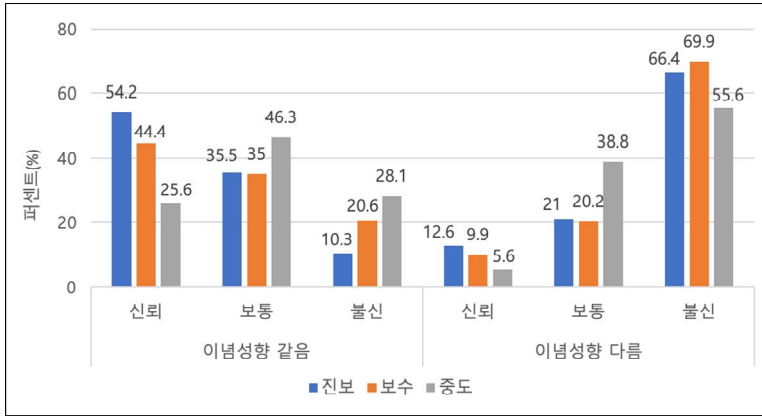


정보수집의 편향성과 함께 우려되는 또다른 지점은 정보출처의 이념성향에 따른 신뢰의 정도가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뚜렷한 정합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2-3]이 보여주는 것처럼 응답자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념성향과 동일한 성향의 유튜버 정치/시사 채널의 정보를 보다 신뢰하며, 이념성향이 다른 채널의 정보를 불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이념성향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압도적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 담론의 형성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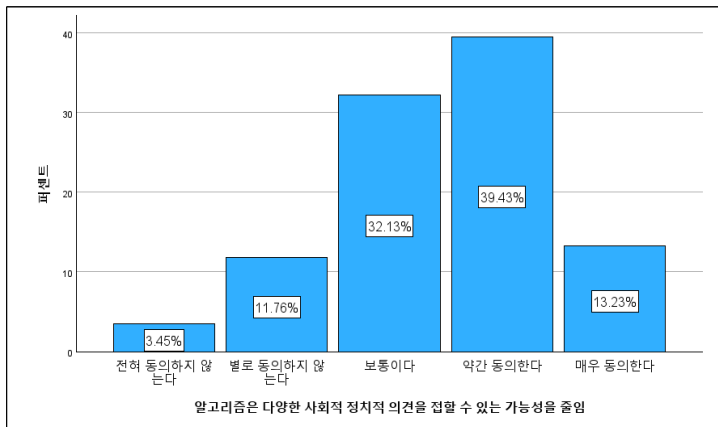
다만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 섞임 내용은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응답자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2-4]가 보여주는 것처럼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알고리즘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의견을 접할 가능성을 줄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이에 기반한 정서적 공중의 형성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원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

2) 더불어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하여 허위조작정보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국가기관이나 선거캠프의 댓글조작과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행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 압도적인 비율로 동의했다(각각 66.4%, 72.3%).

〔그림 2-3〕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유튜버 이념성향 같음 여부에 따른 신뢰 정도



〔그림 2-4〕 알고리즘과 정치적 다양성



결론적으로, 정서적 공중의 형성과 작동 방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내구성과 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감정이 공적 담론의 구성 요소로 인정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다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성과 증거 기반의 논의를 대체하거나, 정치적 조작과 극단주의의 도구로 악용될 경우, 정서적 공중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공중을 민주주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정치화를 단

순히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2. 정서적 공중과 음모론의 접점: 정서적 동원과 인지적 단순화

정서적 공중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감정적으로 연결된 개인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구성하는 집합적 주체로서, 전통적인 공론장 이론이나 시민참여 모델이 포착하지 못한 비제도적이고 미시적인 정치 실천을 드러낸다. 정서적 공중은 단순한 감정의 집합이 아니라 분노, 공포, 연민, 소외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자, 개인의 행위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동력이다. 무엇보다 정서적 공중은 민주주의가 지탱되는 감정적 기반을 되살린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지 합리적 담론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 감정적 인정, 공감적 연결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기존 민주주의 이론이 감정을 위협하거나 불완전한 요소로 치부하며 이성 중심의 참여 모델을 이상화해온 데 비해, 최근에는 감정이 단지 참여의 동기를 넘어 민주적 참여의 조건이자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자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정서적 공중이 형성하는 감정적 시민성은 기존의 제도적 참여 개념을 확장한다. 감정적 시민성은 ‘누가 말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느낄 수 있는가?’, ‘어떤 감정이 정치적으로 승인받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정치의 외부로 배제된 감정들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정체성 규범에 도전하고, 보다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감정의 정치화는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서적 공중은 연대와 저항의 감정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음모론의 확산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담론에서 음모론은 종종 비이성적 신념, 잘못된 정보, 인지적 편향의 산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론 중심의 접근은 음모론을 단지 사실 검증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무엇이 진짜이고 거짓인가’를 가르는 객관성의 문제로 한정한다. 그러나 정치사회학, 감정사회학, 미디어 연구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정서적 공중 개념을 통해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을 넘어서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음모론은 감정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표현

이자, 제도권 밖 시민성의 정서적 실천으로 읽혀야 하며, 단지 오류나 비합리의 결과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정치적 감정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 공중의 특징인 정서적 동원(affective mobilization)과 인지적 단순화(cognitive simplification)는 음모론의 확산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의 구조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음모론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행위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밀하게 공모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Uscinski & Enders, 2023). 그러나 최근 등장하는 음모론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과거의 음모론(예: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역사적 기원, 세계 지배 전략 등)이 나름의 설명구조와 내적 일관성을 지닌 ‘이론적 음모론’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조차 생략된 ‘이론 없는 음모론’(conspiracism without theory)이 확산되고 있다(de Zeeuw, 2024). 이러한 음모론은 감정적 표현과 반복적 수사에 기반하여,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느껴지는 진실’(truthiness)이 진정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대신한다.

음모론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의 정서를 자극하고, 정서적 동원을 통해 강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그 작동 방식은 첫째, 불안과 공포의 자극이다. 사회적 불안정, 경제 위기, 문화적 변화 등이 겹치는 불확실성 시기에는 음모론이 이러한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며 확산된다.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적’과 ‘공모자’를 설정함으로써, 음모론은 개인에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McLaughlin, 2014). 특히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음모론은 공동의 피해자 정체성을 부여하여 내부 결속을 유도한다(Uscinski & Parent, 2014; Radnitz, 2022).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백신 음모론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활용하여 백신 거부로 이어지게 했으며, 이는 경제 위기나 이민자 증가와 같은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Pirro & Taggart, 2023).

둘째, 분노와 불신의 결집이다. 음모론은 정부, 언론, 학계 등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이를 분노로 조직한다. ‘딥 스테이트’ 음모론은 정부 내 비가시적 세력의 지배를 상정하고(Pirro & Taggart, 2023), ‘가짜뉴스’ 담론은 주류 언론을 조작의 주체로 만들며 신뢰를 붕괴시킨다(Uscinski & Enders, 2023).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은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는 외부인’으로 설정하며, ‘마녀사냥’, ‘사기’, ‘탈취당한 권리’와 같은 자

극적인 언어로 감정을 유도한다(Radnitz, 2022; Pirro & Taggart, 2023). 이렇게 결집된 분노는 반체제적 행동이나 급진적 정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정체성 강화와 집단 결속이다. 음모론은 ‘우리 대 그들’의 이분법 구조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우리’는 순수하고 희생당한 집단이며, ‘그들’은 부패하고 공모하는 세력이라는 서사는 일종의 마니교적 세계관을 형성한다(Pirro & Taggart, 2023). 이러한 구도는 내부 결속과 외부 배제를 동시에 촉진하며, 포퓰리즘 정치의 정서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트럼프, 오르반, 차베스 등이 각각 ‘딥 스테이트’, 조지 소로스, 미국 정부를 공모자로 설정한 전략은 이러한 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적 동원은 음모론을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화된 실천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음모론은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강력한 매력을 지닌다. 특히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된 설명으로 치환하는 ‘인지적 단순화’는 음모론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게 얽힌 원인과 결과,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적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음모론은 이러한 복잡성을 무시하고 모든 사건을 소수의 악의적인 공모자에 의해 의도된 결과로 해석한다. 예컨대 경제 위기를 국제 은행가 집단의 공모로, 이민자 증가를 문화 대체 전략의 일부로 설명하는 식이다(Cibik & Hardoš, 2022). 이러한 단순화는 개인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매력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론 없는 음모론’은 이 단순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증거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이 반복적인 의혹 제기과 감정적 언어만으로 구성된 이 유형은 정보 교환보다는 감정적으로 강화된 신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de Zeeuw, 2024). ‘피자게이트’, ‘부정선거’ 서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대중의 인지를 점유하며,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Muirhead & Rosenblum, 2024). 이 과정에서 개인은 혼란 상태에 빠지고, 기존의 사실 판별 기준이 약화되며, 직감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진실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음모론은 또한 개인의 기존 신념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개인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세계관, 정치 성향, 가치관에 부합하는 설명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Uscinski & Enders, 2023), 이러한 현상은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의 대표적 형태에 해당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음모론을 더 잘 수용하는 경향은 이러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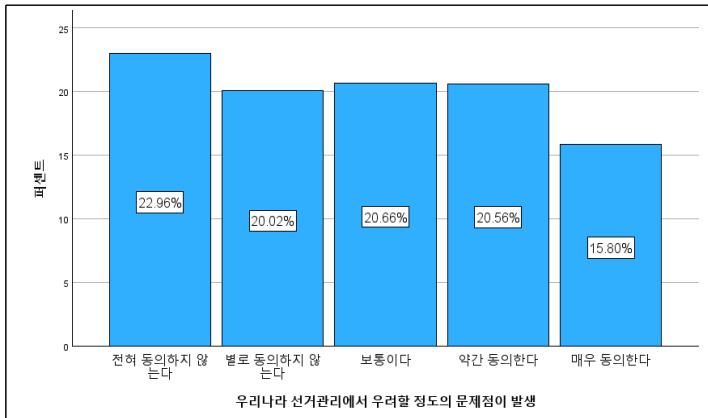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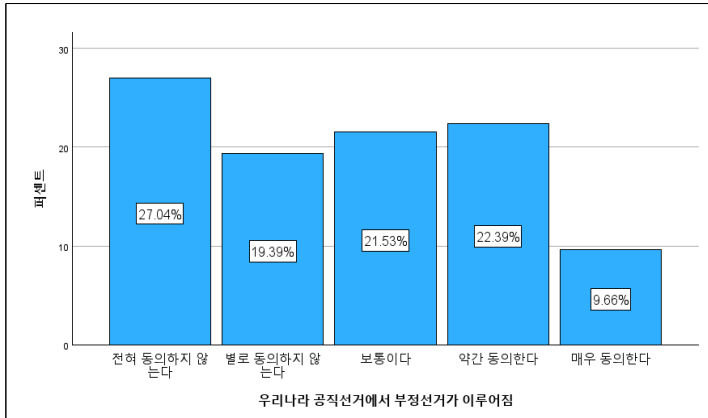
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는 공화당에 대한 음모론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믿는다는 연구는 개인의 인지적 편향이 어떻게 정치 엘리트와 미디어의 담론에 의해 강화되고 조직되는지를 보여준다(Radnitz, 2022).

이처럼 정서적 공중과 음모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동원과 인지적 단순화는 단지 개인의 정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사회적 결속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이성애 기반한 숙의를 통해 집합적 결정을 도출하는 정치적 형식을 지향한다. 그러나 음모론은 이러한 전체를 해체한다. 감정적 호소와 단순화된 서사에 기반한 담론은 사실 검증이나 논리보다는 ‘의분’과 ‘공감’에 의존하며(de Zeeuw, 2024), 정치적 반대자는 논쟁의 상대가 아니라 ‘적’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관용과 반론 수용, 상호 이해의 윤리가 해체되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Muirhead & Rosenblum, 2024).

또한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들—선거, 사법부,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딥 스테이트’ 담론은 정부의 합법적 기구를 음모의 주체로 만들고, ‘가짜뉴스’는 언론의 독립성을 해체하며, ‘부정선거’는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다. 트럼프의 2020년 ‘부정선거’ 주장은 수많은 시민이 민주적 결과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이는 실제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Muirhead & Rosenblum, 2024). 이처럼 음모론은 단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며 민주적 대표성과 법치의 정당성을 잠식한다(Mittendorf, 2023).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부정선거’에 관한 인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30%가 넘으며, “우리나라 선거관리에서 우려할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은 35%를 상회한다(그림 2-5)). 물론 대다수가 선거와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림 2-5] 부정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인식



정서적 공중이 형성하는 감정 공동체는 포괄적 연대를 낳기도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음모론은 정서적 실천을 통해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강화하며,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Pirro & Taggart, 2023). 이로 인해 공적 삶의 전제인 ‘공통된 현실 감각’(common reality sense)이 해체되고(Uscinski & Enders, 2023), 시민 간의 최소한의 상호 인정을 가능케 했던 기반이 무너진다. 유럽에서 확산된 ‘대체 이론’(replacement theory)—백인 인구가 이민자(특히 무슬림, 아프리카계, 라틴계 등 비백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배후에는 정치적·경제적 엘리트(때로는 유대인, 국제 기득권 세력 등)가 있다는 음모론—은 이민자를 사회의 본질을 위협하는 존재로 가정하며, 이는 인

종주의적 폭력이나 극우 테러와 결합되기도 한다(Pirro & Taggart, 2023).

이와 같이 정서적 공중과 음모론의 교차점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다층적인 위기를 드러낸다. 이 위기는 잘못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감정적 조건, 제도적 신뢰, 시민 간 연대를 구성하는 사회적 구조의 위기다. 따라서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단순한 정보의 교정이 아니라, 감정, 정체성, 소속감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성의 조건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억압된 감정의 민주적 조직화를 통해 가능하며,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이 대면한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3. 음모론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반감

음모론은 현재의 정치체제, 특히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느끼는 실망, 불신, 무력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감정적이며 구조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들은 음모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이며,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Pantazi, Papaioannou, & van Prooijen, 2022; Küppers, 2024).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민주주의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대표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에 실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며,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음모론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공모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믿는다. 그들에게는 투표가 유일한 참여 수단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현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속고 있다”, “정치는 연극이다”, “정치인은 모두 똑같다” 등과 같은 언어는 이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드러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Pantazi, Papaioannou와 van Prooijen(2022)의 경험적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그들은 음모론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정치, 선거, 의회 등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를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구조로 인식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체제와의 거리두기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엘리트끼리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

다고 느낀다. 이러한 불신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음모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국민투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시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에 매력을 느낀다. 이들에게는 정치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체제 불신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Küppers(2024)는 이러한 경향을 권력의 재위치화 욕구로 해석한다. 이는 엘리트가 빠진, 즉 시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정서를 말한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감정에서 출발하여, 엘리트가 없는 권력 구조를 이상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음모론은 불투명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³⁾

이와 동시에, 일부 음모론자들은 ‘스텔스 민주주의’(stealth democracy)—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참여 없이 전문가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맡기는 방식(Hibbing & Theiss-Morse, 2002)—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핵심은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는 감정이다.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시민들은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의민주주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든, 전문가 중심의 결정 구조든, 기술관료주의든 상관없다(Küppers, 2024). 즉,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체제의 형식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음모론적 신념은 단순히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참여해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 그리고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냉소주의적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Pantazi, Papaioannou, & van Prooijen, 2022). 이와 같은 감정 상태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정서적 거리두기를 낳는다.

이러한 정서 상태는 음모론의 서사 구조가 제공하는 “숨겨진 진실”, “은밀한 지식”에 매혹되는 심리적 기반이 된다. 음모론은 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대체적 설명 체계를 제공하며,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해준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무력감은 사회적 분노

3) 정부와 정치엘리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나라에서도 목격된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자 동의 비율은 거의 절반(47.2%)에 육박한다.

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경로가 형성된다.

Küppers(2024)의 연구는 일부 음모론자들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예: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선호도가 낮았지만, 음모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는 기존 정치체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며 두 번째로 선호가 높았다. 이는 이들이 정치적 엘리트층을 피할 수 있다면, 기술 기반 시스템도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이 기술 시스템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동화 시스템 역시 새로운 형태의 공모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음모론적 사고가 단순한 비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복잡하고 모순된 정서 지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모론적 신념은 민주주의를 아예 거부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부족에 대한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반응이다. 이들은 ‘누구에게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이 질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존 체도에 대해 지속적인 불신과 반감을 유지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념이 단순히 정보 부족이나 사실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에 대한 구조적 소외감과 깊은 정서적 실망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음모론을 단순히 교정 가능한 비이성적 사고로 취급하는 접근은, 그 기저에 있는 감정적 불만과 제도적 소외를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음모론적 신념에 대응하려면, 단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이 정치체제에서 실제로 대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정치가 실질적으로 변화 가능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구조를 재구성하고, 더 많은 참여 기회와 감정적 유대, 그리고 정치적 존중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음모론적 사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정치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중시적 수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분극화

1.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사례 도출

이 절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이 담론 분극화를 유발하는 현상과 사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한국 사회의 분극화는 이념적 경제적 차원의 양극화에 정서적 차원의 양극화가 교차하는 중층적 구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는 진영화된 정치 엘리트와 온라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의해 적대적 공생의 핵심 동력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축으로 다수결주의가 작동하는 구조에서 대통령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 등 대의민주주의 전반이 형해화되며 전 사회적 분극화가 촉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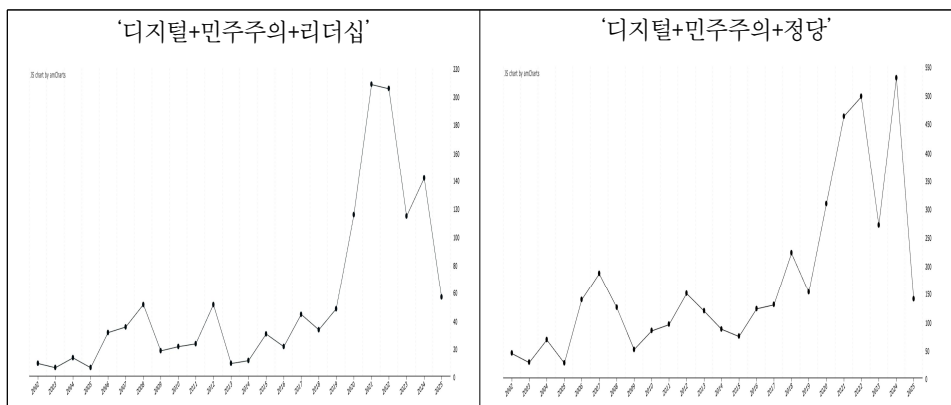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혹은 과도적이라기보다 2000년대 정치 진영 갈등이 사회정치적 위기를 심화하는 흐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침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웹 기반의 정보화를 넘어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디지털 전환기에 그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는 전체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했고, 같은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도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미국과 더불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23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보고서는 28개의 대상국 중 국민이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아울러 2022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약 77%가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응답했다. 202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flawed democracy)로 강등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 원인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정당 간 뿌리 깊은 갈등,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로 지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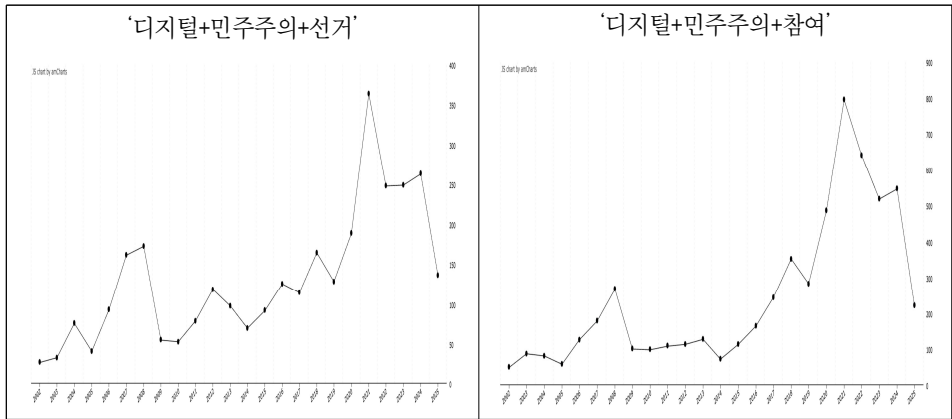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온라인을 매개한 저널리즘 빅데이터 추세분석과 대표기사 내용분석을 통해 디지털 전환기(digital transformation era)의 정치 양극화 이슈를 고찰하고 문제 사례를 탐구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기사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서 23년간(2002년 3월~2025년 5월)의 네 개의 연관어 조합의 언론보도 추세분석, 의

미연결망 분석 및 대표기사 분석을 수행하여 정치 양극화 이슈와 사례들을 도출한다. 연관어 조합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상수로 ‘리더십, 정당, 선거, 참여’를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그림 2-6]의 그래프들은 2000년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대의정치와 시민관여의 주요 기제-‘리더십, 정당, 선거, 참여’-가 민주주의와 함께 등장하는 언론보도 추이를 보여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그래프들은 단기적으로 등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미디어의 정치적 활용이 증대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후 미디어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media) 및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수 있다. 둘째, 공직선거 중 특히 대통령 선거에 근접해가는 시기에 기사량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권력 경쟁 시기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치인, 정당, 유권자의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시사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행위자들이 탈경제적으로 참여하는 유력한 선거캠페인 도구로 정착되었다. 셋째, 디지털 전환기가 본격화된 2020년대 전후로 기사량이 폭증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 원인은 정치적 기술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정치 양극화를 비약적으로 촉진한 정치 진영 갈등의 확산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유튜브로 운위되는 글로벌 플랫폼이 디지털 생태계를 재구조화하며 정치적 활용이 비약적으로 고양된 점을 지목할 수 있다.

[그림 2-6] 디지털 민주주의 연관어 언론기사량 추이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동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로 귀결된다. 즉 민주주의의 성쇠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부상하고, 디지털 미디어는 그 이슈들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과급했는지 탐문할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네 범주(리더십, 정당, 선거, 참여)의 언론보도 추세의 특징을 확인한 후, 범주 별로 100 개씩의 대표기사(총 400개)를 추출하여 의미연결망 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⁴⁾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빅카인즈 뉴스기사 분석은 추세분석의 장점을 가지지만, 104개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 기사를 추출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 500여 개의 언론사 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를 대표 기사 출처로 활용하였다. 첨언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국내 포털 뉴스 이용자의 93.5%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에서 해당 범주를 다룬 기사들을 ‘관련도’(relevance) 순으로 검색하여 대표 기사를 추출하였다. 네이버 뉴스는 관련도순 정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연관성, 시의성, 기사의 품질’을 고려하여 검색 키워드에 적합한 기사를 추천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pr-processing) 과정에서 파이썬(Python)이 제공하는 Okt(Open Korean Text)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서 명사를 추출하는 단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에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 상위 50개 단어 쌍을

4) 대표 기사 세트 목록을 부록에 수록하였음.

합을 통해서 노드가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계량화한다. 둘째,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연결망 내에서 한 노드가 담당하는 중개자(broker) 역할의 정도로 중심성을 측정한다. 셋째,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경로의 거리를 측정해서 중심성을 계량화한다. 넷째,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특정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을 가중치에 반영하는 지표로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노드가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김우주 2015; 장우영 2025).

4개 범주-리더십, 정당, 선거, 참여- 대표기사 세트의 중심성지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중심성이 큰 15개의 단어만 아래 표들에 제시했으며, 0.4 이상의 중심성 값은 굵게 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민주주의+리더십’ 대표기사 세트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사의 의미와 맥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은 다른 단어들과의 동시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사 내용을 구성하는 매개자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중요도가 큰 단어들과도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다. 대통령 외에 ‘탄핵, 비상계엄’의 높은 연결중심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비상계엄 사건을 연상케 하는 ‘헌재, 국회, 계엄’ 등이 포함된 전체 단어의 근접중심성 값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단어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기사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2-1〉 ‘디지털+민주주의+리더십’ 대표기사 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1	대통령	0.8750	0.6546	0.8889	0.5185
2	탄핵	0.5000	0.1745	0.6667	0.3786
3	국민	0.4583	0.0815	0.6316	0.3707
4	비상계엄	0.2500	0.0870	0.5581	0.2518
5	권한	0.1667	0.0531	0.5333	0.1543
6	후보	0.1667	0.0024	0.5217	0.2121
7	윤석열	0.1667	0.0000	0.5333	0.2252
8	헌재	0.1250	0.0000	0.5106	0.1561
9	대표	0.1250	0.0000	0.5106	0.1879
10	결정	0.1250	0.0000	0.5106	0.1561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11	대선	0.1250	0.0000	0.5000	0.1632
12	국회	0.1250	0.0000	0.5106	0.1691
13	대행	0.1250	0.0302	0.5106	0.1054
14	계엄	0.0833	0.0000	0.5000	0.1329
15	심판	0.0833	0.0000	0.5000	0.1329

다음으로 ‘디지털+민주주의+정당’ 대표기사 세트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사의 의미와 맥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다른 단어들과의 동시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사 내용의 게이트키퍼로 역할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대표를 뜻하는 ‘대표’의 연결중심성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정치팬덤 현상을 시사하는 ‘개딸, 강성,

〈표 2-2〉 ‘디지털+민주주의+정당’ 대표기사 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1	민주당	0.9048	0.6127	0.9130	0.4677
2	대표	0.6190	0.2361	0.7241	0.3976
3	이재명	0.5238	0.0702	0.6774	0.3719
4	정치	0.2857	0.0063	0.5833	0.2657
5	개딸	0.2857	0.0091	0.5833	0.2628
6	강성	0.2381	0.0044	0.5676	0.2032
7	국민	0.1905	0.0000	0.5526	0.2100
8	지지자	0.1905	0.0012	0.5526	0.2013
9	당원	0.1905	0.0012	0.5526	0.2013
10	팬덤	0.1905	0.0000	0.5250	0.1912
11	지층	0.1905	0.0016	0.5526	0.1861
12	수박	0.1429	0.0000	0.5385	0.1729
13	비명	0.1429	0.0000	0.5385	0.1729
14	당내	0.0952	0.0000	0.5000	0.1173
15	체포	0.0952	0.0000	0.4375	0.0646

팬덤, 수박'이 포함된 전체 단어의 근접중심성 값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단어들이 특정 정보를 포함한 기사의 맥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서 '디지털+민주주의+선거' 대표기사 세트에서는 '조작'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작'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사의 의미와 맥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응원'은 다른 단어들과의 동시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사 문맥의 허브로 역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응원, 여론, 가짜, 뉴스'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포털, 대선, 댓글, 드루킹'이 가까운 거리에서 기사의 특정 정보를 구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이는 선거캠페인에서 온라인을 매개한 여론조작 사건을 시사한다.

〈표 2-3〉 '디지털+민주주의+선거' 대표기사 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1	조작	0.4762	0.3457	0.6000	0.4644
2	응원	0.3810	0.4452	0.5526	0.3109
3	여론	0.3333	0.1744	0.5526	0.3592
4	가짜	0.2857	0.0862	0.4667	0.3188
5	뉴스	0.2857	0.1106	0.4773	0.3417
6	포털	0.2857	0.2378	0.5526	0.3481
7	중국	0.2381	0.1000	0.3962	0.1174
8	게임	0.1905	0.0071	0.3889	0.1138
9	축구	0.1429	0.0000	0.3818	0.1013
10	대선	0.1429	0.0000	0.4118	0.2102
11	선거	0.1429	0.0024	0.4200	0.2135
12	댓글	0.1429	0.0048	0.4038	0.1763
13	국민	0.1429	0.0952	0.3500	0.1279
14	드루킹	0.0952	0.0000	0.3889	0.1197
15	아시안	0.0952	0.0000	0.3684	0.0794

마지막으로 '디지털+민주주의+참여' 대표기사 세트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사의 의미와 맥락

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은 다른 단어들과의 동시출현빈도가 가장 높으며, 기사 내용의 게이트키퍼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의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기사에서 ‘탄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외에 태극기집회를 시사하는 ‘집회, 태극기, 보수’가 포함된 전체 단어의 근접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단어들이 특정 정보를 포함한 기사의 맥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의미연결망 분석만으로 태극기집회가 어떤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표 2-4〉 ‘디지털+민주주의+참여’ 대표기사 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1	대통령	0.9259	0.7659	0.9310	0.5401
2	탄핵	0.5556	0.1705	0.6750	0.4233
3	국민	0.2963	0.0242	0.5745	0.2873
4	집회	0.1852	0.0028	0.5400	0.2211
5	윤석열	0.1481	0.0009	0.5294	0.2139
6	반대	0.1111	0.0000	0.5192	0.1721
7	대표	0.1111	0.0014	0.5094	0.1345
8	태극기	0.1111	0.0000	0.5192	0.1721
9	상황	0.1111	0.0000	0.5192	0.1817
10	대한민국	0.1111	0.0000	0.5192	0.1817
11	민주당	0.1111	0.0000	0.5192	0.1817
12	보수	0.0741	0.0000	0.5094	0.1400
13	국가	0.0741	0.0000	0.5000	0.1202
14	권한	0.0741	0.0741	0.5094	0.0802
15	국회	0.0741	0.0000	0.5094	0.1400

이상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토대로 대표기사 세트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선정하였다. 대표기사 세트는 약 10년의 기간을 포괄하였으며 최근에 가까울수록 기사 비중이 큰 특징을 보였다. 이는 언론기사 추세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치진영갈등의 악화와 정보화 환경의 고도화를 반영한다. 내용

분석의 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했다. 다음으로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연관 사례들을 추적하였다. 내용분석 결과는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와 거의 맥을 같이 했다. 즉 비상계엄 사건, 팬덤정치, 드루킹 사건, 태극기집회가 각 범주를 대표하는 사례들로 확인되었다. 덧붙이면 태극기집회의 경우 대통령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론이 중심 이슈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이슈는 이미 비상계엄 사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정선거론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2.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분석: 구조와 특성

본 장에서는 상기의 사례들에 대하여 플랫폼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담론이 조성되고 파급되었는지 고찰한다. 나아가 동영상 내용분석을 통하여 메시지 동원과 분절적 상호작용 방식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분석은 유튜브 뉴스·정치채널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는 플레이보드(유튜브 트래픽 집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채널을 선정하였다. 우선 2025년 5월 기준으로 인기 및 조회수 상위 100개의 뉴스·정치채널을 선정하였다. 덧붙이면 다양한 유형의 채널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담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 채널을 20개로 한정하였다. 참고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API를 활용하여 이용자 반응도-구독자수, 동영상수, 조회수-를 집계하였다. 뉴스·정치채널 목록은 <표 2-5>에 정리되어 있으며,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언론 채널은 격차가 커서 20개만 선정하였다.

〈표 2-5〉 분석 대상 유튜브 뉴스·정치채널의 일반적 특성

(단위: 월, 명, 개, 회)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1	MBCNEWS	언론	진보	2006.11.05	222	5,790,000	321,871	23,129,300,584
2	YTN	언론	중립	2013.05.23	144	5,060,000	873,119	16,998,765,855
3	SBS 뉴스	언론	중립	2014.05.02	132	4,910,000	288,525	14,456,609,425
4	JTBC News	언론	진보	2012.02.21	159	4,590,000	252,632	14,255,132,180
5	KBS News	언론	중립	2013.08.06	141	3,340,000	380,535	8,922,618,522
6	채널A News	언론	보수	2012.05.21	156	3,210,000	136,510	6,004,128,903
7	뉴스 TVCHOSUN	언론	보수	2012.08.23	153	2,850,000	144,218	4,103,101,749
8	매불쇼	인플루 언서	진보	2018.11.26	78	2,640,000	2,879	1,714,530,173
9	오마이TV	언론	진보	2011.04.13	169	2,480,000	57,314	3,007,072,975
10	MBN News	언론	보수	2006.03.05	230	2,450,000	225,508	3,168,613,976
1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플루 언서	진보	2022.10.17	31	2,200,000	1,525	1,198,814,558
12	연합뉴스TV	언론	중립	2015.01.05	124	2,010,000	611,872	3,200,666,033
13	뉴스타파 Newstapa	언론	진보	2012.01.06	160	1,780,000	5,318	612,157,617
14	MBC 라디오 시사	언론	진보	2017.05.26	96	1,750,000	25,998	1,888,076,028
15	펜앤마이크 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2.02.13	159	1,750,000	3,716	490,732,764
16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인플루 언서	진보	2011.01.14	172	1,700,000	1,699	360,590,841
17	조선일보	언론	보수	2012.01.31	160	1,690,000	22,320	1,643,693,315
18	배승희 변호사	인플루 언서	보수	2012.03.21	158	1,640,000	173	23,359,153
19	이재명	정치인	진보	2014.05.14	132	1,620,000	3,816	327,937,492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2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론	진보	2013.02.20	147	1,580,000	18,692	1,234,021,878
21	서울의소리	인플루 언서	진보	2010.01.07	184	1,550,000	32,493	1,503,884,631
22	신인균의 국방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8.10.2	79	1,510,000	3,764	1,094,781,417
23	스픽스	인플루 언서	진보	2022.05.24	36	1,470,000	21,630	1,369,395,268
24	채널A 뉴스TOP10	언론	보수	2014.02.26	135	1,390,000	29,767	1,529,139,446
25	팩트TV NEWS	인플루 언서	진보	2013.01.15	148	1,330,000	16,504	944,266,059
26	고성국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8.01.26	88	1,280,000	12,325	699,983,724
27	스브스뉴스	언론	중립	2015.01.26	124	1,260,000	6,692	1,843,545,892
28	시사포커스 TV	언론	진보	2018.07.20	82	1,210,000	65,099	1,579,423,951
29	성창경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2.09.27	152	1,170,000	27,208	2,344,739,706
30	새날	인플루 언서	진보	2014.08.14	129	1,130,000	12,636	1,016,476,253
31	열린공감TV	인플루 언서	진보	2019.01.21	76	1,130,000	2,227	332,498,280
32	머니투데이 방송	언론	중립	2005.11.17	234	1,120,000	90,975	1,718,346,834
33	뉴스데일리 베스트	인플루 언서	보수	2013.4.28	145	974,000	4,114	299,403,401
34	이봉규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8.9.1	80	972,000	13,412	843,325,643
35	KNN NEWS	언론	진보	2013.01.17	148	946,000	121,546	2,401,588,757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36	뉴스토마토	언론	진보	2018.08.29	81	938,000	41,010	491,631,698
37	젊은시각	인플루 언서	보수	2011.1.2	172	895,000	3,348	697,703,888
38	GROUND C	인플루 언서	보수	2020.04.23	61	871,000	1,157	145,214,239
39	김용민TV	인플루 언서	진보	2017.09.27	92	850,000	10,484	559,547,372
40	폼생폼사	인플루 언서	보수	2013.12.14	137	795,000	10,701	572,446,429
41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인플루 언서	진보	2012.12.22	149	762,000	2,222	362,650,806
42	송국건의 혼술	인플루 언서	보수	2019.03.19	74	733,000	8,786	526,024,697
43	어벤져스 전략회의	인플루 언서	보수	2021.01.13	52	728,000	11,661	558,657,331
44	장운선의 취재편의점	인플루 언서	진보	2023.09.30	20	710,000	12,229	354,897,141
45	정치과랑새	인플루 언서	진보	2015.5.19	120	690,000	300	118,467,969
46	BJ톨	인플루 언서	보수	2017.02.08	99	686,000	6,872	597,499,914
47	서정욱TV	인플루 언서	보수	2024.01.12	16	659,000	4,690	366,790,300
48	사장남천동	인플루 언서	진보	2022.11.07	30	644,000	507	147,773,195
49	박시영TV	인플루 언서	진보	2020.4.28	61	626,000	1,948	220,353,513
50	손상대TV2	인플루 언서	보수	2013.8.26	141	616,000	3,561	246,833,054
51	샤인트뷰	인플루 언서	보수	2018.03.20	86	611,000	2,112	253,183,182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52	황기자	인플루 언서	진보	2016.04.19	109	574,000	4,723	713,473,182
53	최병묵의 FACT	인플루 언서	보수	2019.7.28	70	567,000	5,015	486,848,880
54	정광용 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8.8.20	81	550,000	8,462	483,682,380
55	정치 읽어주는 여자	인플루 언서	진보	2023.09.09	20	530,000	2,235	683,478,567
56	편들어주는 파생 방송	인플루 언서	진보	2021.01.26	52	483,000	6,601	1,281,689,460
57	텔레민주	정치인	진보	2018.10.30	79	471,000	6,567	114,100,734
58	정치쉽단	인플루 언서	진보	2019.1.2	76	471,000	1,211	158,347,647
59	정치창	인플루 언서	진보	2024.03.24	14	448,000	1,104	496,338,294
60	뉴탐사	인플루 언서	진보	2023.10.07	19	418,000	3,702	206,831,748
61	축볼행동tv	인플루 언서	진보	2023.01.13	28	400,000	7,140	205,681,564
62	이슈카툰	인플루 언서	진보	2022.05.30	36	385,000	2,601	1,164,968,548
63	잼잇당	인플루 언서	진보	2022.10.10	31	383,000	1,189	462,151,734
64	웁소TV	인플루 언서	진보	2012.08.14	153	370,000	5,493	835,092,610
65	전여옥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8.07.13	82	368,000	5,177	110,933,075
66	최경영TV	인플루 언서	진보	2023.11.21	18	350,000	621	44,300,291
67	유재일	인플루 언서	보수	2012.9.29	152	349,000	9,321	203,004,664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68	무적소년공	인플루 언서	진보	2024.08.16	9	331,000	1,809	708,918,773
69	뉴스엔진 정답은없다	인플루 언서	보수	2024.02.21	15	319,000	4,965	54,221,313
70	왔다정치	인플루 언서	진보	2024.02.04	15	317,000	3,780	706,991,546
71	누리PD-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2.8.29	153	315,000	2,692	113,788,754
72	이마까TV	인플루 언서	진보	2018.11.09	78	314,000	665	632,366,507
73	미디어쇼츠	인플루 언서	진보	2023.05.08	24	268,000	10,275	649,101,700
74	까발려TV	인플루 언서	진보	2024.06.13	11	266,000	1,273	243,526,938
75	애국청년 김태풍	인플루 언서	진보	2024.11.11	6	256,000	875	397,968,601
76	파란교실	인플루 언서	진보	2018.04.30	85	236,000	1,606	655,972,676
77	불타는 진보청년	인플루 언서	진보	2023.2.28	27	219,000	1,474	386,429,605
78	이준석	정치인	보수	2024.06.12	11	217,000	751	143,676,447
79	일류	인플루 언서	진보	2019.12.14	65	197,000	1,779	399,907,603
80	민주픽	인플루 언서	진보	2013.04.08	145	184,000	890	635,679,213
81	트렌드쇼츠	인플루 언서	진보	2024.11.15	6	165,000	1,795	468,054,196
82	정치일주	인플루 언서	진보	2023.06.04	23	156,000	217	351,138,654
83	정치넘버원	인플루 언서	진보	2022.08.17	33	148,000	847	401,796,381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84	정치파일	인플루 언서	진보	2024.08.29	9	138,000	464	177,520,561
85	리업유통	인플루 언서	보수	2025.01.10	4	133,000	1,271	137,225,299
86	우파청년 이용민	인플루 언서	보수	2024.06.18	11	130,000	1,407	110,833,503
87	예능하나	인플루 언서	보수	2025.03.21	2	116,000	17	1,433,876
88	투게더	인플루 언서	진보	2024.12.04	5	111,000	1,523	219,159,927
89	옴은손TV	인플루 언서	보수	2019.10.24	67	107,000	1,498	77,419,143
90	건정소	인플루 언서	보수	2025.02.07	3	104,000	1,194	92,819,999
91	정치의길은 희망	인플루 언서	진보	2024.12.28	5	100,000	762	321,216,667
92	정알못NEWS	인플루 언서	진보	2011.6.9	167	100,000	568	102,756,146
93	이슈방송국	인플루 언서	진보	2024.10.15	7	94,200	1,259	175,786,278
94	어준이뉴스	인플루 언서	진보	2024.10.22	7	88,200	1,372	117,876,614
95	지지피아	인플루 언서	진보	2012.3.23	158	78,600	2,453	114,781,543
96	세상경사	인플루 언서	진보	2025.1.4	4	51,800	2,910	88,432,345
97	국민 회초리	인플루 언서	진보	2023.3.8	26	51,700	570	36,117,447
98	정치브리프	인플루 언서	진보	2024.08.22	9	51,400	1,282	124,819,398
99	미디어 디코더	인플루 언서	진보	2025.03.04	2	51,000	482	84,632,990

No.	채널명	유형	이념	개설일	개월 수	구독자수	동영상 수	조회수
100	빛나는 민주생활	인플루언서	진보	2025.1.11	4	41,500	405	96,500,879
전체					83.7	978,684	40,865	1,491,601,929

* 각 지표의 값은 채널 개설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의 수치가 누적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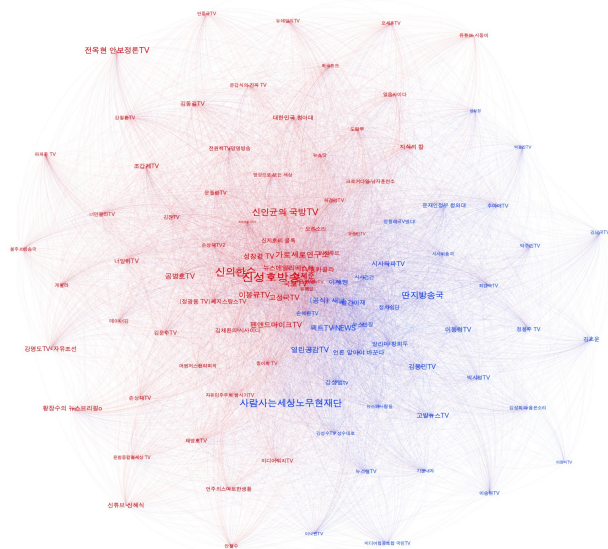
첫째, 뉴스·정치채널은 크게 언론, 인플루언서, 정치인(정당) 채널들로 구성되었다. 언론 채널은 동일 언론이 복수의 채널을 운용할 경우 최대 2개까지만 선정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인플루언서 채널수(77개)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채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급격히 증가했다. 주요 요인으로 유튜브 중심의 뉴미디어 생태계 재편, 정치진영갈등의 심화에 따른 온라인 패권 다툼, 슈퍼챗과 후원금, 회비 등을 통한 상업성 추구가 꼽힌다(장우영 2023, 장우영·송준모 2022). 반면 정치인/정당 채널수(3개)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93.0%(279명)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22대 총선 당선자 중 78.3%(235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장우영 외; 주간경향 2024.5.20.)는 점을 참고하면, 정치인 유튜브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둘째, 뉴스·정치채널은 평균 978,684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였다. 'MBCNEWS'(5,790,000명)의 구독자수가 가장 많았고, '빛나는 민주생활'(41,500명)이 가장 적었다. 그리고 평균 동영상수는 40.865개였다. 'YTN'(873,119개)의 동영상 수가 가장 많았으며, '예능하나'(17개)가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평균 조회수는 1,491,601,929회였다. 조회수가 가장 많은 채널도 'MBCNEWS'(23,129,300,584회)였으며, '예능하나'(1.433.876)가 가장 적었다.

셋째, 채널간 이념 지향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채널은 진보 60%, 보수 34%, 중립 6%의 분포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언론은 보수, 중립, 진보 채널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그리고 게시된 동영상은 유튜브용으로 별도 제작되기보다 기 송출된 프로그램이 재방영되는 양식을 띠었다. 즉 게이트키퍼(gate-keeping)와 저널리즘(journalism) 준칙에 의거해 동영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편향성 시비가 크지 않았다. 반면 인플루언서 채널은 이념적 선명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특정 정당과 정파 집단과의 정서적 실체적 유착이 노출되었다. 덧붙이면 소수를 제외하고 이들은 양대 정당의 주류 정파-친명, 친윤 등-와의

일체감을 추구하며 반대 정파-비명, 비윤 등-를 적대시하였다. 이들은 대개 전업 유튜브로 활동하는 한편, 이념적 동질성을 가진 이용자 집단과 동영상 매개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현실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동질적 정보 소비와 편향 동원을 통한 정치 양극화를 촉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는 정치 인플루언서 채널의 극심한 양극화를 입증하고 있다.

〔그림 2-8〕 정치 인플루언서 채널간 댓글 연결망



실제로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수행하여 유튜브 채널 유형과 이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수, 중립, 진보 성향이 혼재하고 있는 언론 유형과 달리 인플루언서 유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채널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플루언서 유형 채널(77%)이 모두 뚜렷한 정파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높은 영향력에 비해 게이트 키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플루언서 유형의 뉴스·정치 유튜브 채널이 이용자들 간의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2－6〉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유형 및 이념별 상관관계

유형	이념			
	보수	중립	진보	
언론	6	6	8	20
인플루언서	27	0	50	77
정치인	1	0	2	3
	34	6	60	0

주: Chi-squared statistic =30.1556, Degrees of freedom=4, p-value=0.000***

3.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동영상 분석: 이슈입장과 연결망 구조

이 장에서는 우선 각 사례별 동영상의 생산과 반응 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분석유목(coding scheme)에 의거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동영상을 통해 발화된 이슈 입장(issue position)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채널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100개의 분석 대상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API를 활용해서 제목과 동영상 설명란에 사례별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동영상을 제거한 후 이용자 반응을 측정하고 상기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비상계엄 사건

100개의 뉴스·정치채널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검색한 결과, 77%(77개)의 채널이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100%(20개), 인플루언서 채널 71.4%(55개), 정치인 채널 66.6%(2개) 순이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립 채널 100%(20개), 진보 채널 77.4%(48개), 보수 채널 67.6%(23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7개 채널에서 4,859개의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60%(2,914개), 인플루언서 채널 39.7%(1,928개), 정치인 채널 0.3%(17개) 순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진보 채널 63.7%(3,096개), 보수 채널 18.4%(895개), 중립 채널 17.9%(868개) 순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표 2-7〉 채널 유형별 · 이념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6 (100.0%)	6 (100.0%)	8 (100.0%)	17 (63.0%)	38 (76.0%)	0 (0.0%)	2 (100.0%)
동영상 미게시	0 (0.0%)	0 (0.0%)	0 (0.0%)	10 (37.0%)	12 (24.0%)	1 (100.0%)	0 (0.0%)
총계	6 (100.0%)	6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4,859개 동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180,542회, 평균 좋아요수는 9,337개, 평균 댓글수는 923개였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동영상을 게시한 채널은 스피크스(418건)였으며 가장 높은 평균 조회수를 기록한 채널은 GROUND C(3,987,798회)였다. GROUND C는 평균 좋아요수(125,517)와 평균 댓글수(31,992)가 가장 높은 채널이다. GROUND C 채널에서 게시한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수가 1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생태계에서 동영상 게시 횟수가 이용자 반응성 지표-조회수, 좋아요수, 댓글수와 같은 -와 비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표 2-8〉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단위: 개, 회)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1	MBCNEWS	언론	진보	219	4,979	265,339	721
2	YTN	언론	중립	263	643	75,489	184
3	SBS 뉴스	언론	중립	228	521	39,017	250
4	JTBC News	언론	진보	246	2,615	130,667	697
5	KBS News	언론	중립	206	283	25,255	181
6	채널A News	언론	보수	224	2,607	69,379	460
7	뉴스 TVCHOSUN	언론	보수	200	2,297	47,216	252
8	매블쇼	인플루언서	진보	1	37,372	923,030	3,710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9	오마이TV	언론	진보	145	1,695	58,008	271
10	MBN News	언론	보수	165	251	15,735	88
1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플루 언서	진보	4	27,137	572,898	794
12	연합뉴스TV	언론	중립	243	407	19,376	62
13	뉴스타파	언론	진보	4	15,447	519,772	1,191
14	MBC 라디오 시사	언론	중립	77	4,123	156,546	329
15	펜앤마이크 TV	인플루 언서	보수	1	9,553	151,557	1,662
16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인플루 언서	진보	4	11,276	311,346	494
17	조선일보	언론	보수	34	5,240	132,609	379
18	이재명	정치인	진보	2	6,569	25,545	210
1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론	진보	53	2,555	157,198	573
20	서울의소리	인플루 언서	진보	76	1,592	13,737	22
21	스픽스	인플루 언서	진보	418	4,765	89,015	92
22	채널A 뉴스TOP10	언론	보수	24	2,358	62,129	1,058
23	팩트TV NEWS	인플루 언서	진보	18	3,841	189,809	1,562
24	고성국TV	인플루 언서	보수	48	9,439	75,209	620
25	스브스뉴스	언론	중립	8	6,305	327,915	1,054
26	시사포커스 TV	언론	보수	37	1,276	18,946	311
27	성창경TV	인플루 언서	보수	13	22,329	148,107	2,572
28	새날	인플루 언서	진보	5	14,975	165,053	205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29	열린공감TV	인플루언서	진보	35	11,348	157,211	608
30	머니투데이 방송	언론	중립	18	287	17,837	45
31	KNN NEWS	언론	진보	377	349	12,497	41
32	뉴스토마토	언론	진보	143	1,240	32,071	48
33	GROUND C	인플루언서	보수	1	125,517	3,987,798	31,992
34	김용민TV	인플루언서	진보	11	755	9,886	32
35	폼생폼사	인플루언서	보수	2	2,823	55,271	330
36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인플루언서	진보	7	15,026	214,064	469
37	송국건의 혼술	인플루언서	보수	7	10,103	96,475	651
38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플루언서	진보	27	2,201	40,881	22
39	정치파랑새	인플루언서	진보	2	8,453	110,137	222
40	BJ톨	인플루언서	보수	15	36,418	249,846	1,331
41	서정욱TV	인플루언서	보수	6	12,439	65,023	1,447
42	박시영TV	인플루언서	진보	4	5,139	53,288	42
43	황기자	인플루언서	진보	1	7,783	67,053	271
44	최병목의 FACT	인플루언서	보수	7	13,283	114,057	1,105
45	정광용 TV	인플루언서	보수	7	7,644	56,376	335
46	정치 읽어주는 여자	인플루언서	진보	1	28,576	303,777	351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47	편들어주는 파생 방송	인플루 언서	진보	9	3,784	90,953	56
48	델리민주	정치인	진보	15	1,437	8,763	44
49	뉴탐사	인플루 언서	진보	44	4,633	28,972	53
50	축볼행동tv	인플루 언서	진보	14	10,148	168,798	294
51	이슈카툰	인플루 언서	진보	75	24,380	429,069	931
52	옴소TV	인플루 언서	진보	30	10,308	138,890	283
53	전여옥TV	인플루 언서	보수	5	7,798	39,395	497
54	최경영TV	인플루 언서	진보	3	6,273	71,445	133
55	유재일	인플루 언서	보수	1	1,030	10,174	24
56	무적소년공	인플루 언서	진보	6	26,506	403,276	1,742
57	뉴스엔진 정답은없다	인플루 언서	보수	20	2,194	11,218	72
58	왔다정치	인플루 언서	진보	2	22,722	341,136	929
59	누리PD-TV	인플루 언서	보수	8	6,638	37,791	628
60	이마까TV	인플루 언서	진보	1	37,821	531,129	3,981
61	미디어쇼츠	인플루 언서	진보	367	3,866	64,942	204
62	까발러TV	인플루 언서	진보	3	2,279	31,735	15
63	애국청년 김태풍	인플루 언서	진보	88	14,196	191,947	432
64	불타는 진보청년	인플루 언서	진보	127	2,520	154,943	263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65	트렌드쇼츠	인플루언서	진보	19	525	7,773	11
66	정치일주	인플루언서	진보	1	550	20,036	15
67	정치파일	인플루언서	진보	6	26,346	525,688	1,009
68	우파청년 이용민	인플루언서	보수	9	3,735	21,356	28
69	옴은손TV	인플루언서	보수	4	757	40,766	5
70	건정소	인플루언서	보수	8	865	6,690	5
71	정치의길은 희망	인플루언서	진보	1	-	1,311	3
72	정알못NEWS	인플루언서	진보	1	18	926	1
73	이슈방송국	인플루언서	진보	310	3,362	60,026	73
74	어준이뉴스	인플루언서	진보	6	1,243	14,078	6
75	지지피아	인플루언서	진보	5	195	2,953	3
76	세상경사	인플루언서	진보	28	374	3,740	4
77	정치브리프	인플루언서	진보	6	621	12,406	11
전체				4,859	180,543	9,337	923

전체 동영상 중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1,000개의 동영상을 추출하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비상계엄 사건 이후 2024년 482개(48.2%), 2025년 513개(51.3%) 제작되었다. 2021년-2023년 동안 5개의 동영상에 게시된 점이 특기할 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 언론 인터뷰(2021년 YTN) 및 2023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민주당이 주장한 계

업 문건 관련 공수처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최병목의 FACT) 동영상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2023년 22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2023년 성창경TV 및 정광용TV)이 주요 내용이었다.

상위 1,000개의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은 모든 언론과 진보 정치인 채널 및 55.6%의 보수 인플루언서와 64.0%의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에 분포하였다. 즉 인플루언서 채널수가 훨씬 더 많은 반면 동영상에 대한 반응성에서 언론 채널이 더 우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데, 21대 대선에서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생태계에서도 인플루언서 채널을 축으로 한 양극화 및 언론 채널 동영상에 대한 반응성의 우위가 나타났다(장우영·송준모 2023). 이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공론장에서 저널리즘 동영상이 당파적 동영상에 비해 더 큰 소구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채널로 한정하면, 상대적으로 보수보다 진보 채널에 동영상이 더 많이 게시되었다. 이는 각 진영이 유리한 이슈에 공세적으로 불리한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태의 결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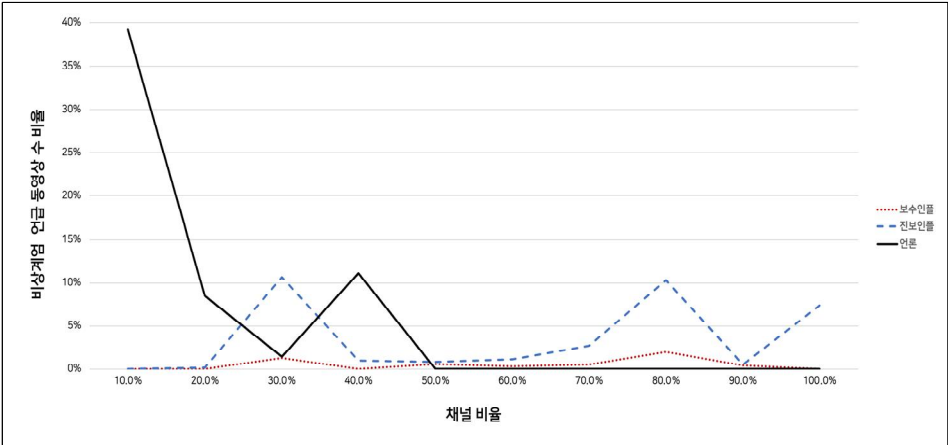
〈표 2-9〉 채널 유형별 · 이념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5 (83.3%)	6 (100.0%)	8 (100.0%)	15 (55.6%)	32 (64.0%)	0 (0.0%)	2 (100.0%)
동영상 미게시	1 (16.7%)	0 (0.0%)	0 (0.0%)	12 (44.4%)	18 (36.0%)	1 (100.0%)	0 (0.0%)
총계	6 (100.0%)	6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조회수 기준으로 구간별 동영상 생산량을 살펴보면 언론과 인플루언서 채널이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전체 동영상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독자 기준 상위 10%의 채널이 전체 동영상의 39.2%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1개의 동영상을 제외하고 1,896개의 동영상이 언론 채널에서 생산되었다. 이를 상위 20%로 확대해도 언론 채널이 동영상은 411개가 증가한 반면,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은 증가량이 9개에 불과했다. 즉 이용자의 소구력이 높은 상위 채널

널이 동영상 생산량을 주도하는 먹함수 법칙이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저널리즘의 연장선에서 언론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상위 30%와 상위 80% 구간에서 동영상을 많이 생산했으며,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전 구간에서 저조한 양의 동영상을 생산했다.

[그림 2-9] 채널 유형별·구간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점유율



〈표 2-10〉 채널 유형별 · 구간별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점유율

채널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동영상 점유율	39.2% (1,897)	8.7% (420)	13.4% (647)	12.1% (587)	1.4% (68)	1.4% (69)	3.2% (156)	12.2% (593)	1.0% (47)	7.4% (357)	100.0% (4,841)
보수 인플루언서	0.0% (0)	0.6% (1)	37.9% (61)	1.9% (3)	17.4% (28)	8.7% (14)	16.1% (26)	4.3% (7)	13.0% (21)	0.0% (0)	100.0% (161)
진보 인플루언서	0.1% (1)	0.5% (8)	29.3% (517)	2.6% (46)	2.3% (40)	3.1% (55)	7.4% (130)	33.2% (586)	1.5% (26)	20.2% (357)	100.0% (1,766)
언론	65.1% (1,896)	14.1% (411)	2.4% (69)	18.5% (538)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2,914)

이슈입장을 살펴보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의 비상계엄 긍정과 대통령 탄핵 부정 은 매우 선명하다. 이는 주류 채널이 보수 생태계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소수의 비주류 채널은 초기에는 계엄 반대와 탄핵 유보 입장을 취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탄핵 수용으로 입장이 변화되었다. 가령 ‘뉴스엔진 정답은없다’ 채널 은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사과와 탄핵 표결 동의가 있었다면, 보수 세력 이 조기 대선에서 다시 집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보수 채널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분화 되었다.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은 비상계엄 반대와 대통령 탄핵에 예외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도 대다수의 주류 채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 채널 생태계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즉 계엄 반대와 탄핵 유보 입장의 소수의 비주류 채널이 존재했지만,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령 ‘모색과 대안’은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국정 흔들기와 이 대표 사법처리 방탄을 거론하며 조기 대선에서 후보 연대론을 제기하였다.

인플루언서 채널의 이슈 제기 방식은 사실 전달보다 주장으로 일관되었다. 이는 비상계엄이 비상한 이슈라는 점과 인플루언서가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은 분열적 표현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은 혐오 적 표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자는 주류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이 비상계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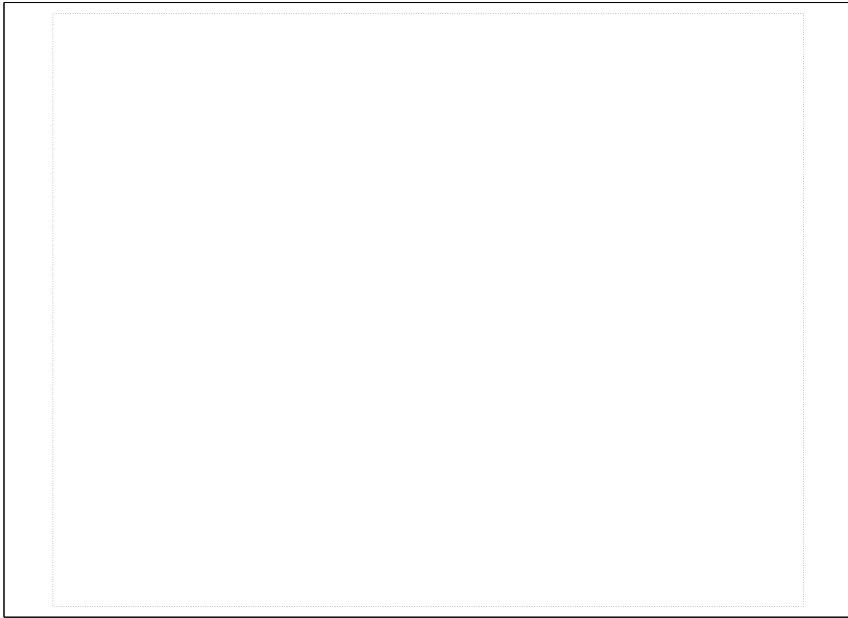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에 참여한 국민의힘 비주류 집단을 배신자로 공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한편 후자는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이 비상계엄과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데 혐오를 극적으로 동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진보 동영상에 욕설이 많이 포함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표 2－11〉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단위: 개)

채널	비상계엄 입장			대통령 탄핵 입장			정보전달 방식		정보품질-1			정보품질-2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사실 전달	주장	혐오 표현	분열 표현	기타	욕설 포함	욕설 불포함
보수 인플루언서	88 (94.6%)	0 (0.0%)	5 (5.4%)	4 (4.3%)	0 (0.0%)	89 (95.7%)	0 (0.0%)	93 (100.0%)	93 (82.3%)	20 (17.7%)	0 (0.0%)	3 (3.2%)	90 (96.8%)
진보 인플루언서	0 (0.0%)	0 (0.0%)	755 (100.0%)	755 (100.0%)	0 (0.0%)	0 (0.0%)	0 (0.0%)	755 (100.0%)	755 (99.3%)	5 (0.7%)	0 (0.0%)	32 (4.2%)	723 (95.8%)

[그림 2－10]은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을 매개한 언론과 인플루언서 채널간 구조화된 연결망을 보여준다. 형태적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유형별 이념별로 각각 3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먼저 유형별로는 강한 응집성을 가진 진보 인플루언서 클러스터, 고립되어 산개한 보수 인플루언서 클러스터 및 양자를 가교하는 언론 클러스터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진보 인플루언서와 진보 언론이 강하게 연결된 진보 클러스터, 보수 인플루언서와 보수 언론이 약하게 연결된 보수 클러스터 및 양자를 연결하는 소수의 중립 언론 클러스터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중심의 ‘강한 유대(strong tie)의 네트워크’와 변방의 ‘약한 유대(weak tie)의 네트워크’가 위계적으로 대립하는 연결망이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통시키며 담론 경쟁을 벌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10] '비상계엄 사건'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 red/circle: 보수 인플루언서, blue/square: 진보 인플루언서, green/triangle: 언론.

중심성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다음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표 2-1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진보의 중심성 우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특히 3개 채널-미디어쇼츠, MBCNEWS, JTBC News-은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의 중심성 값을 보이고 있다. 즉 3개 채널을 중심으로 진보 채널들의 유기적 연계와 이용자간 상호작용 구조가 구축되었다. 부연하면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미디어쇼츠는 전체 연결망의 게이트키퍼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저널리즘 영역의 MBCNEWS와 JTBC News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큰 채널들이 다수 연결되어 진보 클러스터를 강한 유대의 네트워크로 공고히 만들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의 중심성을 가진 진보 채널들이 진보 채널간 거리를 단축시키며 비상계엄 동영상의 순환을 촉진하였다.

둘째, 보수 채널의 경우 3개-채널A NEWS, 고성국TV, 뉴스TVCHOSUN- 외에 평균 이상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가진 채널이 없었다. 요컨대 저널리즘 영역의 채널A NEWS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며, 강한 보수 성향의 고성국TV가 인플루언서 채널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진보 클러스터와는 달리 보수 클러스터는 저널리즘 채널과 인플루언서 채널 간의 연결 강도가 약하고 두 영역이 다소 분절적이다. 그 밖에 이용자 반응성이 높은 GROUND C와 송국건의 혼술이 매우 낮은 중심성을 보이며 보수 클러스터 내에서 분절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동영상 생산량이 저조하고 보수 노드의 절대 수가 진보에 비해 크게 적은 점이 이유로 이해된다.

〈표 2-12〉 ‘비상계엄 사건’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1	미디어쇼츠	진보인플루언서	0.5435	0.2896	0.6765	0.3140
2	MBCNEWS	진보언론	0.5000	0.1215	0.6571	0.3395
3	JTBC News	진보언론	0.5000	0.1068	0.6301	0.3387
4	채널A News	보수언론	0.3913	0.1703	0.5974	0.1784
5	이슈카툰	진보인플루언서	0.3696	0.0711	0.5542	0.2687
6	애국청년김태풍	진보인플루언서	0.2826	0.0138	0.5349	0.2383
7	이슈방송국	진보인플루언서	0.2609	0.0238	0.5610	0.2255
8	스픽스	진보인플루언서	0.2391	0.0307	0.5055	0.2009
9	SBS 뉴스	중립언론	0.2391	0.0588	0.5349	0.1830
10	팩트TV NEWS	진보인플루언서	0.2391	0.0505	0.5169	0.1981
11	KBS News	중립언론	0.2174	0.0319	0.5227	0.1394
12	고성국TV	보수인플루언서	0.2174	0.0574	0.5169	0.0843
13	뉴스TVCHOSUN	보수언론	0.2174	0.0266	0.5000	0.1032
14	열린공감TV	진보인플루언서	0.2174	0.0076	0.5000	0.1924
15	MBC 라디오 시사	진보언론	0.2174	0.0245	0.4646	0.1426
16	오마이TV	진보언론	0.2174	0.0173	0.5169	0.1779
17	불타는진보청년	진보인플루언서	0.2174	0.0079	0.5055	0.1959
18	YTN	중립언론	0.1957	0.0098	0.5111	0.1605
1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진보언론	0.1739	0.0097	0.5111	0.1428
20	최병목의 FACT	보수인플루언서	0.1522	0.0099	0.4144	0.0449
21	KNN NEWS	진보언론	0.1522	0.0249	0.5000	0.0980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22	울소TV	진보인플루언서	0.1522	0.0031	0.4842	0.1348
23	채널A 뉴스TOP10	보수언론	0.1522	0.0210	0.5000	0.0854
24	성창경TV	보수인플루언서	0.1522	0.0092	0.4842	0.0794
25	조선일보	보수언론	0.1304	0.0041	0.4144	0.0499
26	MBN News	보수언론	0.1304	0.0063	0.4035	0.0324
27	서정욱TV	보수인플루언서	0.1304	0.0027	0.4035	0.0405
28	BJ톨	보수인플루언서	0.1087	0.0050	0.4894	0.0614
29	뉴스타파	진보언론	0.1087	0.0018	0.4510	0.0997
30	왔다정치	진보인플루언서	0.1087	0.0009	0.4381	0.1044
31	춧불행동tv	진보인플루언서	0.1087	0.0003	0.4646	0.1153
32	무적소년공	진보인플루언서	0.1087	0.0000	0.4694	0.1278
33	시사포커스TV	보수언론	0.0870	0.0005	0.4000	0.0371
34	이마까TV	진보인플루언서	0.0870	0.0013	0.4510	0.0790
39	누리PD-TV	보수인플루언서	0.0652	0.0005	0.3566	0.0138
40	뉴스토마토	진보언론	0.0435	0.0002	0.3594	0.0293
41	송국건의 혼술	보수인플루언서	0.0435	0.0000	0.3802	0.0225
42	뉴탐사	진보인플루언서	0.0435	0.0000	0.4259	0.0419
43	편들어주는 파생 방송	진보인플루언서	0.0217	0.0000	0.4071	0.0268
44	새날	진보인플루언서	0.0217	0.0000	0.4071	0.0268
45	정치 읽어주는 여자	진보인플루언서	0.0217	0.0000	0.3594	0.0229
46	매불쇼	진보인플루언서	0.0217	0.0000	0.3433	0.0169
47	GROUND C	보수인플루언서	0.0217	0.0000	0.3511	0.0156
	평균		0.1684	0.0260	0.4726	0.1169

* 평균 이상의 중심성 값을 굵게 표시하였음.

나. 팬덤정치

100개의 뉴스·정치채널에서 ‘팬덤’과 ‘개딸’로 검색한 결과, 59%(59개)의 채널이 ‘팬덤정치’ 동영상상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85.0%(17개), 인플루언서 채널 50.6%(39개), 정치인 채널 100%(3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 채널 81.9%(27개), 중립 채널 71.4%(5개), 진보 채널 45.0%(27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7개 채널에서 1,848개의 팬덤정치 동영상에 게시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60%(2,914개), 인플루언서 채널 39.7%(1,928개), 정치인 채널 0.3%(17개) 순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 채널 66.3%(1,225개), 진보 채널 23.6%(437개), 중립 채널 10.1%(186개) 순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팬덤정치의 주요 이슈가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보수에 비해 진보 인플루언서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한 정황으로 읽을 수 있다. 1,848개 동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86,431회, 평균 좋아요수는 7,448개, 평균 댓글수는 356개였다.

팬덤정치 동영상을 가장 많이 게시한 채널은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BJ톨(140건)이었으며,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게시한 1개의 동영상에 가장 높은 평균 조회수(992,650회)를 기록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평균 좋아요수(92,727)와 평균 댓글수(1,982)도 가장 많았다.

〈표 2-13〉 채널 유형별 · 이념별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단위: 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6 (100.0%)	4 (66.7%)	7 (87.5%)	22 (81.5%)	17 (34.0%)	1 (100.0%)	2 (100.0%)
동영상 미게시	0 (0.0%)	2 (33.3%)	1 (12.5%)	5 (18.5%)	33 (66.0%)	0 (0.0%)	0 (0.0%)
총계	6 (100.0%)	6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표 2-14〉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단위: 개, 회)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1	MBCNEWS	언론	진보	11	40,107	1,088	429
2	YTN	언론	중립	81	24,214	483	158
3	SBS 뉴스	언론	진보	51	37,168	697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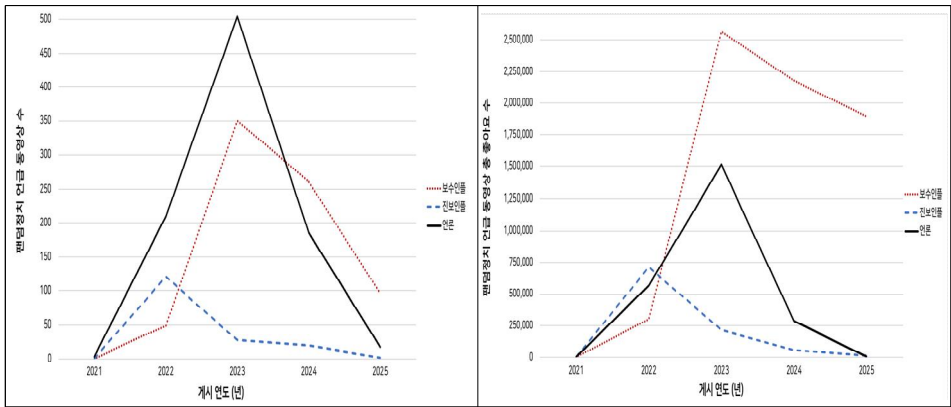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4	JTBC News	언론	진보	67	17,832	285	224
5	KBS News	언론	중립	12	14,246	241	145
6	채널A News	언론	보수	77	96,018	1,831	628
7	뉴스 TVCHOSUN	언론	보수	82	53,805	1,791	312
8	오마이TV	언론	진보	42	85,092	2,163	619
9	MBN News	언론	보수	119	50,430	500	94
1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플루 언서	진보	1	992,650	92,727	1,982
11	연합뉴스TV	언론	중립	25	6,755	149	36
12	MBC 라디오 시사	언론	중립	22	92,300	2,867	497
13	펜앤마이크 TV	인플루 언서	보수	14	129,684	9,637	627
14	조선일보	언론	보수	104	202,595	12,510	531
15	이재명	정치인	진보	2	40,579	7,012	446
16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론	중립	46	126,637	2,083	441
17	서울의소리	인플루 언서	진보	47	24,507	3,535	167
18	스픽스	인플루 언서	진보	10	28,651	2,020	40
19	채널A 뉴스TOP10	언론	보수	86	163,136	3,067	1,150
20	팩트TV NEWS	인플루 언서	진보	16	10,842	1,433	126
21	고성국TV	인플루 언서	보수	133	56,486	6,275	129
22	시사포커스 TV	언론	보수	73	29,070	1,369	126
23	성창경TV	인플루 언서	보수	111	97,119	12,598	762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24	새날	인플루언서	진보	6	71,213	7,654	206
25	열린공감TV	인플루언서	진보	2	73,308	14,227	613
26	뉴스데일리 베스트	인플루언서	보수	12	41,653	5,891	371
27	이봉규TV	인플루언서	보수	16	33,037	5,815	232
28	KNN NEWS	언론	진보	2	147	5	4
29	뉴스토마토	언론	진보	19	2,934	131	16
30	젊은시각	인플루언서	보수	10	148,057	12,310	467
31	GROUND C	인플루언서	보수	3	163,592	19,174	805
32	김용민TV	인플루언서	진보	3	58,805	5,458	86
33	폼생폼사	인플루언서	보수	9	33,835	3,359	84
34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인플루언서	진보	1	161,323	11,984	263
35	송국건의 혼술	인플루언서	보수	35	68,103	8,608	410
36	어벤져스전략 회의	인플루언서	보수	73	45,323	4,742	102
37	장운선의 취재편의점	인플루언서	진보	1	4,191	114	5
38	BJ톨	인플루언서	보수	140	155,480	14,814	789
39	서정욱TV	인플루언서	보수	33	63,111	10,465	360
40	박시영TV	인플루언서	진보	8	81,222	9,686	190
41	손상대TV2	인플루언서	보수	20	70,449	14,644	483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42	샤인튜브	인플루언서	보수	6	94,008	11,129	959
43	황기자	인플루언서	진보	54	134,978	7,628	281
44	최병목의 FACT	인플루언서	보수	9	124,845	15,965	527
45	정광용 TV	인플루언서	보수	36	57,888	7,259	327
46	텔레민주	정치인	진보	1	3,179	1,016	7
47	정치첩단	인플루언서	진보	2	188,632	25,022	1,793
48	춧불행동tv	인플루언서	진보	2	1,601	173	6
49	전여옥TV	인플루언서	보수	15	37,348	6,193	209
50	유재일	인플루언서	보수	55	17,698	2,232	70
51	뉴스엔진 정답은없다	인플루언서	보수	15	2,323	185	2
52	왔다정치	인플루언서	진보	3	68,212	6,565	566
53	누리PD-TV	인플루언서	보수	14	42,370	5,142	301
54	미디어쇼츠	인플루언서	진보	1	14,536	1,626	33
55	파란교실	인플루언서	진보	1	31,712	1,764	47
56	이준석	정치인	보수	1	88,993	2,609	262
57	리업윤통	인플루언서	보수	2	73,534	7,065	37
58	우파청년 이용민	인플루언서	보수	4	420,398	22,335	243
59	지지피아	인플루언서	진보	2	1,470	78	2
전체				1,848	86,431	7,448	356

팬데믹정치 동영상 게시는 2022년(194개), 2023년(450개), 2024년(259개), 2025년(97개)의 등락을 보였다. 이러한 추이는 정국 변화에 대한 인플루언서와 언론의 반응으로 이해된다. 즉 특징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처리 위기가 크게 고조된 2023년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2024년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2-11]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고조의 흐름은 보수 인플루언서와 언론 채널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진보 인플루언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띠었다. 한편 [그림 2-11]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수 인플루언서 동영상에 대한 좋아요가 수직적으로 상승한 반면, 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에 대한 반응은 더욱 저조해지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동영상을 생산·소비하는 행위가 공론 활동을 넘어, 정치 진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과정의 주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림 2-11] ‘팬데믹정치’ 동영상 게시 및 반응(좋아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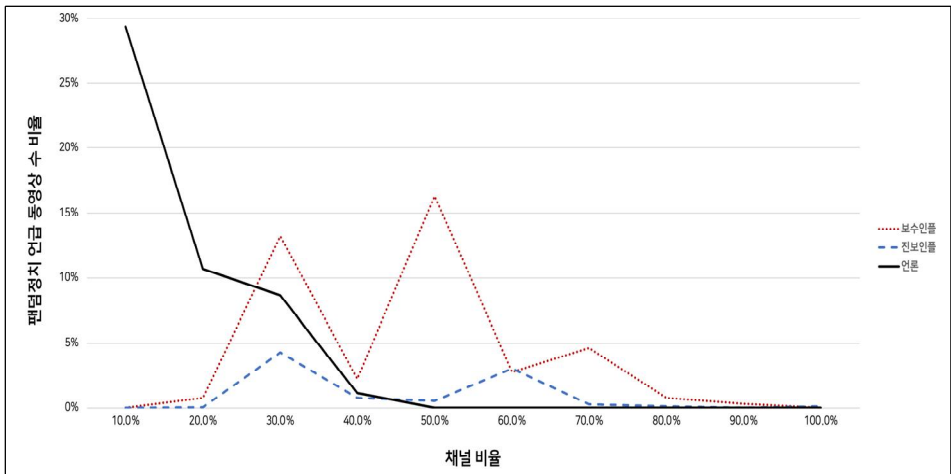
전체 동영상 중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1,000개의 동영상을 추출하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위 1,000개의 ‘팬데믹정치’ 동영상은 보수 채널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즉 보수의 경우 100%(6개)의 언론 채널과 81.%(22개)의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영상이 분포한 반면, 진보의 경우 62.5(5개)%의 언론 채널과 28.0%(14개)의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영상이 분포하였다. 이 또한 각 진영이 유리한 이슈에 공세적으로 불리한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태의 결과로 인식된다.

〈표 2-15〉 채널 유형별·이념별 ‘팬덤정치’ 동영상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6 (100.0%)	2 (33.3%)	5 (62.5%)	22 (81.5%)	14 (28.0%)	1 (100.0%)	1 (50.0%)
동영상 미게시	0 (0.0%)	4 (66.7%)	3 (37.5%)	5 (18.5%)	36 (72.0%)	0 (0.0%)	1 (50.0%)
총계	6 (100.0%)	6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조희수 기준으로 구간별 동영상 생산량을 살펴보면 언론과 인플루언서 채널이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전체 동영상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독자 기준 상위 10%의 채널이 전체 동영상의 29.6%(541개)를 생산하였다. 이 구간에 포함된 인플루언서 채널은 전무했다. 이를 상위 20%로 확대해도 언론 채널의 동영상은 212개가 증가한 반면,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은 증가량이 14개에 불과했다. 즉 이용자에 대한 소구력이 높은 상위 채널이 동영상 생산량을 주도하는 먹함수 법칙이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저널리즘의 연장선

〔그림 2-12〕 채널 유형별·구간별 ‘팬덤정치’ 동영상 점유율



에서 언론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상위 30%와 상위 50% 구간에서 동영상 많이 생산했으며,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전 구간에서 저조한 양의 동영상을 생산했다.

〈표 2-16〉 채널 유형별 · 구간별 ‘팬덤정치’ 동영상 점유율

채널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동영상 점유율	29.6% (541)	11.6% (212)	26.1% (477)	4.0% (73)	16.8% (307)	5.8% (106)	4.9% (90)	0.9% (16)	0.3% (6)	0.1% (2)	100.0% (1,830)
보수 인플루 언서	0.0% (0)	1.9% (14)	31.8% (239)	6.3% (47)	39.5% (297)	6.6% (50)	11.3% (85)	1.9% (14)	0.8% (6)	0.0% (0)	100.0% (752)
진보 인플루 언서	0.0% (0)	0.6% (1)	49.4% (79)	3.1% (5)	6.3% (10)	35.0% (56)	3.1% (5)	1.3% (2)	0.0% (0)	1.3% (2)	100.0% (160)
언론	58.9% (541)	21.5% (197)	17.3% (159)	2.3% (2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918)

이슈입장을 살펴보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팬덤정치 비판과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옹호가 명확히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개딸’이라는 수사적 키워드가 양 집단의 팬덤정치 논쟁을 촉진시켰다. 우선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팬덤을 정당정치에서 자연스러운 강한 지지 현상으로 옹호하였다. 이 주장은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과 맥을 같이 하였다. 즉 강성 지지층이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며 당내 비주류를 반개혁적 집단으로 비판하는 프레임이 작동하였다. 가령 ‘수박’과 같은 비주류에 대한 멸칭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에 의해 공공연하고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22대 총선 공천 전후에 최고조에 올라, 주요 비주류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당하여 신당에 참여하였다.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에게 ‘개딸’과 ‘수박’은 담론 투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호재로 역할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각종 의혹으로 대통령 탄핵론이 불거지는 상황으로 팬덤정치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도 팬덤 문제를 호명하였다. 즉 대통령과 집권당 간의 수직적 당정관계와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당내 비주류에 대한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이 제기한 ‘한딸’, ‘가딸’과 프레임에 같은 동조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 채널이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은 사실 전달보다 주장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는 양 진영이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여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에서 혐오 표현이 빈발했다. 한편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에서는 혐오 표현과 함께 분열 표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분열 표현에 ‘수박’과 같은 민주당 비주류에 대한 멸칭이 광범하게 동원되었다. 다만 게이트키퍼가 작동하지 않는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에서 표현에 욕설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절제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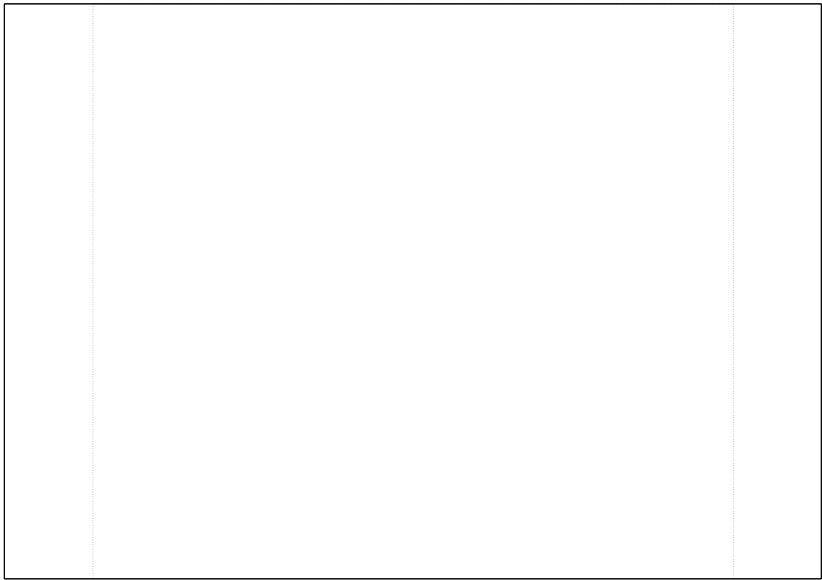
〈표 2-17〉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단위: 개)

채널	개념에 대한 인식			정보전달 방식		정보품질-1			정보품질-2	
	긍정	중립	부정	사실 전달	주장	혐오 표현	분열 표현	기타	욕설 포함	욕설 불포함
보수 인플루언서	0 (0.0%)	0 (0.0%)	711 (100.0%)	0 (0.0%)	711 (100.0%)	710 (98.5%)	10 (1.4%)	1 (0.1%)	8 (1.1%)	703 (98.9%)
진보 인플루언서	137 (100.0%)	0 (0.0%)	0 (0.0%)	0 (0.0%)	137 (100.0%)	113 (60.1%)	58 (30.9%)	17 (9.0%)	0 (0.0%)	137 (100.0%)

[그림 2-13]은 ‘팬덤정치’ 동영상을 매개한 언론과 인플루언서 채널간 구조화된 연결망을 보여준다. 형태적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먼저 3개의 유형별 클러스터로 구축되었다. 그것은 응집도가 매우 강한 보수 인플루언서 클러스터, 응집도가 매우 약한 진보 클러스터 및 분절적인 언론 클러스터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채널간 연결망은 이념을 기준으로 2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보수 클러스터는 보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보수 언론이 강하게 밀착하고 그 주변에 중립 언론이 위치하였다. 반면 진보 클러스터는 전체적으로 연결 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언론 채널과 인플루언서 채널이 분절화된 양태를 띠었다.

이러한 특징은 유기적으로 일체화된 ‘강한 유대의 네트워크’와 분절적으로 산개한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로 대조할 수 있다. 이는 팬덤정치를 둘러싼 담론 경쟁에서 공세적 보수와 수세적 진보의 구도를 함축한다.

[그림 2-13] ‘팬덤정치’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 red/circle: 보수 인플루언서, blue/square: 진보 인플루언서, green/triangle: 언론.

중심성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다음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표 2-18>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보수의 중심성 우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링크들의 합을 뜻하는 연결중심성의 경우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진 20개의 채널 중 16개가 보수 채널인 반면 진보 채널은 3개에 불과하다. 특히 저널리즘 영역의 채널A와 조선일보 계열의 채널들 및 포커스TV가 최상위의 연결중심성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영역의 BJ톨, 성장경TV, 고성국TV의 연결중심성도 최상위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채널A 계열의 채널들, BJ톨, 성장경TV, 고성국TV는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에 위치하여 연결망의 매개자이자 게이트키퍼로 역할하고 있다. 요컨대 이 채널들을 중심으로 매우 조밀한 강한 유대의 보수 클러스터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의 근접 중심성을

가진 모든 보수 채널들이 상호부조 격으로 채널간 거리를 단축시키며 ‘팬덤정치’ 동영상의 순환을 촉진하였다. 대부분 이들은 영향력이 큰 노드들과의 다중 연결성을 뜻하는 위세중심성에서도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진보는 CBS 김현정의뉴스쇼와 오마이TV 외에 평균 이상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가진 채널이 없다. 더욱이 당파성이 매우 강한 오마이TV와 달리 김현정의 뉴스쇼는 팬덤정치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기 때문에 진보의 대항 기제로 역할하지 못했다. 진보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도 노드의 절대 수가 매우 적고 동영상 생산과 이용이 저조해서 상호 연결의 토대가 취약했다. 이에 따라 진보 클러스터는 연결망의 구심 없이 분절화되었다. 이는 이슈의 유불리와 저널리즘 호응이 연결망의 형성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2-18〉 ‘팬덤정치’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1	채널A 뉴스TOP10	보수언론	0.5854	0.1715	0.6613	0.2831
2	조선일보	보수언론	0.5366	0.0465	0.6029	0.2850
3	BJ톨	보수인플루언서	0.5366	0.1805	0.6406	0.2637
4	성창경TV	보수인플루언서	0.5366	0.0484	0.5857	0.2776
5	채널A News	보수언론	0.5122	0.0378	0.5942	0.2755
6	고성국TV	보수인플루언서	0.4390	0.0484	0.5541	0.2272
7	뉴스 TVCHOSUN	보수언론	0.4146	0.0168	0.5616	0.2438
8	시사포커스TV	보수언론	0.4146	0.0159	0.5541	0.2334
9	송국건의혼술	보수인플루언서	0.3659	0.0119	0.5325	0.2271
10	서정욱TV	보수인플루언서	0.3659	0.0035	0.5325	0.2338
11	정광용TV	보수인플루언서	0.3415	0.0107	0.5325	0.2100
12	어벤져스 전략회의	보수인플루언서	0.3415	0.0051	0.5325	0.2163
13	손상대TV2	보수인플루언서	0.3415	0.0070	0.5190	0.2084
14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진보언론	0.2927	0.0520	0.5062	0.1647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15	MBN News	보수언론	0.2927	0.0513	0.5541	0.1712
16	뉴스데일리 베스트	보수인플루언서	0.2683	0.0004	0.4940	0.1854
17	최병목의FACT	보수인플루언서	0.2439	0.0276	0.4824	0.1445
18	오마이TV	진보언론	0.2439	0.0964	0.4767	0.0286
19	YTN	중립언론	0.2439	0.0685	0.5616	0.1148
20	서울의소리	진보인플루언서	0.2439	0.1619	0.5325	0.0339
21	젊은시각	보수인플루언서	0.2195	0.0072	0.4940	0.1355
22	황기자	진보인플루언서	0.1951	0.0657	0.5062	0.0403
23	이봉규TV	보수인플루언서	0.1707	0.0003	0.4227	0.1100
24	누리PD-TV	보수인플루언서	0.1707	0.0022	0.4607	0.1030
25	SBS 뉴스	중립언론	0.1463	0.0073	0.4881	0.0865
26	JTBC News	진보언론	0.1463	0.0289	0.4881	0.0270
27	펜앤마이크TV	보수인플루언서	0.1220	0.0001	0.4556	0.0871
28	샤인튜브	보수인플루언서	0.1220	0.0002	0.4556	0.0836
29	유재일	보수인플루언서	0.1220	0.0000	0.4607	0.0912
30	전여옥TV	보수인플루언서	0.1220	0.0003	0.4020	0.0771
31	MBCNEWS	진보언론	0.0976	0.0007	0.3796	0.0064
32	리업윤통	보수인플루언서	0.0732	0.0000	0.4100	0.0358
33	열린공감TV	진보인플루언서	0.0732	0.0000	0.3694	0.0047
34	팩트TV NEWS	진보인플루언서	0.0732	0.0000	0.3761	0.0061
35	MBC 라디오시사	진보언론	0.0732	0.0079	0.4059	0.0145
36	정치쉽단	진보인플루언서	0.0732	0.0488	0.3761	0.0051
37	폼생폼사	보수인플루언서	0.0732	0.0000	0.4100	0.0358
38	스픽스	진보인플루언서	0.0244	0.0000	0.3388	0.0112
39	박시영TV	진보인플루언서	0.0244	0.0000	0.3504	0.0023
40	왔다정치	진보인플루언서	0.0244	0.0000	0.3254	0.0019
41	연합뉴스TV	중립언론	0.0244	0.0000	0.4020	0.0192
42	김어준의 검은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보인플루언서	0.0244	0.0000	0.2752	0.0003
	평균		0.2323	0.0293	0.4777	0.1193

* 평균 이상의 중심성 값을 굵게 표시하였음.

다. 드루킹 사건

100개의 정치·뉴스채널에서 ‘드루킹’과 ‘여론’으로 검색한 결과, 32%(32개)의 채널이 ‘드루킹 사건’ 동영상상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90.0%(18개), 인플루언서 채널 18.2%(14개), 정치인 채널 0.0%(0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립 채널 85.7%(6개), 보수 채널 36.4%(12개), 진보 채널 23.3%(4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2개 채널에서 3,511개의 드루킹 사건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96.0%(3,369개), 인플루언서 채널 4.0%(142개), 정치인 채널 0.0%(0개) 순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립 성향 채널에서 1,529건(43.5%), 보수 성향 채널 1,199건(34.1%), 진보 성향 채널 783건(22.3%) 순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3,511개 동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25,447회, 평균 좋아요수는 2,155개, 평균 댓글수는 140개였다.

〈표 2-19〉 채널 유형별·이념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단위: 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6 (100.0%)	5 (83.3%)	7 (87.5%)	7 (25.9%)	7 (14.0%)	0 (0.0%)	0 (0.0%)
동영상 미게시	0 (0.0%)	1 (16.7%)	1 (12.5%)	20 (74.1%)	43 (86.0%)	1 (100.0%)	2 (100.0%)
총계	6 (100.0%)	6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드루킹 사건 동영상을 가장 많이 게시한 채널은 YTN(488건)이었고, 가장 높은 평균 조회수를 기록한 채널은 조선일보(130,487회)였다. 평균 좋아요수가 가장 높은 채널은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성창경TV(9,178개)이었고, 평균 댓글수가 가장 많은 채널은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샤인투브(857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이슈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진영의 입장에서 진보 진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서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이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반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황을 보여준다. 아울러 진보에 비해 보수 이용자들의 반응성도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 2-20〉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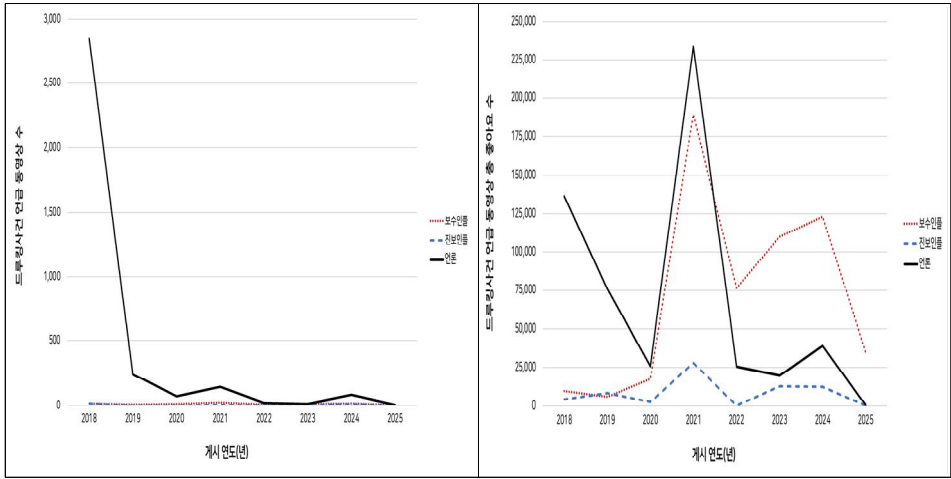
(단위: 개, 회)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1	MBCNEWS	언론	진보	298	5,796	81	24
2	YTN	언론	중립	488	4,146	57	23
3	SBS 뉴스	언론	중립	239	3,140	32	25
4	JTBC News	언론	진보	362	7,618	62	42
5	KBS News	언론	중립	348	873	9	6
6	채널A News	언론	보수	271	6,736	157	42
7	뉴스TVCHOSUN	언론	보수	405	7,062	181	39
8	오마이TV	언론	진보	14	10,116	177	63
9	MBN News	언론	보수	308	3,111	29	14
10	연합뉴스TV	언론	중립	447	1,273	18	3
11	MBC 라디오 시사	언론	진보	8	15,159	444	46
12	조선일보	언론	보수	20	130,487	9,080	355
13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론	진보	37	17,849	368	64
14	서울의소리	인플루언서	진보	5	17,934	541	159
15	스픽스	인플루언서	진보	12	22,562	1,602	25
16	채널A 뉴스TOP10	언론	보수	29	37,113	697	244
17	팩트TV NEWS	인플루언서	진보	1	25,695	1,704	81
18	고성국TV	인플루언서	보수	19	74,097	8,125	201
19	시사포커스TV	언론	보수	68	37,035	1,619	203
20	성창경TV	인플루언서	보수	25	69,690	9,178	733
21	새날	인플루언서	진보	5	30,957	3,890	45
22	MTN 머니투데이방송	언론	중립	7	147	1	0
23	KNN NEWS	언론	진보	10	308	5	2
24	뉴스토마토	언론	진보	10	10,524	651	15
25	김용민TV	인플루언서	진보	18	19,855	1,205	44
26	송국건의 혼술	인플루언서	보수	9	60,126	8,137	297
27	어벤저스 전략회의	인플루언서	보수	2	28,806	4,001	204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28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플루언서	진보	2	2,188	104	6
27	BJ톨	인플루언서	보수	37	26,513	1,522	184
30	서정욱TV	인플루언서	보수	5	44,116	8,389	398
31	샤인튜브	인플루언서	보수	1	28,910	3,053	857
32	편들어주는 파생 방송	인플루언서	진보	1	64,356	3,833	24
전체				3,511	25,447	2,155	140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량은 2018년(53,682개), 2021년(46,142개), 2024년(11,314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과 보수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수치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이 이슈가 촉발된 2018년과 2019년에는 진보 인플루언서(1,037개, 331개)가 보수 인플루언서(537개, 141개)보다 더 많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 수치가 크게 역전되어 보수 인플루언서(16,762개)가 진보 인플루언서(399개)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2022년에는 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이 한 개도 게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보수 인플루언서 동영상수가 전년 대비 1,000개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복권을 둘러싼 논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추이는 드루킹 사건 이슈가 점화된 시점에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이 적극적인 방어기제로 작동하였고, 이후 전모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 진보의 정당성이 소멸하며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이 공세적 기제로 강화되는 과정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용자 반응성도 이에 상응하여,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이용자의 좋아요수가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오랫동안 그러한 반응이 유지되었다.

〔그림 2-14〕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및 반응(좋아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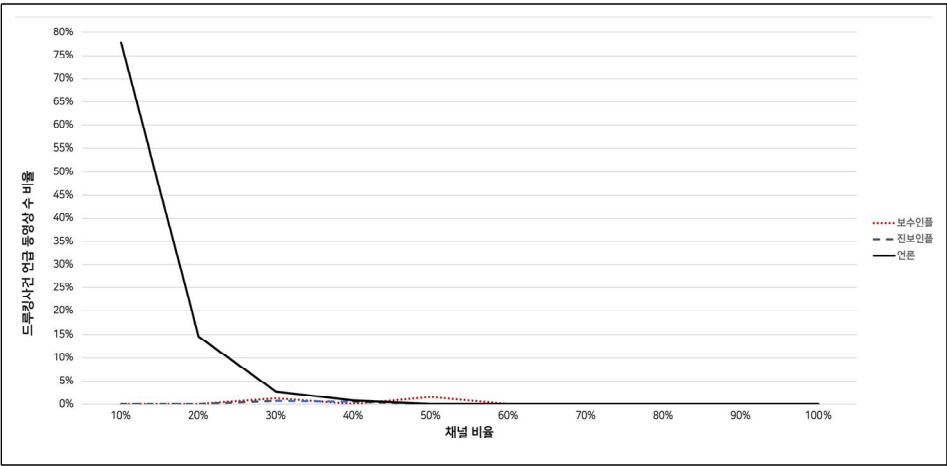
전체 동영상 중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1,000개의 동영상을 추출하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위 1,000개의 ‘드루킹 사건’ 동영상의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즉 보수의 경우 100%(6개)의 언론 채널과 25.9%(7개)의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영상이 분포하였고, 진보의 경우 62.5(5개)%의 언론 채널과 14.0%(7개)의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영상이 분포하였다. 중립은 83.3(5개)의 언론 채널에 동영상이 분포하였다. 그리고 437개의 동영상이 보수 채널(언론 339개, 인플루언서 98개)에, 366개의 동영상이 진보 채널(언론 322개, 인플루언서 44개)에, 197개의 동영상이 중립 채널(언론)에 게시되었다.

〈표 2-21〉 채널 유형별 · 이념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6 (100.0%)	5 (83.3%)	5(62.5%)	7 (25.9%)	7 (14.0%)	0 (0.0%)	0 (0.0%)
동영상 미게시	0 (0.0%)	1 (16.7%)	3 (37.5%)	20 (74.1%)	43 (86.0%)	1 (100.0%)	2 (100.0%)
총계	6 (100.0%)	6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조희수 기준으로 구간별 동영상 생산량을 살펴보면 언론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플루언서 채널이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전체 동영상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독자 기준 상위 20%의 채널이 전체 동영상의 92.4%(3,245개)를 생산하였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소구력이 높은 상위 채널이 동영상 생산량을 주도하는 멱함수 법칙이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저널리즘의 연장선에서 언론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이 구간에 포함된 채널은 모두 언론이었고 인플루언서 채널은 전무했다. 이를 상위 30%로 확대하면 언론 채널의 동영상은 97개 증가하였고, 인플루언서 채널의 경우 보수 44개, 진보 23개 증가하였다. 한편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상위 30%와 상위 50% 구간에서 동영상을 많이 생산했으며,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전 구간에서 저조한 양의 동영상을 생산했다.

[그림 2-15] 채널 유형별·구간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점유율



〈표 2-22〉 채널 유형별 · 구간별 ‘드루킹 사건’ 동영상 점유율

채널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동영상 점유율	77.8% (2,733)	14.6% (512)	4.7% (164)	1.3% (45)	1.6% (55)	0.1% (2)	0.0% (0)	0.0% (0)	0.0% (0)	0.0% (0)	100.0% (3,511)
보수 인플루	0.0% (0)	0.0% (0)	44.9% (44)	0.0% (0)	54.1% (53)	1.0% (1)	0.0% (0)	0.0% (0)	0.0% (0)	0.0% (0)	100.0% (98)
진보 인플루	0.0% (0)	0.0% (0)	52.3% (23)	40.9% (18)	4.5% (2)	2.3% (1)	0.0% (0)	0.0% (0)	0.0% (0)	0.0% (0)	100.0% (44)
언론	81.1% (2,733)	15.2% (512)	2.9% (97)	0.8% (27)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3,369)

이슈입장을 살펴보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드루킹 사건 비판과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옹호가 명확히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의 대규모 조작으로, 그 본질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거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문제 제기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권력형성의 정당성 문제에 봉착하자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대선캠프와의 공모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이슈의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공모를 규명하고 규탄하는 주장을 강화하였다. 즉 양 진영은 모두 드루킹의 여론조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정당이나 캠프의 연루를 둘러싸고 공방하는 정치 진영 갈등으로 이슈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표 2-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모든 동영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후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진실 인정과 집권 세력 규탄으로,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의혹 제기와 사법부 규탄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및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인플루언서 채널의 지배적인 문제 제기 방식도 바뀌었다. 〈표 2-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공적 출처를 수반한 사실전달(75.5%)이 주된 반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공적 출처를 불신하며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주장(93.2%)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된 경우는 별로 없었으나 거의 모든 동영상에 혐오 표현을 동반하였다.

〈표 2-23〉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단위: 개)

채널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한 인식			정보전달 방식		정보품질-1			정보품질-2	
	긍정	중립	부정	사실 전달	주장	협오 표현	분열 표현	기타	욕설 포함	욕설 불포함
보수 인플루언서	0 (0.0%)	0 (0.0%)	98 (100.0%)	74 (75.5%)	24 (24.5%)	98 (91.6%)	9 (8.4%)	0 (0.0%)	4 (4.1%)	94 (95.9%)
진보 인플루언서	0 (0.0%)	0 (0.0%)	44 (100.0%)	3 (6.8%)	41 (93.2%)	44 (100.0%)	0 (0.0%)	0 (0.0%)	1 (2.3%)	43 (97.7%)

〔그림 2-16〕 ‘드루킹 사건’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 red/circle: 보수 인플루언서, blue/square: 진보 인플루언서, green/triangle: 언론.

〔그림 2-16〕은 ‘드루킹 사건’ 동영상을 매개한 언론과 인플루언서 채널간 구조화된 연결망을 보여준다. 형태적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먼저 2개의 유형별 클러스터로 구축되었다. 그것은 전체 연결망의 주축을 이루는 언론 클러스터 및 언론 채널들과 가까운 거

리에서 독립적으로 구축된 보수 인플루언서 클러스터로 구분된다. 언론 클러스터는 연결 강도와 응집도가 대단히 강하며, 일부 진보 언론 채널은 중심에서 벗어나거나(오마이 TV, CBS 김현정의 뉴스쇼) 클러스터에서 이탈해 있는(MBC 라디오 시사, KNN NEWS) 특징을 띤다. 그리고 보수 인플루언서 클러스터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3개 채널(성창경 TV, 송국건의 혼술, BJ들)이 언론 클러스터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소수 채널이 양 클러스터 외곽에 산개하여 고립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진보 언론과 미약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심성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다음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표 2-2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보수와 중립 언론의 중심성 우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링크들의 합을 뜻하는 연결중심성의 경우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진 14개의 채널 중 대다수가 보수언론이며, 중립언론과 보수 인플루언서가 결합되어 있으며, 진보언론은 1개의 채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모든 보수 언론이 네 개의 중심성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결망에서 보수언론이 드루킹 사건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노드 매개와 게이트키핑, 연결망의 경로와 거리 단축, 이슈 파급 영향력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구축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JTBC NEWS와 뉴스TVCHOSUN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중립 언론의 중심성도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슈의 성격상 객관적인 정보 취득에 대한 이용자 욕구가 높은 것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 채널에서는 성창경 TV가 네 개의 중심성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반면 어떤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도 평균 미만의 중심성 값을 보여 연결망에서 고립된 형세를 입증했다.

〈표 2-24〉 ‘드루킹 사건’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1	JTBC News	보수언론	0.7308	0.1213	0.7879	0.2804
2	뉴스TVCHOSUN	보수언론	0.6923	0.1176	0.7647	0.2805
3	시사포커스TV	보수언론	0.6923	0.1049	0.7429	0.2623
4	YTN	중립언론	0.6538	0.0325	0.7429	0.2808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5	MBN News	보수언론	0.6154	0.0873	0.7222	0.2656
6	채널A 뉴스TOP10	보수언론	0.6154	0.0145	0.7222	0.2751
7	조선일보	보수언론	0.5769	0.0366	0.6842	0.2457
8	채널A News	보수언론	0.5769	0.0127	0.7027	0.2611
9	성창경TV	보수인플루언서	0.5769	0.0474	0.6842	0.2425
10	KBS News	중립언론	0.5385	0.0332	0.6842	0.2342
11	SBS 뉴스	중립언론	0.5385	0.0383	0.6667	0.2162
12	MBCNEWS	진보언론	0.5385	0.1024	0.6667	0.2085
13	연합뉴스TV	중립언론	0.5000	0.0052	0.6667	0.2386
14	고성국TV	보수인플루언서	0.4615	0.0216	0.6500	0.2040
15	BJ톨	보수인플루언서	0.3846	0.0006	0.6047	0.1906
16	송국건의혼술	보수인플루언서	0.3462	0.0003	0.5652	0.1705
17	오마이TV	진보언론	0.3462	0.0063	0.5909	0.1581
18	김용민TV	진보인플루언서	0.1923	0.0000	0.5000	0.0842
1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진보언론	0.1538	0.0004	0.5098	0.0731
20	서정욱TV	보수인플루언서	0.1538	0.0000	0.4815	0.0702
21	MBC 라디오시사	진보언론	0.1154	0.0046	0.4727	0.0373
22	샤인튜브	보수인플루언서	0.1154	0.0000	0.4815	0.0580
23	서울의소리	진보인플루언서	0.1154	0.0000	0.4643	0.0538
24	스픽스	진보인플루언서	0.0769	0.0000	0.4127	0.0181
25	어벤저스 전략회의	보수인플루언서	0.0769	0.0000	0.4407	0.0371
26	KNN NEWS	진보언론	0.0385	0.0000	0.4407	0.0206
27	팩트TV NEWS	진보인플루언서	0.0385	0.0000	0.4262	0.0195
	평균		0.3875	0.0292	0.6029	0.1662

* 평균 이상의 중심성 값을 굵게 표시하였음.

라.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100개의 뉴스·정치채널에서 ‘태극기집회’로 1차 검색하여 주요 이슈를 확인한 후, ‘부정선거’로 2차 검색한 결과, 87%(87개)의 채널이 ‘부정선거론’ 관련 동영상상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100.0%(20개), 인플루언서 채널 18.2%(65개), 정치인 채널 66.7%(2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진보 채널 83.3%(50개), 보수 채널 90.9%(30개), 중립 채널 100.0%(7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7개 채널에서 3,481개의 부정선거론 동영상상이 게시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 채널 58.5%(2,038개), 인플루언서 채널 41.1%(1,430개), 정치인 채널 0.4%(13개) 순으로 동영상상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립 채널에서 18.4%(641개), 보수 채널 42.3%(1,473개), 진보 채널 39.3%(1,367개) 순으로 동영상상이 게시되었다. 3,481개 동영상상의 평균 조회수는 108,898회, 평균 좋아요수는 6,965회, 평균 댓글수는 530개였다.

〈표 2-25〉 채널 유형별·이념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 현황: 전체
(단위: 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5 (100.0%)	7 (100.0%)	8 (100.0%)	24 (88.9%)	41 (82.0%)	1 (100.0%)	1 (50.0%)
동영상 미게시	0 (0.0%)	0 (0.0%)	0 (0.0%)	3 (11.1%)	9 (18.0%)	0 (0.0%)	1 (50.0%)
총계	5 (100.0%)	7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부정선거론 동영상을 가장 많이 게시한 채널은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이봉규TV(297개) 이었고, 가장 높은 평균 조회수를 기록한 채널은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 매블쇼(1,507,740회)였다. 매블쇼는 평균 좋아요수(55,282회)와 평균 댓글수(7,004개)에서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부정선거론이 태극기집회의 핵심 이슈로 강성 보수층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가질 개연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부정선거론을 진보에 맞서는 차

5) 태극기집회로 검색한 결과 양대 이슈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확인되었다. 비상계엄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절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분석하였다.

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대항담론(counter discourse)으로 제기해왔다. 반면 언론과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반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촬영한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2-26〉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 및 반응 현황

(단위: 개, 회)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1	MBCNEWS	언론	진보	183	144,660	3,094	1,251
2	YTN	언론	중립	180	24,000	360	312
3	SBS 뉴스	언론	중립	98	100,822	1,735	1,202
4	JTBC News	언론	진보	255	66,106	1,282	785
5	KBS News	언론	중립	140	34,485	857	683
6	채널A News	언론	보수	137	135,229	5,798	1,535
7	뉴스 TVCHOSUN	언론	보수	127	93,500	5,962	853
8	매불쇼	인플루언서	진보	3	1,507,740	55,282	7,004
9	오마이TV	언론	진보	114	27,214	763	168
10	MBN News	언론	보수	116	13,310	508	193
1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플루언서	진보	1	427,804	24,974	517
12	연합뉴스TV	언론	중립	160	16,123	480	103
13	뉴스타파 Newstapa	언론	진보	17	127,629	6,570	1,106
14	MBC 라디오 시사	언론	진보	59	86,479	2,386	352
15	펜앤마이크TV	인플루언서	보수	3	190,855	18,999	1,983
16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인플루언서	진보	1	9,382	1,093	11
17	조선일보	언론	보수	23	170,918	7,985	914
18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론	진보	22	72,144	1,038	272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19	서울의소리 VoiceOfSeoul	인플루언서	진보	52	22,382	1,021	125
20	신인균의 국방TV	인플루언서	보수	6	177,120	31,021	1,734
21	스픽스	인플루언서	진보	40	48,973	2,951	111
22	채널A 뉴스TOP10	언론	보수	22	134,620	4,282	1,937
23	팩트TV NEWS	인플루언서	진보	24	59,217	2,296	347
24	고성국TV	인플루언서	보수	87	69,484	9,027	465
25	스브스뉴스 SUBUSNEWS	언론	중립	2	138,097	1,524	435
26	시사포커스TV	언론	보수	135	37,614	2,876	539
27	성창경TV	인플루언서	보수	250	110,344	17,974	1,306
28	새날	인플루언서	진보	20	55,949	4,825	98
29	머니투데이 방송	언론	중립	2	202,989	909	1,178
30	뉴스데일리 베스트	인플루언서	보수	28	61,992	10,151	1,072
31	이봉규TV	인플루언서	보수	297	52,151	8,853	598
32	KNN NEWS	언론	진보	201	13,022	801	197
33	뉴스토마토	언론	진보	45	28,193	877	52
34	젊은시각	인플루언서	보수	7	162,131	14,708	650
35	GROUND C	인플루언서	보수	19	281,342	36,051	2,444
36	김용민TV	인플루언서	진보	16	10,392	693	51
37	폼생폼사	인플루언서	보수	18	6,283	973	47
38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인플루언서	진보	2	163,398	12,984	347
39	송국건의 혼술	인플루언서	보수	12	43,774	5,746	278
40	어벤저스전략 회의	인플루언서	보수	7	23,317	2,916	155
41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플루언서	진보	51	12,592	628	16
42	정치파랑새	인플루언서	진보	1	216,013	9,661	684
43	BJ톨	인플루언서	보수	10	13,799	2,424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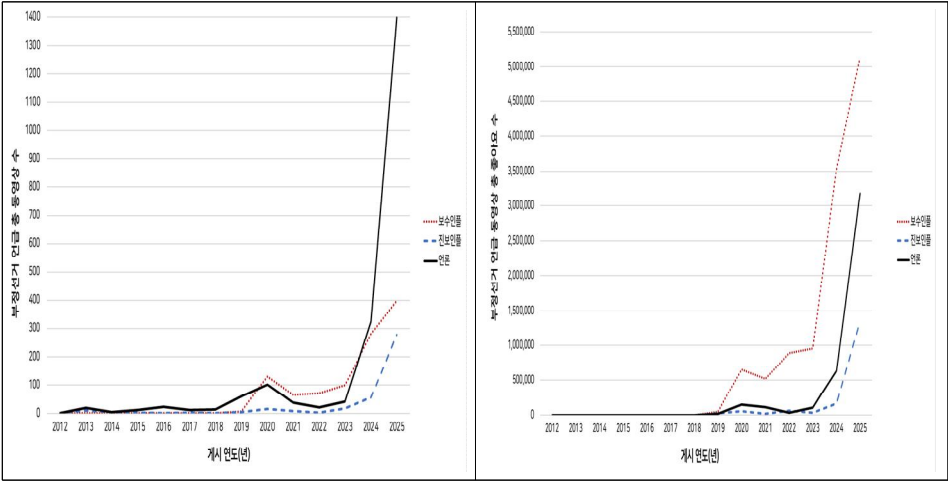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44	서정옥TV	인플루언서	보수	22	100,889	19,076	1,236
45	사장남천동	인플루언서	진보	1	284,731	19,486	375
46	박시영TV	인플루언서	진보	1	87,018	8,648	144
47	손상대TV2	인플루언서	보수	38	59,036	12,317	414
48	황기자	인플루언서	진보	3	465,369	20,189	993
49	최병목의 FACT	인플루언서	보수	1	94,840	13,045	706
50	정광용 TV	인플루언서	보수	82	86,774	9,382	525
51	정치 읽어주는 여자	인플루언서	진보	7	131,460	8,341	602
52	편들어주는 파생 방송	인플루언서	진보	5	424,928	9,556	320
53	텔리민주	정치인	진보	9	4,997	475	29
54	정치쉽단	인플루언서	진보	4	137,688	15,722	1,039
55	정치창	인플루언서	진보	4	293,884	23,948	678
56	뉴탐사	인플루언서	진보	19	26,724	4,046	60
57	쫓돌행동tv	인플루언서	진보	12	24,274	1,741	46
58	이슈카툰	인플루언서	진보	12	463,491	23,870	1,933
59	울소TV	인플루언서	진보	8	107,554	7,242	266
60	전여옥TV	인플루언서	보수	22	37,378	6,983	353
61	최경영TV	인플루언서	진보	7	60,413	5,820	142
62	유재일	인플루언서	보수	7	12,355	1,024	61
63	무적소년공	인플루언서	진보	3	226,926	16,710	404
64	뉴스엔진 정답은없다	인플루언서	보수	27	5,950	1,144	33
65	왔다정치	인플루언서	진보	5	139,062	9,707	264
66	누리PD-TV	인플루언서	보수	36	44,105	8,020	597
67	미디어쇼츠	인플루언서	진보	5	6,930	438	21
68	까발려TV	인플루언서	진보	9	144,658	7,142	50
69	애국청년 김태풍	인플루언서	진보	6	17,162	1,028	24
70	불타는 진보청년	인플루언서	진보	2	12,459	45	6

No.	채널명	유형	이념	동영상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71	이준석	정치인	보수	4	234,225	4,640	303
72	트렌드쇼츠	인플루언서	진보	2	193,079	10,249	111
73	정치파일	인플루언서	진보	1	4,668	184	3
74	리업운동	인플루언서	보수	36	31,007	3,214	38
75	우파청년 이용민	인플루언서	보수	9	3,537	325	5
76	옴은손TV	인플루언서	보수	4	582	154	1
77	견정소	인플루언서	보수	16	1,336	339	4
78	정치의길은 희망	인플루언서	진보	4	18,611	1,227	26
79	정알못NEWS	인플루언서	진보	4	5,637	79	2
80	이슈방송국	인플루언서	진보	10	53,389	3,335	58
81	어준이뉴스	인플루언서	진보	9	13,776	491	6
82	지지피아	인플루언서	진보	3	4,495	318	22
83	세상경사	인플루언서	진보	4	221	62	2
84	국민 회초리	인플루언서	진보	3	490	42	1
85	정치브리프	인플루언서	진보	17	5,630	258	2
86	미디어 디코더	인플루언서	진보	1	8,710	527	7
87	빛나는 민주생활	인플루언서	진보	4	78	10	1
전 체				3,481	108,898	6,965	530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량은 2013년~2018년 동안 104개에 불과했으며,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동영상은 전혀 없이 언론과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의 동영상만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의 동영상들은 모두 서울의 소리가 게시하였는데,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 여론조작 및 전자개표 의혹을 제기하였다.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론은 진보로부터 점화되어 향후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해 본격화한 뒤 태극기집회의 핵심 이슈로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다. 부정선거론 동영상은 2020년(109개), 2023년(155개), 2024년(660개), 2025년(2,027개)로 급증하였으며 이 흐름은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이 주도하

였다. 그리고 2025년 대선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론이 쟁점으로 등장하며 2025년 언론 채널의 동영상 수가 1,397개에 달하였다. 주지하듯이 현재 부정선거론은 진영갈등의 이슈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 2-17]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게시 및 반응(좋아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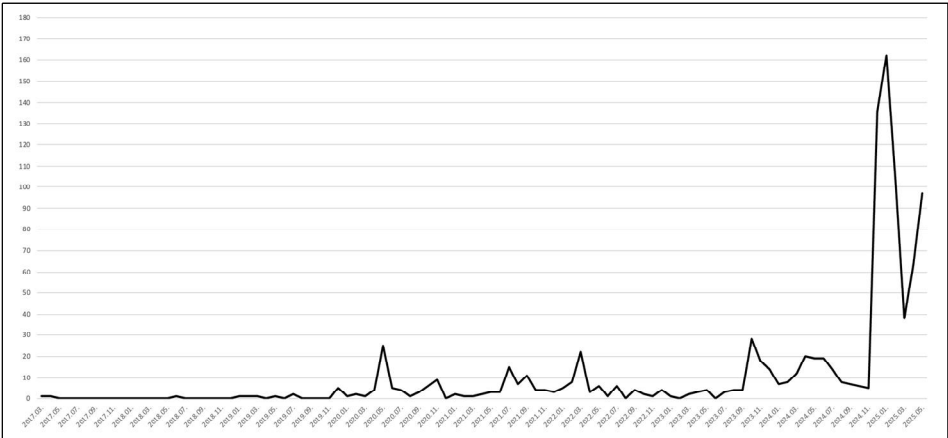
전체 동영상 중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1,000개의 동영상을 추출하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위 1,000개의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의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념을 기준으로 보수 760개, 진보 214개, 중립 26개 순으로 동영상이 분포했다. 그리고 채널 유형을 기준으로 인플루언서 채널 847개, 언론 채널 150개, 정치인 3개 순으로 동영상이 분포했다. 인플루언서 채널은 보수(88.9%)와 진보(82.0%)의 동영상 게시율이 호각세를 이루었고, 이념의 구분 없이 모든 언론 채널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표 2-27〉 채널 유형별 · 이념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게시 현황: 상위 1,000개
(단위: 개)

	언론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		정치인 채널	
	보수	중립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동영상 게시	5 (100.0%)	7 (100.0%)	8 (100.0%)	24 (88.9%)	41 (82.0%)	1 (100.0%)	1 (50.0%)
동영상 미게시	0 (0.0%)	0 (0.0%)	0 (0.0%)	3 (11.1%)	9 (18.0%)	0 (0.0%)	1 (50.0%)
총계	5 (100.0%)	7 (100.0%)	8 (100.0%)	27 (100.0%)	50 (100.0%)	1 (100.0%)	2 (100.0%)

상위 1,000개의 동영상이 주로 2024년 후반 이후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사건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성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동영상이 급증하며, 부정선거론을 계파, 이념, 체제를 망라하는 국가적 차원의 갈등으로 악화시켰다. 그리고 실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율에서도 이념·지역·연령 등에 따라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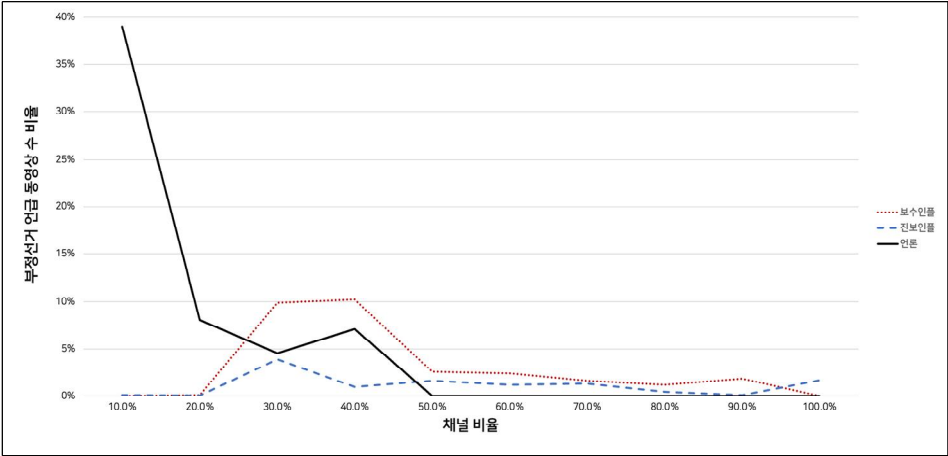
〔그림 2-18〕 상위 1,000개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증가 추이



조회수 기준으로 구간별 동영상 생산량을 살펴보면 언론 채널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플루언서 채널이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전체 동영상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

독자 기준 상위 20%의 채널이 전체 동영상의 47.2%(1,639개)를 생산하였다. 이 중 99.5%(1,631개)가 언론 채널에 분포됨으로써 저널리즘이 부정선거론의 사회 의제화에서 주축으로 역할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상위 40%로 확대하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 694개, 언론 채널 407개,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 170개 순으로 증가함으로써,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이 제 2의 어젠다 세터로 역할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9] 채널 유형별·구간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점유율



〈표 2-28〉 채널 유형별·구간별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점유율

채널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동영상 점유율	39.0% (1,353)	8.2% (286)	18.4% (638)	18.3% (633)	4.2% (145)	3.6% (125)	3.0% (103)	1.7% (58)	2.0% (68)	1.7% (59)	100.0% (3,468)
보수 인플루 언서	0.0% (0)	0.3% (3)	33.2% (343)	34.0% (351)	8.6% (89)	8.0% (83)	5.4% (56)	4.1% (42)	6.3% (65)	0.0% (0)	100.0% (1,032)
진보 인플루 언서	0.8% (3)	0.5% (2)	34.2% (136)	8.5% (34)	14.1% (56)	10.6% (42)	11.8% (47)	4.0% (16)	0.8% (3)	14.8% (59)	100.0% (398)
언론	66.2% (1,350)	13.8% (281)	7.8% (159)	12.2% (248)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2,038)

이슈입장을 살펴보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부정선거론 확산과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규탄이 명료하게 대조되었다. 그리고 양 채널은 정보전달 방식에서도 크게 엇갈렸다.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75.5% 동영상이 일방적 ‘주장’의 방식인 반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의 93.2%는 ‘사실 전달’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동영상이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 표현을 수반하였다. 덧붙이면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의 주장은 주로 선관위와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이들이 사실 전달의 근거로 제시한 출처는 유사 언론이나 비공식적 자료와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수량 데이터와 선관위 해킹 등의 과학적 접근도 병행했지만 개연성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강성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부정선거론을 동원하며 국민의힘 극우화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탄핵정국을 주도한 상위의 채널들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중국인 선거 종사자의 미군기지 압송,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부정선거 수출, 22대 대선의 조직적 부정 등 점점 더 극단의 주장이 활개를 쳤다. 이렇듯 강성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특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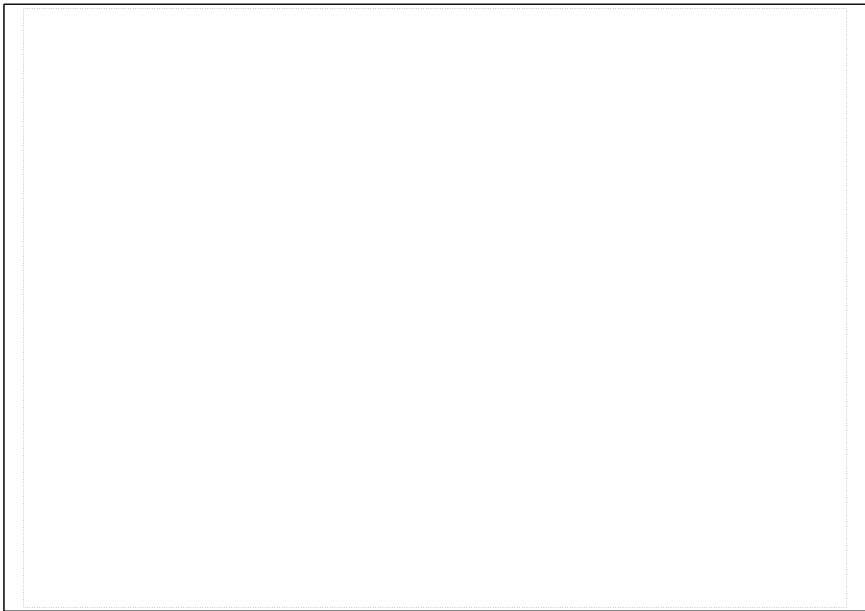
〈표 2-29〉 보수·진보 인플루언서 동영상의 이슈입장 및 정보 특성: 상위 1,000개
(단위: 개)

채널	부정선거론에 대한 인식			정보전달 방식		정보품질-1			정보품질-2	
	긍정	중립	부정	사실 전달	주장	혐오 표현	분열 표현	기타	욕설 포함	욕설 불포함
보수 인플루언서	98 (100.0%)	0 (0.0%)	0 (0.0%)	24 (24.5%)	74 (75.5%)	98 (91.6%)	9 (8.4%)	0 (0.0%)	4 (4.1%)	94 (95.9%)
진보 인플루언서	0 (0.0%)	0 (0.0%)	44 (100.0%)	41 (93.2%)	3 (6.8%)	44 (100.0%)	0 (0.0%)	0 (0.0%)	1 (2.3%)	43 (97.7%)

[그림 2-20]은 ‘부정선거론’ 동영상을 매개한 언론과 인플루언서 채널간 구조화된 연결망을 보여준다. 형태적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2개의 유형별 클러스터로 구축되었다. 그 하나는 언론 채널이 주를 이루고 소수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이 종으로 결합된 ‘반 부정

선거론 클러스터'이다. 다른 하나는 강성 인플루언서 채널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론 클러스터'이며, 어벤저스 전략회의와 같이 이에 반대하는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변방에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가 분화되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보수 인플루언서 클러스터와 이를 반대하는 보수·중도 언론연합 클러스터로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정파성이 강한 진보 언론과 진보 인플루언서 및 온건한 보수 인플루언서 채널은 클러스터 외곽에 분절되어 위치하였다.

〔그림 2-20〕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동영상 매개 채널간 연결망 구조



* red/circle: 보수 인플루언서, blue/square: 진보 인플루언서, green/triangle: 언론.

중심성 측면에서 채널간 연결망은 다음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표 2-30〉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보수 인플루언서와 보수 언론의 중심성 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보수 인플루언서는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보수 언론은 이를 비판하며 클러스터가 분화되었다. 전자에서는 성창경TV와 이봉규TV가 연결망의 주축으로 역할하고 후자에서는 JTBC News와 뉴스TVCHOSUN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보수

언론이 부정선거론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가령 시사포커스TV는 부정선거론을 방임하는 일부 동영상들이 관찰되었다.

둘째, KBS NEWS, SBS NEWS, MBC NEWS, YTN 등 핵심 저널리즘의 채널들도 높은 중심을 보이며 반 부정선거론 연결망의 연결과 매개 강도를 높였다. 특히 중립 언론 채널들로 인해 반 부정선거론 연결망의 연결 거리가 크게 단축되고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었다. 반면 진보 인플루언서 채널은 노드와 동영상 수가 크게 적어서 연결망의 주축에 참여하지 못했다.

〈표 2-30〉 ‘태극기집회 부정선거론’ 채널간 연결망 중심성 지수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1	성창경TV	보수인플루언서	0.6486	0.1030	0.7400	0.2949
2	채널A News	보수언론	0.6216	0.1053	0.7115	0.2788
3	이봉규TV	보수인플루언서	0.5946	0.0790	0.7115	0.2791
4	JTBC News	보수언론	0.5946	0.1830	0.6981	0.2565
5	시사포커스TV	보수언론	0.5676	0.0924	0.6852	0.2611
6	KBS News	중립언론	0.5405	0.0654	0.6852	0.2665
7	뉴스TVCHOSUN	보수언론	0.5135	0.0515	0.6491	0.2526
8	SBS 뉴스	중립언론	0.4865	0.0317	0.6491	0.2527
9	MBCNEWS	진보언론	0.4324	0.0712	0.6271	0.2167
10	YTN	중립언론	0.4054	0.0113	0.6066	0.2255
11	KNN NEWS	진보언론	0.3514	0.0571	0.5968	0.1963
12	서정욱TV	보수인플루언서	0.3514	0.0425	0.5968	0.1768
13	채널A 뉴스TOP10	보수언론	0.3243	0.0088	0.5606	0.1788
14	고성국TV	보수인플루언서	0.2973	0.0296	0.5606	0.1490
15	뉴스데일리베스트	보수인플루언서	0.2973	0.0035	0.5522	0.1749
16	MBN News	보수언론	0.2973	0.0006	0.5606	0.1895
17	GROUND C	보수인플루언서	0.2703	0.0007	0.5522	0.1696
18	정광용TV	보수인플루언서	0.2432	0.0035	0.5286	0.1324
19	연합뉴스TV	중립언론	0.2432	0.0003	0.5522	0.1565
20	손상대TV2	보수인플루언서	0.2162	0.0546	0.5139	0.1078
21	뉴스타파	진보언론	0.1622	0.0003	0.5000	0.0969

	채널명	유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22	신인균의국방TV	보수인플루언서	0.1622	0.0003	0.5000	0.1006
23	누리PD-TV	보수인플루언서	0.1622	0.0003	0.4933	0.0983
24	MBC 라디오시사	진보언론	0.1351	0.0023	0.4805	0.0711
25	조선일보	보수언론	0.1081	0.0000	0.4625	0.0691
26	오마이TV	진보언론	0.0811	0.0000	0.4684	0.0530
27	매불쇼	진보인플루언서	0.0811	0.0005	0.4684	0.0417
28	전여옥TV	보수인플루언서	0.0811	0.0000	0.4568	0.0587
29	펜앤마이크TV	보수인플루언서	0.0541	0.0000	0.4022	0.0224
30	송국건의혼술	보수인플루언서	0.0541	0.0000	0.4458	0.0395
31	젊은시각	보수인플루언서	0.0541	0.0000	0.4568	0.0371
32	팩트TV NEWS	진보인플루언서	0.0541	0.0000	0.4405	0.0363
33	머니투데이방송	보수언론	0.0541	0.0000	0.4405	0.0350
34	김용민TV	진보인플루언서	0.0270	0.0000	0.4157	0.0176
35	CBS 김현정의뉴스쇼	진보언론	0.0270	0.0000	0.3895	0.0149
36	스픽스	진보인플루언서	0.0270	0.0000	0.4157	0.0176
37	어벤저스전략회의	보수인플루언서	0.0270	0.0000	0.3426	0.0074
38	폼생폼사	보수인플루언서	0.0270	0.0000	0.3776	0.0135
	평균		0.2546	0.0263	0.5341	0.1328

* 평균 이상의 중심성 값을 굵게 표시하였음.

제3 절 거시적 수준: 알고리즘 · AI 기술과 민주주의

1. AI 기반 기술과 민주주의 영향

AI 기반 기술의 혁신은 현대 민주주의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범용화로 인해 기술이 정치적 의사결정 행위에 개입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실질적 민주성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본권 차원에서는 AI 기술의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방식이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위축, 정치적 평등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민주적 자기 결정권 및 참여권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Gorwa et al., 2020).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AI 기술 개입으로 인한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책임 소재 불분명, 그리고 인간 감독의 한계가 민주적 신뢰 구축에 위협 요소가 된다(Laux, 2024; Waldman & Martin, 202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럽연합 AI 규제나 거버넌스 논의에서 인간-기계 협력 디자인 설계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AI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Gamito, 2024). 실질적 민주성 측면에서는 기술 기반 정치 담론의 편향과 분열 심화(Cho et al., 2020), 다원적 공론장의 축소로 인한 민주주의 질(quality)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이라는 다층적 매개 변수들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민주주의 기대 인식으로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인식 구조의 다차원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구조방정식 모델과 잠재프로파일 분석 등을 적용,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조모델 분석을 활용해 알고리즘·AI 기술 인식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매개로 하여 민주주의 기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을 유형화함으로써 인식 다양성과 사회적 수용성, 정치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I가 가져올 미래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시민적 기대와 우려를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AI 거버넌스 및 민주적 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알고리즘 인식과 민주주의의 질: 구조방정식 모형과 잠재프로파일 분석 통합 접근

가. 기술혁신과 민주주의의 질 연구

민주주의의 이론적, 현실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기본권 보장의 차원(dimension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을 이해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은 민주사회에서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인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평등권, 참여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보호를 담보한다는 원리이다(Munck, 2016; Seubert & Becker, 2021).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체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Donnelly, 1999). 최근 확산된 알고리즘 및 AI 기반의 정치 기술은 기본권 보장에 구조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Palmiotto, 2025).

이와 관련하여 AI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데이터 축적과 활용 방식이 불투명한 경우 정보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외부에 의해 조종될 우려를 느끼게 된다(Faraoni, 2023). 정치적 자기 결정권의 약화가 의사 표현과 참여 과정에서 나타날 때 이는 민주적 기본권 보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된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 노출과 의견 표출이 알고리즘 결정에 따라 제한되거나 편향될 수 있다(Jungherr, 2023).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은 ‘콘텐츠 정책’의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시민들의 공론장 참여 자유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Lindman et al.,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검열 없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달성을 실질적 의미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마이크로타겟팅이나 하이퍼넛징(hypernudging) 등 알고리즘 기반 기술 기법은 자원·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은 집단이 기술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결국 취약 계층의 의사 결정권을 침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Kavoliūnaitė-Ragauskienė, 2024). 이는 정치적 평등성의 위협을 의미하는데, 시민 간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기초를 부식시키면서(Christiano, 2022), 사회집단 간 새로운 비대칭성을 일으켜 민주주의의 포괄성을 저해할 수 있다(Zajko, 2022).

둘째, 절차적 정당성 차원(dimension of procedural legitimacy)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됨을 의미하며,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성과 권위의 원천이다(Peter, 2009). 알고리즘 및 AI 기술의 도입은 민주적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새롭게 위협

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를 투명성(transparency) 약화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 ‘블랙박스’(black box)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준과 논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Von Eschenbach, 2021; Chiao, 2019). 이는 공공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집행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Manias et al., 2023).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일상적 결정에서는 알고리즘의 개입에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AI가 개입하는 고·중요 정책 결정 - 예를 들어, 보건, 안보 분야 -에서는 ‘human-in-the-loop’와 같은 인간 감독이 결여될 경우, 해당 결정의 정당성 인식이 약화된다는 실증연구가 있다(Waldman & Martin, 2022). 알고리즘 결정의 범위와 통제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 인식의 중요한 축임을 시사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형식적 규정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접근 가능성, 설명 책임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제도적·법적 장치 구축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여 시민사회 신뢰 형성 문제를 다룬다(Erman & Furendal, 2024).

마지막으로 실질적 민주성 차원(dimension of substantive democracy)은 시민들이 민주적 자기지배(self-rule), 숙의 참여,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을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실제적 질을 의미한다(Scudder, 2023; Chambers, 2003). 최근 연구들은 AI 알고리즘 기술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력,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이 감소할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이다(Bartels et al., 2023). 이러한 논의에서는 데이터 권력 집중, 시민사회 분열, 사회적 자원 약화가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Erman & Furendal, 2022). AI 기반 기술이 민주적 논쟁의 기반이 되는 공론장을 축소시키고, 소수자의 권리를 경시하게 만드는 현상은 실질적 민주성 저하의 징후이다(Jungherr & Schroeder, 2023). 실질적 민주성은 AI 혁신 기술이 민주주의 내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통제되는지에 따라 좌우되며 민주적 가치와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AI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나. 구조방정식과 잠재프로파일 모형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정치 기술 인식과 민주적 가치 인식 형성의 다중 경로 기제를 탐색하고자 통합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은 다수 변수 간 내재적 요인 구조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미지의 요인 구조

탐색에 유용하다(Yong & Pearce, 2013, 80).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측정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 내에서 묶이는 방식으로, 변수의 차원을 축약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를 검증한다. 잠재변수 간 상호 관련성 또한 평가될 수 있으며(Hoyle, 2000),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검증하는 데 장점이 있다(Brown & Moore, 2012). 정치학 연구 분야에서는 정치 참여의 요인을 식별한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해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 관심 변수와의 관계를 도출한 바 있다(Kim & Hoewe, 2023).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관찰가능한 측정 지표로 구성된 측정 모형과 잠재변수 간 인과 경로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결합하여 변수 간 인과적 연결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통계 모델이다(Mueller & Hancock, 2018).⁶⁾ 간접효과(indirect effects) 분석을 통해 매개변수 경로의 유의성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AI 전자정부 시스템 수용에 대한 관점을 PLS(Partial Least Squares) 구조방정식으로 검토한 연구가 수행되었다(Yun et al., 2024).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관측 변수들의 분포 패턴을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추출하는 혼합 모형 기법이다. 이 방식은 ‘숨겨진(hidden) 인식적 경험을 파악해 유형·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Williams & Kibowski, 2016), 이질적 집단을 식별할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은 종속변수가 다수 범주를 가질 때 독립변수가 해당 범주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회귀 기법이다(Canache et al., 1994).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연계해 프로파일 분류와 변수 효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Kino et al., 2017).

3. 기본권 · 정당성 · 실질적 민주성 측정

가.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정치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2025년 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하여 총 1,0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의

6) R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의 이론과 테크닉에 대해 백영민(2017) 참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별	만18~29세	150	15.0
	만30~39세	150	15.0
	만40~49세	171	17.1
	만50~59세	196	19.6
	만60~69세	178	17.8
	만70세 이상	155	15.5
응답자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5	1.5
	고등학교 중퇴	11	1.1
	고등학교 졸업	165	16.5
	대학재학/대학졸업	691	69.1
	대학원 재학 이상	117	11.7
직업	자영업	76	7.6
	블루칼라	87	8.7
	화이트칼라	513	51.3
	전업주부	144	14.4
	학생	27	2.7
	퇴직/무직	123	12.3
	기타	32	3.2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AI 정치 기술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작동 원리, 그리고 결과적 질 차원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취약성 수준을 분석한다. 즉, 알고리즘 및 AI 기술이 기본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영향을 포괄하여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다층적 메커니즘을 다루었다. 이는 AI 기술의 사회정치적 도입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체감적 인식, 정치참여,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둔다.

나. 변수

1) 독립변수: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알고리즘·AI 기반 정치 기술 인식 변수는 알고리즘·AI가 개인 맞춤형 정치정보 제공에서부터 제도적 의사결정까지 다양한 층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이크로타겟팅과 같은 일상의 경험과 AI 기술의 거버넌스 개입 인식을 측정하였다. “나는 선거나 정치광고에서 AI 혹은 알고리즘이 나의 관심사에 맞는 메시지를 선별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 “나는 온라인 뉴스나 SNS에서 보여지는 정치정보가 내 기존 성향에 맞춰진 결과임을 인지한 적이 있다.” “알고리즘이나 AI가 정치·행정 결정(예: 정책 우선순위 선정, 복지 대상 선별 등)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다.

2) 매개변수: 기본권 보장 인식 변수의 측정

기본권 보장 인식 변수는 데이터 기반 자동화가 시민의 자유, 평등, 참여권에 대해 체감적 침식감을 유도하는지 포착한다(Chiao, 2019; Jungherr, 2023).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내 정치적 신념·성향이 수집되고 있음을 불안하게 느낀 적이 있다.” “알고리즘 기반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정치적 의견 개진 등)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정치정보 접근이 알고리즘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고 느낀다.” “AI 정치 기술이 특정 사회집단에만 이익이 되거나 차별적으로 작동한다고 우려한다.” “AI/알고리즘이 시민의 참여권 등 기본권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다.

3) 매개변수: 절차적 정당성 인식 변수의 측정

절차적 정당성 인식은 책무성, 투명성의 개념과 관련되며 민주주의 절차적 기준에 관한 우려를 반영한다. 최근 연구에서 실제로 알고리즘 시스템의 정당성 인식이 절차적 통제 여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Waldman & Martin, 2022).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알고리즘 판단에서 오류(예: 차별, 실수)가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소재를 알기 어렵다.” “중요한 결정에서 비(非)인간적 자동화가 많아 질수록 전체 절차가 불투명해진다.” “AI·알고리즘의 개입이 인간적 심사(human-in-the-loop)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된다고 본다.”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1이다.

4) 매개변수: 실질적 민주성 인식 변수의 측정

실질적 민주성 인식은 다원성, 집단적 주권 행사의 가능성, 담론 경쟁으로서의 속의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Dryzek, 2001).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알고리즘 또는 AI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만 강화시킨다고 느낀다.” “온라인 정치참여 환경에서 다원적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인해 다수 시민의 정치적 자기결정(집단 판단 등)이 약화되는 사회가 될까 우려된다.” “데이터·알고리즘 환경에서 실제 시민 참여가 ‘형식’에만 그친다고 느낀다.” “AI 기반 정보 환경은 정책 결정에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다.

5) 종속변수: 민주주의 기대 인식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인식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가치적 맥락과 기대 인식이라는 사회심리적 차원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복잡한 체계를 고려할 때 AI 기술이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기능들은 시민 참여, 공론장 활성화, 정책 결정, 사회 통합의 축들로,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적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모델에는 이 측정 문항들의 값을 평균화한 값으로 투입하였다.

6)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 중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정치적 이념성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측정하였다. 정치적 이념성향은 0(매우 진보)에서 10(매우 보수)의 연속형 측정값으로 처리하였다.

다.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데이터 전처리⁷⁾ 이후 모형의 타당성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인과관계를 단계적으로 측정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탐색하고 문항 간 상관 구조와 개념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적합도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접효과 분석을 통해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고, AI 기술과 민주주의 관련 인식 패턴의 이질성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LPA로 분류된 잠재집단 간 인구통계적 특성과 AI 기술 인식 차이를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가 특정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분석은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⁸⁾

4. 기술과 민주주의 인식의 경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32〉). 분석 결과, 네 개의 잠재변수는 단일 요인 구조를 보였고,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았다.

7) 전처리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들에서 역코딩(reverse coding)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 변환을 실시하여 부정성-긍정성 인식 방향을 일관되게 변환하였다.

8) 탐색적 요인분석에 psych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에 lavaan, tidyLPA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nnet, pscl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표 2-3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수	주요 문항 적재값 범위	SS loadings	Proportion Var	RMSEA	TLI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3	0.63 ~ 0.81	1.56	0.52	-	-
기본권 보장 인식	5	0.65 ~ 0.75	2.5	0.5	0.125	0.91
절차적 정당성 인식	3	0.60 ~ 0.82	1.4	0.47	-	-
실질적 민주성 인식	5	0.62 ~ 0.72	2.29	0.46	0.118	0.90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33〉과 같다.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표준화 요인적 재량이 0.5 기준으로 대체로 충족하였고(Hair et al, 2019), 구성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았다. 모델적합도 지수는, 비교적합지수(CFI) 0.935, 터커-루이스 지수(TLI) 0.921로 도출되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 0.9 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이 외 주요 적합도 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RMSEA=0.063, SRMR=0.041, GFI=0.993).

〈표 2-3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R.W.	S.R.W.	Var.	A.V.E.	C.R.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개인화 경험	1	0.695	0.517	0.518	0.762
	필터 버블	1.134	0.79	0.376	0.518	0.762
	정치행정 활용 인지	0.957	0.669	0.553	0.518	0.762
기본권 보장 인식	프라이버시	1	0.625	0.61	0.498	0.832
	표현의 자유	1.074	0.74	0.452	0.498	0.832
	정보접근성	1.012	0.683	0.534	0.498	0.832
	사회집단 차별	1.071	0.738	0.456	0.498	0.832
	시민 참여권	1.042	0.736	0.459	0.498	0.832
	책임성	1	0.654	0.572	0.458	0.717
절차적 정당성 인식	불투명성	1.075	0.724	0.476	0.458	0.717
	인간개입 부재 정당성	0.915	0.65	0.578	0.458	0.717

잠재변수	관측변수	R.W.	S.R.W.	Var.	A.V.E.	C.R.
실질적 민주성 인식	정치영향력	1	0.675	0.545	0.457	0.808
	다원성	0.952	0.627	0.607	0.457	0.808
	자기결정력	1.079	0.728	0.471	0.457	0.808
	시민참여	0.99	0.683	0.533	0.457	0.808
	정책영향	0.971	0.665	0.557	0.457	0.808

다음으로 구조모델 분석 결과이다(〈표 2-34〉).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표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은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알고리즘·AI 기반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에 대한 긍정성 인식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에 긍정성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은 민주주의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 2-34〉 구조모델 결과

regression weights	<i>B</i>	β	<i>p</i>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 기본권 보장 인식	-1.045	-0.756	<.001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 절차적 정당성 인식	-1.063	-0.828	<.001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 실질적 민주성 인식	-1.102	-0.858	<.001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 민주주의 기대 인식	1.974	1.262	<.001
기본권 보장 인식 → 민주주의 기대 인식	0.323	0.286	<.001
절차적 정당성 인식 → 민주주의 기대 인식	0.632	0.518	<.001
실질적 민주성 인식 → 민주주의 기대 인식	0.472	0.388	.003

$x^2(p < .001)$, $x^2/df = 2.73$, GFI=0.989, CFI=0.870, NFI=0.811, TLI=0.858, RMR=0.029, SRMR=0.033, RMSEA=0.042(0.039-0.044)

러한 결과는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혁신이 시민들이 느끼는 제도적 불신, 내지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침식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경로를 가지면서도, 민주주의 기대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구조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매개효과(간접효과) 분석 결과이다(〈표 2-35〉).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이 매개변수, 기본권 보장 인식, 절차적 정당성 인식, 실질적 민주성 인식을 통해 민주주의 기대 인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세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부정적 간접효과를 보였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인식 경로의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beta = -0.429, p < .001$).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절차적 차원에서의 신뢰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이는 민주주의 기대 인식을 저하시킨다. 〈표 2-34〉와 〈표 2-35〉를 통해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민주주의 핵심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5〉 표준화 간접효과(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결과

간접효과	기본권 보장 인식	절차적 정당성 인식	실질적 민주성 인식
민주주의 기대 인식	-.220	-.429	-.361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이 민주주의 기대 인식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세 차원,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고,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인식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각 집단에서 기술 인식 효과의 이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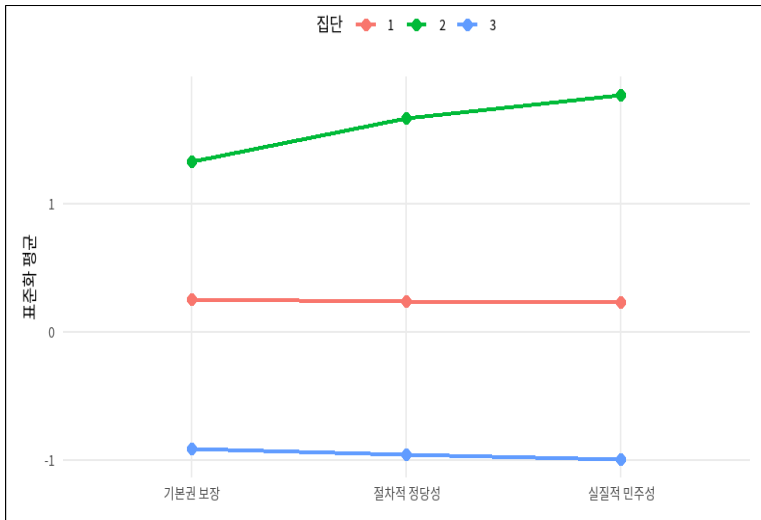
〈표 2-36〉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적합도 검증

구분	모형적합도 검증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AIC	22,132.32	21,847.51	21,768.45	21,771.57
BIC	22,196.12	21,935.85	21,881.32	21,908.99
adjusted BIC	22,154.84	21,878.69	21,808.27	21,820.06
Entropy	0.652	0.801	0.711	0.750
BLRT	572.786**	294.809**	89.069**	6.875
BLRT p-value	.010	.010	.010	.178

잠재프로파일 분석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표 2-36〉), AIC, BIC, adjusted BIC 값은 잠재 집단 4에서 최솟값을 보였으나 Entropy 값은 잠재집단 3이 가장 높아 잠재집단 3에서 집단 간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집단 3과 4 모형 모두 BLRT 유의성을 보였다. 잠재집단 4에서 한 집단의 비중이 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집단 3의 경우 7%로 나타나 표본 비중과 재현 가능성 면에서 안정성에 기준하여 잠재집단 3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권 보장·절차적 정당성·실질적 민주성 세 차원에서의 집단별 평균 표준화 점수를 확인해 프로파일 차이를 살펴보았다(그림 2-21). 본 연구에서 세 유형 간의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집단 2는 기본권 보장·절차적 정당성·실질적 민주성 인식 면에서 긍정성을 보이는 민주주의 ‘고신뢰형’으로 볼 수 있다. 집단 1은 평균 수준의 값을 가지는 ‘부분적 신뢰형’이다. 집단 3은 세 차원 모두 평균 이하를 보이는 민주주의 ‘불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9) 집단 번호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추정 과정에서 무작위 부여되며,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석의 편의를 위해 라벨을 표기하였다.

[그림 2-21] 잠재프로파일분석 시각화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추가 검증하였다.¹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개의 잠재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chi^2(2) = 0.362, p = .835, Cramer's V = 0.019$)과 학력($\chi^2 = 7.539, p = .475, V = 0.06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연령($\chi^2(10) = 22.748, p = .012, V = 0.107$)과 직업($\chi^2 = 37.452, p = .024, V = 0.13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효과크기가 모두 0.14 미만으로 나타나 크기는 매우 작았다.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수준은 세 집단 간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불신형’ 집단은 평균 2.519($sd = 0.944$)로 가장 낮았고, ‘부분적 신뢰형’ 집단은 평균 3.261($sd = 0.658$)으로 중간 수준, 민주주의 ‘고신뢰형’ 집단은 평균 3.814($sd = 0.8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Welch's ANOVA 분석 결과, Welch $F(\approx 2, 173.53) = 79.332, p < .001$ 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크기(η^2)는 0.179로 중간 수준이

10)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변수는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었다. 사후검정(Games-Howell)을 시행한 결과, 모든 집단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에서 알고리즘·AI 기반 기술에 대한 불신 경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된 세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치적 이념성향,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변수를 예측변수로 투입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37>과 같다.

<표 2-37>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분석

변수	부분적 신뢰형		고신뢰형	
	β	SE	β	SE
성별	0.236	0.318	0.495	0.349
연령	0.771	0.429	1.678***	0.489
학력	-3.000***	0.752	-2.914***	0.879
정치적 이념성향	0.137	0.072	0.130	0.079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1.224***	0.174	2.429***	0.211

* $p < .05$, ** $p < .01$, *** $p < .001$

직업(전체 효과) $LR \chi^2(22) = 39.691, p = 0.012$

분석 결과,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변수는 잠재프로파일 집단 예측에서 가장 일관되고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민주주의 '부분적 신뢰형' 집단이나 '고신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민주주의 '고신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불신형'일 가능성이 나타났다. 직업군은 클래스 예측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5. AI 기술 혁신과 민주주의 기대·불신의 구조

본 연구는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이 민주주의 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권 보장·절차적 정당성·실질적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세 차원 인식을 매개변수로 하

여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작동 원리, 그리고 결과적 질이라는 다층적 틀에서 AI 혁신 기술이 국민의 민주주의 기대 인식에 복합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 데이터 기반 자동화가 시민의 자유, 평등, 참여라는 기본권에 대한 체감적 침식과 민주주의 권리 보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알고리즘·AI 기술의 사회적 적용이 참여 및 표현 권리를 제약하거나 특정 사회집단에 편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권리 보장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을 말한다(Erman & Furenda, 2024). 또한, AI 개입에 따른 정책 및 행정 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 될 가능성에 집중했으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신뢰와 정당성에 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함을 가정하였다(Laux, 2024). 본 연구는 최근 알고리즘 민주주의 정당성 평가에서 ‘의사결정 중요도 별 인간적 통제(human-in-the-loop)’와 같은 변수를 다루며 AI 혁신 기술 논의가 공정성 및 책임성 담론과 결합함을 반영하였다(Grønsund & Aanestad, 2020; Katzenbach, 2021). 마지막으로 알고리즘·AI 기술이 다원적 담론과 숙의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통해 민주주의 체계 내 불평등 심화를 일으키는 현상에 주목하였다(Jungherr & Rauchfleisch).

본 연구에서는 기술 진보와 민주주의의 영향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인과관계 검증 절차 순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인식 패턴의 이질성을 분류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변수들이 잠재집단 소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조모델 분석 결과, 알고리즘·AI 기반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민주주의 핵심 기능인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 인식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낙관적 기술결정론과 제도 불신의 병존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들이 AI 기술 혁신에 대한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대한 불안, 절차적 투명성 저하, 시민 참여의 형식화 문제를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AI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알고리즘 거버넌스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알고리즘·AI 기술에 대한 긍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기대 인식이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경로는 기술 진보가 민주주의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기술 낙관주의(techno-optimism) 관점과 연계된다(Danaher, 2022). 그런데 분석

결과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 인식을 매개로 하는 부정적 간접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경로 구조(double mediation path)를 확인하였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경로의 부정적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민주주의 제도 작동에 대한 신뢰가 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민주주의 기대 형성에 중요한 중재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고신뢰형’, ‘부분적 신뢰형’, ‘불신형’, 세 집단을 추출하고, 집단 간 알고리즘·AI 기반 기술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적용한 결과, 나이와 직업이 집단 분포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 기대 인식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우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민주적 정치 환경 내에서 알고리즘 기술의 효과적인 수용과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AI·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민주주의 기대감에 미치는 다층적, 이중 경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술 혁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동시에 위험성에 관한 현실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기술 혁신에 따른 민주적 가치의 변동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AI 거버넌스 관리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제3장 디지털 폴리아키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제1절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과 적용

1. 디지털 폴리아키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디지털 전환은 21세기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중대하고 복합적인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AI,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유통 구조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규범, 시민참여의 방식, 공공성의 구성 원리 등을 재편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으로 공고화되면 스스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국에서 관찰된 민주주의 퇴행은 이러한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Cheeseman et al., 2024).

이와 같은 시대적 전환 속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Dahl, 1971)이 제안한 ‘폴리아키’(polyarchy) 개념은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취약성을 진단하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폴리아키는 이상적 민주주의와 현실 정치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포용성/참여’(inclusiveness)와 ‘경쟁’(contest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설정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이 두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기존 폴리아키 개념의 유효성과 그것을 넘어서 확장 필요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참여’의 렌즈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을 조망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 정치적 주변부에 있었던 청년, 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온라인 청원, 해시태그 운동, 크라우드펀딩 등의 디지털 실천은 기존 제도 바깥에서 의제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며, AI는 이를 지원한다. 예컨대 AI 챗봇은 시민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함으로써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다국어 번역 기능은 언어 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참여는 ‘참여의 역설’(paradox of participation)을 야기한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면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시민을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에 가두어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킨다. AI를 활용한 봇 부대(bot army)는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다수의 목소리를 가장하여 시민의 자율적 판단을 왜곡하며, 정치인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Panditharatne et al., 2025). 즉, 참여의 양은 증가했지만 그 질은 불투명하고 취약해졌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응답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폴리아키는 이러한 이중성과 역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포용성은 단순히 참여의 증가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 질적 기반—숙의 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자율성의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건강한 참여 구조가 성립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데 유효하다.

폴리아키의 두 번째 핵심 차원인 ‘경쟁’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기반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시민들이 실질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은 단순한 다당제 존재를 넘어 구조적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이 경쟁 구도를 재편하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AI는 정치 캠페인을 개인 맞춤형으로 정교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권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후보자나 신생 정당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AI 생성 콘텐츠 등은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원을 독점한 일부 후보자나 정당은 여론 형성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나,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퍼뜨려 경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식으로 민주적 경쟁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Warthon, 2024).

이러한 위협은 경쟁이라는 요소가 단순히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를 넘어, 그 경쟁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정당한 절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상기시킨다. 달의 경쟁 개념을 디지털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인식하여, 이 장에서는 폴리아키 개념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장

한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AI와 플랫폼 기술이 참여와 경쟁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축에 추가하는 구조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영향 속에서도 민주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원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개념적 틀이다(Khan & Zaheer, 2024).

디지털 폴리아키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차원—① 시민참여의 포용성, ② 경쟁의 민주성, ③ 제도에 대한 통제 가능성 및 신뢰—를 중심으로 회복력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한다. 이 프레임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기술이 민주적 회복력의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실천 전략을 포함한다.

첫째, 단순한 참여의 양적 지표를 넘어, 다양한 사회 계층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회복력의 핵심 조건으로 설정한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자원, 정보 해석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등 참여의 기반을 구성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의 발언권이 플랫폼의 설계 논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지 참여 기회의 보장만으로는 포용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포용적 참여란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즉 참여의 동등성과 효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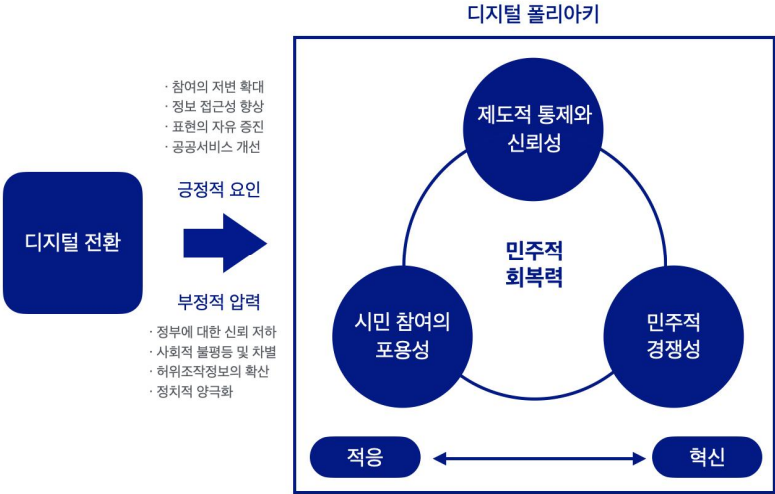
둘째, 민주적 경쟁성의 회복은 단지 다양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존재하는 형식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왜곡과 알고리즘 조작을 억제하는 정보 생태계의 구조 개입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플랫폼이 특정 정치 성향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광고 알고리즘이 자본력에 따라 노출 빈도를 차별화하는 경우, 이는 경쟁의 조건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따라서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콘텐츠 생산·유통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정보 노출 알고리즘의 설계와 감시 체계 구축이 경쟁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이다.

셋째, 제도적 신뢰의 기반은 기술 통제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AI와 알고리즘이 정치적 의사결정, 행정 절차, 선거 캠페인 등 공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

에는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의 수립, 독립적인 AI 감시기구의 설치, 디지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기술 기업에 대한 외부 평가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공적 기술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기술의 통제를 기술의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 정당성과 신뢰 회복의 문제로 위치 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도화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

결국 이 세 가지 차원은 상호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구조적 회복력을 구성하는 유기적 축이다. 참여의 포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쟁은 왜곡되고, 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통제 불가능한 기술 환경은 포용성과 경쟁 모두를 위협하게 된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기술 생태계에 적응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그림 3-1] 디지털 폴리아키 프레임워크



2. 민주적 회복력의 동적 과정

오늘날 민주주의는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지속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내적 탄력성, 즉 민주적 회복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제도적 존속이나 체제의 생존 여부를 넘어, 민주주의가 핵심 원칙—시민의 자유, 권력의 분산, 공정한 경쟁, 책임성과 투명성, 정보의 개방성 등—을 유지하며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문화적 능력을 포괄한다. <표 3-1>에 나타나듯이 학자들은 민주적 회복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두 축을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제도적 복원력으로, 정치적 충격이나 위기 상황에서 헌법, 의회, 정당, 선거, 사법 등의 기본 제도가 무너짐 없이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적 복원력으로 시민적 덕성, 관용, 신뢰 등 민주주의 문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재생산되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적 회복력은 단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변화된 조건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적응과 변형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Holloway & Manwaring, 2023).

<표 3-1>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정의들

저자	정의	강조점
Burnell and Calvert(1999)	공식적인 가치와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범이 민주주의 이상에 적대적으로 작용하거나, 사회의 많은 요소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도, 민주적 이상에 대한 애착이 지속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이상이 옹호되는 상태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가치적 헌신
Sisk(2017)	유연성, 복원력, 적응력, 혁신성이라는 속성을 통해 복잡한 도전을 해결하고, 생존 또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응하며, 전체적인 지속성과 전반적인 질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유능한 체제	체제의 적응성과 전반적인 기능 유지
Lozano et al.(2021)	혼란을 흡수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체제의 통합성을 훼손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성 유지
Meléndez and Kaltwasser(202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공격하는 정치 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것. 권위주의화나 체제 붕괴 시도를 피할 수 있는 능력	권위주의 회귀의 저지

저자	정의	강조점
Merkel and Lührmann(2021)	민주주의 체계, 그 제도, 정치 행위자, 시민들이 외부 및 내부의 도전, 스트레스, 공격에 대해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세 가지 잠재적 반응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변화 없이 버티는 것, 내부적 변화를 통해 적응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 조직, 절차를 잃지 않으면서 회복하는 것	저항, 적응, 회복의 대응 전략
Lieberman et al.(2022)	극단적인 양극화의 출현과 같은 중대한 충격을 견뎌내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본 기능들—선거 책임성, 대표성,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효과적 견, 집합적 의사결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역량	민주주의 핵심 기능의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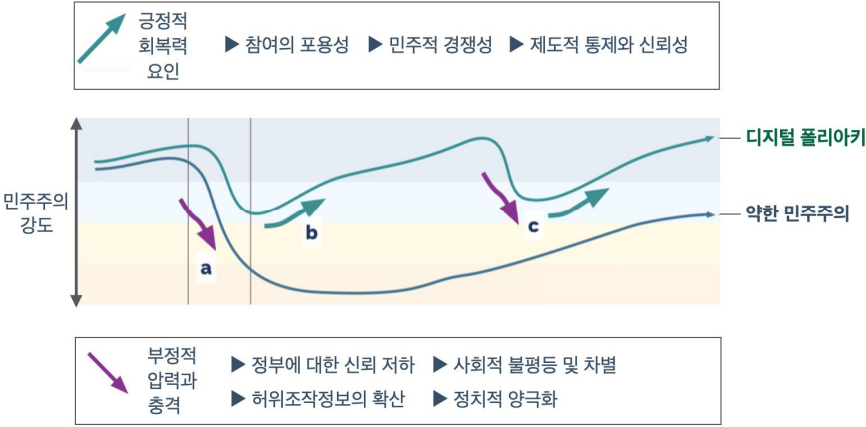
자료: Holloway and Manwaring(2023)

회복력 개념은 전통적으로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이나 생태학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의 틀에 갇혀 왔다. 이들 개념은 시스템이 충격 이후 기존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안정 상태로 재편된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회복력 논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이를 정치·사회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이론적 한계가 드러난다. 첫째, 충격 이후의 복귀가 동일한 취약성을 유지한 채 반복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둘째, 변화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새로운 정상’(new normal)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셋째, 회복력 논의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능력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동적 변화 가능성이 축소되며, 넷째, 회복력을 정치와 무관한 기술적 개념으로 다룸으로써 권력관계와 불평등 구조 등 사회적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비가시화하고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격과 위기를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실제 사회·정치 시스템의 비선형성, 예측 불가능성,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다(Holloway & Manwaring, 2023).

따라서 민주적 회복력은 기존의 기술주의적 회복력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와 충돌, 권력과 갈등, 주체성과 제도 설계를 포괄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나은 질서로 도약하고, 기존 제도를 갱신하며, 민주주의를 재정의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민주적 회복력은 단기적 복원력을 넘어 적응과 혁신의 정치적 구성물이다.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민주적 회복력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디지털 기술은 일회적이고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누적적이고 구조적인 재편을 유발하는 전환의 힘이며, 민주주의는 이에 대해 고정된 방어 구조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허위조작 정보, 감정 알고리즘, 정치적 양극화, 플랫폼 권력 강화, 사회적 불신의 확산 등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면서도 그 형태와 경로는 비가시적이며 비정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태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민주적 회복력은 단선적인 복귀가 아닌 다층적·순환적인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

[그림 3-2] 동적 체계로서 디지털 폴리아키



자료: Biddle et al.(2025)를 바탕으로 수정

위 [그림 3-2]는 민주적 회복력을 고정된 상태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속성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강도(y축)가 시간(x축)에 따라 어떻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지를 꺾은 선 형태로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보통 부정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약화되지만, 회복은 점진적이며 불안정한 과정을 거친다. 지점 a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부정 압력을 나타내며, 예컨대 세계적 경제 위기나 국제 분쟁, 팬데믹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회복력 있는 디지털 폴리아키는 참여의 포용성, 민주적 경쟁성, 제

도적 통제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점차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거나 강화하는 궤적을 그리며 지점 b로 이동한다. 반대로 회복력이 약한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분열과 정책 혼란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퇴행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회복되는 경로를 밟는다. 한편 지점 c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국지적 부정 압력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치스캔들, 제도적 과실이나 부패, 자연재해 대응 실패 등과 같은 사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회복력 있는 디지털 폴리아키는 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제도개혁과 혁신을 통해 더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Biddle et al., 2025).

이는 디지털 전환 시기의 민주주의가 압력과 충격 속에서도 회복되거나 퇴행하는 다양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회복력의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폴리아키는 세 가지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회복력을 구현해야 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다. 기존의 민주주의 평가지표는 선거의 공정성, 표현의 자유,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같은 정태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치과정의 왜곡—알고리즘 편향, 정보 편중, 정서적 양극화, 참여의 비대칭성 등—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식한다. 따라서 회복력은 이러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동적 진단 체계, 즉 정보 신뢰도, 알고리즘 투명성, 참여의 다양성 등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의 지표가 필요하다(Biddle et al., 2025).

둘째,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적 위협은 제도적·인지적 차원까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알고리즘 감시 및 공적 책임 강화와 같은 기술적 대응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 허위조작정보 대응, 플랫폼 정치광고 규제 등과 같은 법·제도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Panditharatne et al., 2025; Citron & Eichensehr, 2024). 특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는 회복력의 핵심이다. 시민은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공론장의 감시자이자 민주주의 설계의 창조자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McSwiney et al., 2025).

셋째, 적응 가능한 학습 기반 구조로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빠른 속도, 높은 불확실성, 비선형적 확산 구조를 가지므로, 민주주의는 고정된 시스템이 아

나라 ‘살아 있는 제도’(living institutions)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특정 위협 신호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Biddle et al., 2025). 선거 기간 중 특정 해시태그와 알고리즘 노출 빈도의 상관관계를 감지하거나, 혐오표현의 급증을 정책 반응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민주적 회복력은 단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학습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구조적 역량이다.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외부 충격에 맞서는 수동적 회복력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회복력을 요구받고 있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이러한 능력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이론적 좌표계로 기능하며, 민주주의가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나은 질서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동적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3.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의 적용: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전략

디지털 폴리아키는 기존 정치제도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복합적 충격 속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개념적 틀이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지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디지털 위기의 구조적 본질을 포착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폴리아키는 포용적 참여,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 그리고 민주적 회복력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설계를 지향한다.

첫째, 시민참여의 포용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공간을 정서적 반응 중심의 일시적 동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숙의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 시민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이슈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참여는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감정적 반응에 편중되며 종종 피상적이고 분절적인 형태에 그치고 만다. 특히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격차는 사회적 약자나 비도시권, 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포용적 참여 기회 구조의 형성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시민 누구나 배경이나 조

건과 무관하게 공론장에 접근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참여 인원을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참여 기회의 평등을 실질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 접근성 높은 공공 플랫폼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참여 경로 설계, 지역 기반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디지털 공론장이 특정 계층의 언어, 시간, 기술 환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경우, 플랫폼 알고리즘의 편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노출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용적 참여 구조는 시민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의미 있게 관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기에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은 ‘숙의적 회복력’(deliberative resilience)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서도 단순히 제도적으로 존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적 숙의의 과정을 유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숙의적 회복력은 단순히 다양한 의견의 병렬적 존재를 넘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시민 간 상호 존중과 논의를 통해 공론화되고, 제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포함한다. 숙의적 회복력이 강한 민주주의는 감정적 분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정당 간 협력의 파괴 등과 같은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숙고와 상호 존중 기반의 대화, 제도 간 조정 능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정보에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 반대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와 공론장이 필요하다(McSwiney et al., 2025).

디지털 폴리아키의 실천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재설계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숙의의 질을 높이며, 제도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포용적 참여 구조 없는 숙의는 엘리트주의로 기울고, 숙의 없는 참여는 감정적 동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와 숙의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적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정보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생태계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인지적 기반이자, 제도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시민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

보의 출처와 맥락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알고리즘 편향, 감정 기반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정보의 질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서로 다른 현실 인식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공통의 사실을 기반으로 숙의하거나 협력하기가 어려워진다.

신뢰 가능한 정보 생태계는 단순히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상이한 관점을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해석적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숙의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공론장의 인프라를 구성한다. 결국 정보 생태계의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참여, 숙의, 경쟁, 통제라는 핵심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정보의 왜곡이 아닌 정보의 공유와 상호검증을 통해 유지된다.

셋째, 기술에 대한 통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AI와 알고리즘은 선거, 여론 형성, 행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개입이 시민들에게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통제는 단지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Biddle et al.(2025)은 이와 관련해 신뢰받는 제도의 핵심 조건으로 정당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시한다. 신뢰받는 제도는 시민이 제도의 결정과 절차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된 대응과 신속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 적응성과 공공성과의 정렬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려는 제도적 중립성,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이 갖춰져야 제도가 단지 기능하는 장치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신뢰의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

넷째, 민주주의는 외부 충격을 단순히 견디는 체제를 넘어, 스스로를 갱신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외부의 직접적 위협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 저하, 사회적 양극화, 정당 간 협력의 붕괴 등 내부적 취약성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기 학습과 적응 능력을 내장한 동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시스템이 아닌 '살아 있는 제도'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토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다양한 디지털 위기 시나리오를 공동 설계하고, 실제 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주도적 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OECD의 회복력 진단 모델을 참고하여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회복력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에 반영하는 순환적 피드백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시민 단체, 기술 기업, 정부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책 및 기술 설계 단계에서부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략을 고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를 방어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조치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계기로 민주주의를 재설계하고, 더 나은 질서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자기갱신적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회복을 넘어선 정치적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차원은 상호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를 전제로 하며 통합된 민주주의 회복 구조를 구성한다. 포용성이 결여되면 경쟁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왜곡되고,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약화된다. 나아가, 통제되지 않는 기술 환경은 참여와 경쟁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폴리아키는 이 네 요소를 선형적으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구조적으로 얹힌 하나의 설계 원리로 통합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복합 회복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제2절 포용적 참여와 숙의적 회복력 증진

1.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 구축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두드러진 위기 중 하나는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사이의 괴리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사안에 반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지만, 이러한 참여는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정서적 반응 중심의 단발적 동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짧은 댓글, 해시태그 운동, ‘좋아요’ 클릭과 같은 활동은 정치적 관심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지만, 숙고와 토론을 거쳐 공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와는 거리가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의미 있게 관여하고 있다는 경험은 약화되고, 정치적 냉소와 제도 불신이 확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민주적 신뢰성 회복의 중요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무작위 추출과 층화표집을 통해 모집된 시민 집단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숙의하며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주적 혁신으로 여겨지고 있다(Elstub & Escobar, 2019). 그러나 시민의회 역시 비용, 규모, 참여 지속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화가 쉽지 않은 한계를 지녔다. 이 지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이 AI를 결합한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이다.

AI,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시민의회의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모집과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료 요약, 토론 촉진, 합의문 도출, 대중 소통에 이르기까지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McKinney, 2024). 이러한 통합이 주는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번역, 자료 단순화, 질의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의사소통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AI는 학습자료를 요약·정리하고, 반대 논거를 제시하며, 실시간 토론 질을 측정하여 시민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숙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시민의회가 수십~수백 명 규모에 머물렀다면, AI 지원을 통해 수천 명 단위의 대규모 숙의가 가능해지는 등 제도적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은 참여 민주주의의 규모와 질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Tessler et al.(2025)은 ‘하버마스 숙의 장치’(Habermas Machine)라고 불리는 AI 중재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 AI가 민주적 숙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하지만, 규모의 한계와 시간·비용 부담, 그리고 참가자들 간의 지식 격차라는 제약을 안고 있었다. 하버마스 숙의 장치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 전반에 AI를 통합한다. 먼저 참가자들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AI는 이를 분석해 여러 개의 그룹 진술문 후보를 생성한다. 이후 참가자들이 각 후보 문장을 평가하여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문장이 초기 합의문으로 선택된다. 그러나 여기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은 초기 합의문에 대해 빠진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비판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AI는 이를 종합해 수정된 진술문을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이 수정된 진술문을 다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초기 합의문과 수정된 합의문을 비교·투표하여 최종 합의문을 확정한다. 이러한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한 다수의견 집계에 그치지 않고 합의문의 포괄성과 정교함이 점차 강화된다. 특히 AI는 토론 내용을 요약·구조화하고, 소수 의견이나 반대 논거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여 집단사고를 예방한다. 그 결과, 하버마스 숙의 장치는 인간 중재자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통 기반을 도출했으며, 참가자들의 승인을 또한 더 높았다. 나아가 소수 의견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도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 시민의회가 단순히 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정치적 평등과 숙의의 질적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잠재력을 지님을 보여준다. 다만 동시에 소수 의견을 과대 반영하거나, 알고리즘 편향과 투명성 부족 등의 위험도 동반될 수 있음이 드러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I를 시민의회에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빠르게 참여시키는 효율성만을 중시해서는 안 되며, 그 과정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성(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시민 통제(참가자들이 실제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숙고된 판단(정보와 토론에 기반해 충분히 깊이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투명성(과정과 결과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가)과 같은 민주적 가치뿐 아니라, 효율성과 확장성 같은 제도적 효과까지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민의회가 민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AI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편향이나 환각(hallucination), 그리고 기계 의존의 과도함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McKinney, 2024).

디지털 시민의회는 1) 모집, 2) 학습, 3) 숙의, 4) 의사결정, 5) 후속조치라는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AI를 적절히 결합할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적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McKinney, 2024). 먼저 모집 및 기획 단계에서 AI는 인구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표성을 최적화하고, 자동화된 참여자 관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시민의회의 핵심 조건인 대표성이 강화되며, 실제로 참여 가능한 시민을 보다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시민의회가 표집 단계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의제 설정에서는 전문가나 주최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컸던 것과 달리, AI 기반 군집화 기술은 광범위한 시민 의견을 수집·분석해 보다 민주적인 의제 설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초기 단계부터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AI가 전문가 자료를 요약하거나 난이도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지식 격차를 줄인다. 실시간 질의응답, 다언어 번역, 음성인식 기능 등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모든 참가자가 숙의 과정에 필요한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간 검증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참가자들이 AI 생성 정보를 비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에서는 AI가 발언을 요약하고 논점을 구조화하며 반복되는 논거를 탐지·정리해 토론의 질을 높인다. 동시에 소수 의견이나 반대 논거를 자동으로 제시해 집단사고를 예방하고, 발언 빈도나 감정 톤을 분석해 참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대규모 인원을 소그룹으로 분할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AI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숙의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균형 있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AI가 참가자들의 선호를 분석하고 합의 지점을 시각화하여 집단적 판단을 돕는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와 결합하면 절차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책 결과 시뮬레이션은 선택의 실제 영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합의문을 AI가 직접 산출하는 것은 기계가 시민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민들의 재검토와 비판적 숙의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단계에서 AI는 권고안을 요약·번역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

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정책의 채택과 시행 여부를 자동 모니터링한다. 또한 시민 피드백을 수집·분석해 다시 공론장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결과의 투명성과 제도의 책임성을 확대한다.

〈표 3-2〉 디지털 시민의회 5단계별 AI 활용 방안

단계	기존 역할	AI 활용 방안	기대 효과
1. 모집 및 기획	층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시민 대표 모집	- 인구통계 데이터 기반 대표성 최적화 - 자동화된 참여자 관리 - 모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모집의 효율성 강화 및 대표성 제고
2. 학습	전문가·이해관계자 발제, 자료 학습	- 문서 요약·단순화 -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 실시간 질의응답 제공 - 번역·접근성 기능 (다언어, 음성인식 등)	정보 접근의 평등 보장, 숙의 기반 강화
3. 숙의	회의촉진자 지원 하에 공적 이유 교환	- 발언 요약 및 논점 구조화 - 반복 논거 탐지 및 정리 - 소수 의견·반대 논거 자동 제시 - 토론 질 평가(발언 빈도·톤 분석) - 대규모 토론 소그룹 분할·통합	숙의의 질적 심화, 참여의 형평성 보장
4. 의사결정	합의·투표를 통한 권고안 도출	- 선호 분석 및 합의점 시각화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보조 - 정책 결과 시뮬레이션 제공	투명하고 정당성 있는 의사결정 촉진
5. 후속조치	권고안 공유 및 정책 반영	- 권고안 요약·번역(맞춤형 버전 제공) - 정책 채택·시행 여부 자동 모니터링 - 시민 피드백 분석 및 환류	결과의 투명성 강화, 제도의 책임성 확대

자료: McKinney(2024)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AI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대표성·평등성·투명성·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보조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AI를 시민의회에 결합하는 것은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숙의의 질을 높이며, 민주적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혁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민주적 신뢰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며 최종 결

정권과 책임은 시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하고, 데이터 출처·요약 기준·합의 도출 방식 등 AI의 작동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표집과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보정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참가자들이 AI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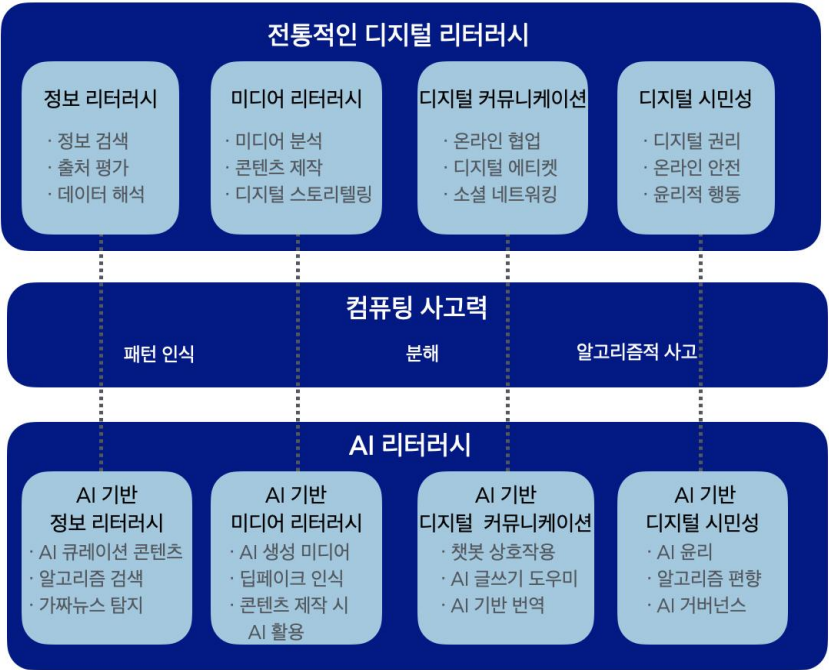
한국은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을 실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나 국회·지방정부 차원에서 축적된 공론조사 경험 등이 중요한 제도적 자산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시민의회가 민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의 구축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숙의적 회복력을 제도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공적 속의 과정을 유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AI는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인간의 숙고와 비판, 투명성과 포용성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민의회는 참여와 숙의, 인간과 AI, 효율성과 정당성 사이의 균형 속에서만 민주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도적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경험을 다시금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을 통한 디지털 역량 증진

디지털 전환은 민주주의의 참여 구조와 공론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위협을 낳고 있다. 특히 AI의 확산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민주적 참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을 통한 디지털 역량의 증진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다.

[그림 3-3]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



자료: Baskara(2025)

전통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 출처 확인, 미디어 분석, 온라인 협업과 같은 기본적 기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AI 시대에 이 정의는 근본적인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제 시민들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그 결과가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해야 한다. AI 리터러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다. 예컨대, AI 기반 정보 리터러시는 알고리즘 기반 검색 결과의 편향성을 인식하고, AI가 선별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AI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콘텐츠의 확산 속에서 진위 판별 능력을 요구한다. AI 기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챗봇과 AI 번역기의 보편화 속에서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디지털 시민성은 AI 윤리, 알고리즘 거버넌스, 데이터 권리와 같은 문제를 민주적 논의의 일부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AI 리터러시는 전통적 리터러시의 확장이자 심화된 형태이며, 시민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Baskara, 2025).

일차적으로 이러한 AI 리터러시는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초등 학교 단계부터 학생들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진적으로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제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패턴 인식, 큰 문제를 잘게 나누는 분해, 그리고 문제 해결을 단계별로 설계하는 알고리즘적 사고와 같은 기초적 훈련을 통해 AI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skara, 2025).

전통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를 검색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알고리즘 추천과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조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지적 탄력성'(cognitive resilience)은 AI 리터러시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프리벙킹'(pre-bunking)과 '예방 접종'(inoculation)이 강조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에게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형과 조작 기법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론장에서 정보를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AI 리터러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AI 기반 콘텐츠 생성과 알고리즘 추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허위조작정보나 딥페이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소셜 플랫폼이 AI 기술을 활용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제안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된다. 인지적 탄력성을 키운 시민은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위협을 걸러내고 공론장의 질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 이는 허위조작정보의 영향을 줄이고, 민주적 담론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Romanishyn, Malytska, & Goncharuk, 2025).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개발 차원을 넘어 시민 참여의 포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참

여 격차는 곧 리터러시 격차와 직결된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비도시권 주민 등은 기술적 인프라뿐 아니라 리터러시 수준에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공론장은 특정 집단의 언어와 경험에 편중되며, 이는 민주적 신뢰성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은 기술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이자 제도 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신뢰성은 시민들이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믿을 때 유지된다. 그러나 AI 기반 행정 시스템이나 정치적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불투명하게 작동한다면 시민들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리터러시의 출발점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출처), 어떻게 사용되는지(정책),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는지(추적 가능성)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AI는 '블랙박스'처럼 내부 작동 과정을 알기 어려운데, XAI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XAI를 포함하면 시민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AI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이나 대출 심사 같은 사례에서 XAI는 AI의 판단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도 그 논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XAI 기술을 개발·보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Tsarouhas & Grigoriadis, 2025).

리터러시를 개인의 자발적 능력 향상에만 맡긴다면 사회경제적 격차는 곧바로 디지털 역량 격차로 전환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책 설계, 온라인 공론장의 운영, 데이터 개방 플랫폼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리터러시의 제도화는 민주적 평등 보장, 책임성 강화, 민주적 회복력 확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시민이 공적 담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국가가 보장할 때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가 유지된다. 또한 시민이 기술적 결정을 감시·비

판할 수 있어야만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실질화된다.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숙의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2022. 12)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했다. 2010년부터 디지털 역량 프로젝트를 시작한 EU집행위원회는 2022년에 '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2.2'(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itizens: DigComp 2.2)를 발표해 유럽 각국이 AI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리터러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김여라, 2025). 핀란드, 캐나다, 호주 등은 국가 전략을 수립해 학교 교육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반에 이를 통합했다(이정민, 2023).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IT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AI 시대의 민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기술 활용 능력, 알고리즘 감시 능력, 민주적 참여 역량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국가적인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축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초·중등 교육과정에 AI의 기본 작동 원리와 사회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미래 세대가 일찍부터 디지털 시민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행정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XAI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하게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 데이터센터와 오픈소스 기반 도구를 확대하여 누구나 디지털 공론장과 공공서비스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를 시민권의 핵심 요소이자 민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권리로 제도화한다. 나아가 이는 포용성과 숙의적 회복력을 갖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작동하며, 한국이 디지털 전환기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3.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

행정, 의료, 금융, 복지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이 새로운 사회적 기본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가 일상화될수록,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 주민 등 사회적 약자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격차에 직면한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기기 보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 서비스 접근 방식, 디지털 사회 적응 속도에서 발생하는 질적 격차로 전환되고 있다(김일우, 2025). 따라서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적·제도적 기반의 확립은 디지털 포용을 위한 근간이다. 2024년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의 접근성을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방지할 의무를 국가와 사업자에 부과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 알 권리, 건강권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디지털포용법」 제19조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첫 시도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능정보사업자는 웹사이트, 모바일 단말기 소프트웨어, 무인정보 단말기(KIOSK), 전자출판물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이 취약계층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접근성 관련 지침과 표준을 고시하여 시장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접근성을 개인의 선택이나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김일우, 2025).

디지털 접근성 품질인증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는 시장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국가기관이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면, 접근성을 고려한 기술·서비스가 공공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인증제도가 형식적 요건 검증에 그칠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실질적 접근성 지표와 주기적 재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접근성 품질 인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제도적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수단

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는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핵심 원칙이다. 무인정보단말기가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보편화되었지만, 작은 글씨·높은 화면·복잡한 절차는 여전히 고령층과 장애인에게 장벽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키오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모바일 앱, 공공 웹사이트, 전자출판물 등 전반에서 반복된다. 따라서 보조 인력이나 음성 안내와 같은 임시 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보편적 설계 원칙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글자 크기·색 대비 조정, 직관적 UI, 음성인식 및 안내 기능,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포용적 혁신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참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즉, 기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공공서비스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사회적 포용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함께 취약계층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 데이터센터와 오픈소스 기반의 접근성 도구 제공, 디지털 참여 실습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한 이용을 넘어 능동적 참여 역량을 강화한다.

플랫폼 설계에서의 보정 장치도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시간·비용·인지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I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가 개인의 언어 능력이나 학습 수준에 맞추어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복지·금융 서비스에서 자동화된 안내와 보조 기기 연동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편의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독립적 사용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 기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아날로그 접근권의 보장은 디지털 포용과 병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행정 등 헌법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대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병원 예약, 복지 신청, 행정 민원 처리에서 전화·방문 접수와 같은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민주적 신뢰성 확보와 직결된다. 공공서비스와 공론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참여 기회가 제한될 경우, 사회적 약자는 민주적 참

여의 장에서 소외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민주주의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수용하며 포용성과 속의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는 기술적 배려를 넘어 시민권 보장의 핵심 인프라이자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제3절 공정한 정치경쟁과 정보 다양성 보장

1. 알고리즘 투명성과 편향 감시 체계: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 설립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콘텐츠 배포, 정보 노출, 정치 광고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막대한 알고리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편향 가능성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Kokshagina, Reinecke, & Karanasios, 2023).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치부할 수 없다. 알고리즘은 정보 환경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양극화를 증폭시키고,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적 해악’(systemic harm)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시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동시에,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방치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에 필수적인 개인 및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 기반 해악’(rights-based harm)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은 단순한 시장 실패나 기술 결함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이다(Cupać & Sienknecht, 2024).

현재 한국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를 플랫폼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8월부터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혁신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협의체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자율규제 모델을 논의해왔다(과기정통부, 2025). 자율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나 외부 전문가가 플랫폼 기업의 규범 설정 및 이행 과정을 감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은,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책임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율규제 체계는 이행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 내부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알고리즘의 설계 원리, 정치 콘텐츠의 노출 구조, 선거기간 중 정보 분포의 변화

등은 모두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되기 어렵고, 기업이 제공하는 제한적 정보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플랫폼들은 종종 규제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규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도, 알고리즘 작동의 핵심 원리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감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Kokshagina, Reinecke, & Karanasios 2023).

이와 관련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가 야기한 사회적 해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알고리즘 통제의 공공 규범 부재는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이 시급한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Cupać & Sienknecht, 2024).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가 바로 EU의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European Centre for Algorithmic Transparency, ECAT)이다. ECAT는 DSA에 근거해 EU 집행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독립 감시 기관으로, 거대 플랫폼(VLOPs)의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노출 체계, 정치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CAT는 단순한 기술 진단을 넘어,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피드백을 제도화하는 공공정책 기구로 기능한다.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위험 평가 보고서, 알고리즘 설계 문서 등을 검토해 공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고리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¹¹⁾ 이처럼 ECAT는 정보 배열 권력(informational curation power)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플랫폼에 대해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Aytac, 2024).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ECAT 모델을 준거로 한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가칭)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와 설계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그 작동 원리를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정기적 감시와 위기 대응 체계를

11) https://algorithmic-transparency.ec.europa.eu/about_en

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 시민사회, 학계,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중행위자 협의체로 구성되고, 정부는 규제자라기보다는 조율자 및 후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플랫폼이 설정한 알고리즘 운용 원칙과 실제 노출 결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 공정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영향평가’(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AIA)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알고리즘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다. 또한, 기술 진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사전(pre-release) 및 사후(post-release) 대응 체계를 갖추으로써, DSA의 위험관리 기능을 한국적 맥락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 첫째, 알고리즘 감사(audit)를 통해 정치적 편향, 콘텐츠 노출의 형평성, 차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훈련 데이터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정 요구권, 설명 요구권 등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고, 언론인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알고리즘 훈련에 있어 알 권리와 공정 보상권을 보장한다. 셋째, 알고리즘 영향평가 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기술 엘리트 중심의 통제를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기반을 확립한다.

위원회는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갖춘 준공적(quasi-public) 기구로 설계되어야 하며, 법제도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 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의무 부과가 필요하며, 자율규제 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도, 정책 협약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및 AI 거버넌스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율규제라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 기반 자율규제 모델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는 기술 규율을 위한 장치라기보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감독받는 자율성’(supervised autonomy)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시민은 플랫폼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정보 환경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는 알고리즘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하지 않도록

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알고리즘 기술이 정치적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려면, 공공의 책임성과 시민의 감시가 결합된 제도적 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표 3-3〉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의 설계 방향

구분	핵심 내용	구체적 설계 요소
기능	알고리즘 감사	- 정치적 편향, 콘텐츠 노출 형평성, 차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수행 - 훈련 데이터와 설계 원리의 투명한 공개 및 외부 접근 보장
	이용자 권리 보호	- 설명 요구권, 수정 요구권, 이의제기 절차 보장 -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의 알 권리 및 공정정보상권 제도화
	시민사회 감시 기제	- 알고리즘 영향평가 절차에 시민사회 및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기술엘리트 중심 통제를 민주적 감시 체계로 전환
운영 방식	다중이해관계자 협치 구조	- 일반 시민, 시민사회,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기술 전문가, 학계,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모델 - 정부는 조정자 및 후원자 역할 수행
	준공적 기구로 설계	- 자율규제 기반을 유지하되, 정보공개·감시·평가 등에서 일정한 법적 책임 부여 - 자율과 책임의 균형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정기 보고 - 사전 및 사후 위험 평가체계 마련
제도적 효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	-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 정치적 평등성 회복 - 알고리즘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 실현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	- 선언적 자율규제를 검증 가능하고 시민의 감시에 열려있는 투명성 기반 자율규제로 전환
	위험 대응 능력 강화	-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

2. 정치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 규제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 포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치정보를 소비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뉴스, 토론, 정책 콘텐츠는 대부분 알고리즘의 추천을 거쳐 사용자에게 도달한다.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 관심사, 성향 등을 분석해 개인화된 정보 환경을 구성하며, 이로써 각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화는 정보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콘텐츠만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민주적 공론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보 환경의 구조적 편향은 단순한 정보 편식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초래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특정 방향으로 왜곡된 정보 추천은 유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정치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선거 시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치적 중립성과 알고리즘 개입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정보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여, ‘블랙박스 효과’를 유발한다. 이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보를 선택하고 배제하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렵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책임 소재를 추적하거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된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대한 수많은 데이터—예컨대 연령, 지역, 클릭 이력, 선호 콘텐츠—를 수집하여 이른바 ‘선별된 속성’(curated attributes)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추천 방식은 정보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주적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다(최경미, 2025).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정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에코 챔버 현상으로, 자신과 유사한 의견만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폐쇄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필터 버블로, 사용자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구조는 시민이 상이한 의견을 접하고 토론하는 공적 공간을 해체시키며,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알고리즘은 단지 편향된 정보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는 진실된 정보보다 약 10배 빠르게 확산되며, 정치 관련 허위정보의 전파력은 특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경미, 2025). 이는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허위정보에 근거해 폭력적 사건이 발생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Sun(2023)은 이러한 현상을 ‘알고리즘적 허위조작정보’라 부르며, 추천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를 강화하고, 생성형 AI가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허위 콘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 형성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정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양한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평등권, 선거운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들이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최경미, 2025).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볼 때,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 성향을 향해 사용자를 유도한다면, 이는 개인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비가시성으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평등권과 관련하여 알고리즘은 기술적으로 콘텐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므로, 소수 정당이나 비주류 후보자의 콘텐츠가 노출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학습 데이터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예컨대 성차별, 인종차별—이 알고리즘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챗봇 ‘이루다’ 사건이나, 구글 포토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고릴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은 알고리즘이 갖는 구조적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지만, 알고리즘 기반의 마이크로타겟팅 방식은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 간 선거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 경쟁 조건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더라도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영업 비밀이자 핵심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공익을 위한 비례적 제한이라면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면, 그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제이며,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최경미, 2025).

정치정보 알고리즘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접근되고 있다. EU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DSA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s, DMA)을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24년 제정된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타겟팅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ransparency and Targeting of Political Advertising, TTPA)은 정치광고의 개념을 확장하고, 민감 정보 기반 타겟팅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정치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EU 「AI법」은 선거나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최경미, 2025).

반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어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는 플랫폼이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 「알고리즘 책임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등 규제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최경미, 2025).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시장 중심 규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Sun, 2023).

한국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통해 정치광고에 대한 일부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은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통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차등적 규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치적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EU의 TTPA와 같이 마이크로타겟팅 정치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한국적 맥락에 맞는 독립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원칙과 실행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국제적 입법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정치 환경과 기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최경미, 2025).

첫째, 정치정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추천 기준, 노출 순위 결정 방식 등에 대해 플랫폼이 이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체계를 넘어, 유권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필터링되고 전달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가능성 확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알고리즘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소수 정당이나 비주류 후보의 콘텐츠가 알고리즘 구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노출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주체군이나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균형 잡힌 콘텐츠 노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알고리즘 감시 체계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 등을 통해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을 상시 평가하고, 정치적 편향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알고리즘 변경 또는 운영 개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공기관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플랫폼의 자의적 개입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정치적 중요성을 반영한 알고리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주로 명시함으로써, 정치정보 알고리즘을 차등적 규율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는 EU의 「AI법」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며,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한 규범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고, 디지털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 조건의 개선을 의미하며,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정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정보의 편향적 유통을 줄이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가 시민에게 도달하게 되면, 유권자는 특정 진영의 논리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숙의 역량을 높이고, 합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추천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플랫폼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조작 의혹이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선거 시기와 같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국면에서 알고리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이 보장되면,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디지털 플랫폼이 단지 상업적 정보 중개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알고리즘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주적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제와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법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조정의 산물이다(Gorwa, 2021). 한국 역시 이에 준하는 규제 모델을 공론화하고,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3. 정당 내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공적 통제가 디지털 정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부적 제도 개입이라면, 정당 내 디지털 민주주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대표성과 정당 내부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려는 과제에 해당한다. 정당은 전통적으로 시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기구로서, 정치적 대표성의 형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유권자 충성도의 약화, 정치 불신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연결 기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며, 정당은 새로운 정당성을 확

득해야 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Farrell, 2025).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정당 조직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온라인 투표, 전자 당원총회, 소셜미디어 기반 정책 토론 등 디지털 기반의 직접 참여 방식이 정당 운영 전반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당의 개방성을 높이며 정치적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실질적인 숙의와 권력 분산 없이 디지털 기술만을 수용할 경우,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의한 권력 집중, 당원 의견 왜곡, 정치의 개인화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Gerbaudo, 2021).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급부상한 이른바 ‘플랫폼 정당’—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프랑스의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 등—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당원과 지지자의 참여를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경직된 위계 구조를 해체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 기반의 조직 운영을 통해 정치 혁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곧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 토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종종 ‘초(超)지도자(hyper-leader)’가 ‘슈퍼베이스(superbase)’라 불리는 열성 지지층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는 통로로 작동했다(Sandri, 2025). 온라인 투표는 지도부가 의제를 설정하고 이분법적 선택지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라 상징적인 참여로 변질되었다(Gerbaudo, 2021). 그 결과 디지털 민주주의는 숙의적 합의의 공간이 아니라, 지도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신임 투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기술이 단지 참여를 촉진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특정한 권력관계와 운영 논리에 따라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은 정당 구조 내 숙의, 참여, 권력 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전반적 건강성과 신뢰에 직결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참여의 양극화’를 초래하거나, ‘소수 의견의 소거’를 촉진하는 구조로 작동할 경우, 정당은 더 이상 민주적 대표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어렵다. 즉,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증진되지 않으며, 숙의적 가치와 제도적 균형을 내포한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다(Invernizzi-

Accetti & Wolkenstein, 2017).

정당의 디지털화는 모든 영역에서 균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각 정당의 특성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Sánchez Medero(2025)는 남유럽 정당들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며, 정당 디지털화가 ‘리버럴’, ‘참여’, ‘선거’, ‘숙의’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각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정도는 정당의 민주적 의지와 전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리버럴 차원은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지도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과 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의미한다. 이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은 주로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 예산과 재정 운영 내역에 대한 온라인 예산 보고 시스템, 지도부 및 주요 인사의 재산 공개 자료, 정기적인 온라인 질의응답 플랫폼 등을 통해 지도부에 대한 수평적 감시 기능을 제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비교적 용이하며,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리버럴 차원의 디지털화는 정보 제공의 상향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당원들이 정당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핵심적인 의사결정 권한이나 정치적 권력의 분산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낮다. 따라서 이 차원은 정당 디지털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실현되는 영역이며, 외부로는 정당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할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참여 차원은 당원들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정당의 일상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며, 정책 제안 제출, 캠페인 기획, 모금 활동, 지역 단위 활동의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예컨대, 당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관심 이슈에 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제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당 차원의 공식 논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조정 플랫폼도 도입 가능하다.

참여 차원은 정당에게 조직 동원 능력을 강화하고, 당원과 지지층의 활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영역이다. 당원의 활발한 참여는 곧 정당의 정치적 생명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원 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간·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실시간 소통과 반응이 가능해진다. 이 차원에서의 디지털화는 숙의보다는 기능적 동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많은 정당들이 당원의 자발성과 참여를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참여의 질적 심화가 결여될 경우, 이는 형식적·단발적 참여로 귀결될 위험이 존재한다.

선거 차원은 정당 내 핵심 권력을 구성하는 후보자 공천 및 당직자 선출과 관련된 영역으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차원 중 하나이다. 온라인 경선, 전자 투표 기반의 당직자 선출 시스템, 후보자 정보의 공개 및 비교 플랫폼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존 지도부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 특히 후보자 선출과 당직자 임명은 정당의 정치적 방향, 정책 기조, 공천 구조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도부는 이 영역에서의 기술적 개입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기술이 의도하지 않은 권력 이동을 촉진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 차원에서의 디지털화는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영역이며, 종종 지도부 주도의 제한적 실험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 영역의 디지털화는 당내 권력 분산과 공정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숙의 차원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가장 도입이 어려운 영역이다. 이 차원에서는 당원들이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판단을 형성해 나가는 숙의적 토론 구조가 핵심을 이룬다. 즉, 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인 상호작용과 정치적 학습을 통해 당내 의견의 다원성과 공론의 형성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숙의 차원의 디지털화는 정당의 전통적 운영 방식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숙의는 필연적으로 권력 구조에 도전하게 된다.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가진 정당은 토론의 개방성과 상호성, 예측 불가능성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숙의형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온라인 숙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참여자의 역량, 정보 비대칭, 토론의 품질, 토론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 구현이 매우 어렵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다자간 의견을 효율적으로 집계하고 시각화하며,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숙의 차원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한 핵심적 안전장치이며,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구조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지원, 교육 프로그램, 실험적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정당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숙의 기반 디지털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 내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정당의 조직 문화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첫째, 숙의적 토론 문화 조성과 ‘정치 실험실’ 지원이 필요하다. 정당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정보의 전달과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온라인 투표나 설문조사는 당원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특정 정책이나 안전에 대한 당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의견 형성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숙고하거나 상호토론을 거치기보다는, 개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클릭이나 선택으로 표현할 뿐이다. 이로 인해 표면적인 참여가 활성화되더라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의 과정을 제도적, 기술적으로 정당 내부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숙의는 단순히 의견 교환이 아니라, 시민이나 당원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동의 문제 인식을 형성하며, 최종적으로는 공통의 판단 기준에 도달하려는 상호이해적 소통과 판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숙의는 정당 운영의 수직적인 지휘·집행 구조를 넘어서, 당원 개개인이 능동적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나는 디지털 숙의 플랫폼의 구축 및 보급,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숙의 공간의 제도화, 곧 ‘정치 실험실’의 운영이다.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당원 간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숙의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당들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게시판이나 댓글창 수준의 플랫폼은 토론의 심화나 정책적 합

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표 3-4>와 같은 기능을 포함한 고도화된 숙의 기술이 필요하다(Novelli et al., 2024). 이와 같은 플랫폼은 정당의 규모나 기술 역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또는 독립 공공기관이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정당에 무상 제공하거나, 민간 플랫폼 도입 시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3-4> 정당 내 디지털 숙의 플랫폼 설계 방향

설계 요소	내용
AI 기반 토론 분석 도구	수많은 의견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핵심 쟁점을 요약하거나 주요 의견 간의 대립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토론의 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자 다양성 보장 메커니즘	토론 참여자가 소수의 강성 의견 주도자에 의해 편향되지 않도록 지역,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설계된 참여 구조
페이싱(pacing)과 라운딩(rounding) 시스템	토론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도록 하여 의견 형성과 수정, 반론, 합의 형성 등 과정을 구조화
결과 연계 시스템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안에 반영되거나, 정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도록 연결 고리를 제도화

디지털 숙의 플랫폼이 온라인 참여를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라면, 오프라인에서는 숙의 문화의 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의 알테르나티베티(Alternativet)당이 운영한 ‘정치 실험실’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들은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쟁점을 다각도로 토론하고, 정책 초안을 공동 작성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 짓는 구조를 운영했다. 정치 실험실의 핵심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당원들이 스스로 정책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정책 공동체’로 기능하는 것이다(Sørensen, 2021). 이러한 경험은 당원들에게 숙의적 전문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동시에 길러주는 훈련장이 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원과 유권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Biale & Bistagnino, 2024).

둘째, 정당 내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충실한 반대파’(loyal opposition)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참여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특정 의견이나 정서의 과잉 대표를 불러올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당 조직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각광받지만, 때로는 지도부의 일방적 의사를 추진하는 절차로 기능하거나, 지배적인 다수 의견에 의해 소수의 입장이 억압되는 구조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의 지지 기반을 가진 지도부나 특정 이슈 그룹이 플랫폼을 주도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내 정치적 다양성과 비판적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의 구조화다. 현재 많은 정당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지만, 다층적 의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론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신 숙의적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대 의견도 단순한 비동의로 치부되지 않고, 그 이유와 대안이 함께 제시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Sánchez Medero & Sánchez Medero, 2025). 예컨대, 토론 플랫폼 상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 ‘반대하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용 가능하다’와 같은 다중 응답형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질적 의견 형성과정을 정당 내부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의사결정의 제도적 분산도 핵심 과제다. 종종 지도부는 온라인 투표를 활용해 ‘신속한 당론 형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플랫폼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지도부 중심의 통제 시스템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발의 절차를 구성원들에게 개방하고, 소수 의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식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 설정 절차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이 온라인 청원을 통해 안전을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사전에 다수/소수 양측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충실한 반대파의 존재는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 숙성의 징표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구조와 제도는 정당 내부 민주적 거버넌스의 회복을 위한 핵심

장치이다.

셋째,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 참여’(pseudo-participation)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진정한 참여의 장으로 기능하려면, 이를 사용하는 당원 개개인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원들의 정치적 역량과 숙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화는 오히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참여, 이른바 유사 참여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당원이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숙의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클릭 한 번으로 찬반을 표하거나 자동화된 설문에 응답하는 식의 표면적 참여에 그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율적 숙의와 책임 있는 결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당내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원의 역량 강화다. 당원은 단지 정책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정당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로서, 플랫폼 작동 원리,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 정보 조작과 편향의 식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다. 둘째, 미디어 비평 능력을 배양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수용할 때 사실과 감정, 논거와 인식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숙의적 토론 기술로서, 논쟁적 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정리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면적 교육을 통해 당원은 단순히 ‘선호를 표현하는 존재’에서 ‘집단 의사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Sandri, 2025).

이와 더불어, 디지털 숙의 장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당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내 의견이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다. 만약 플랫폼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배경이 모호하다면 당원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점차 정치적 무관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신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면, 투표 내용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거하고 참여자의 익명성과 공정

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양지수, 2024). 이외에도,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참여 데이터의 시각화, 토론 주제별 편향 분석, 익명성 보장 장치 등은 플랫폼에 대한 당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당 내 디지털 민주주의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혁신을 통합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정당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당의 디지털 전환이 기술 효율성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숙의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하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제하며, 다층적인 집단 토론을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 기술은 단순한 여론조사나 투표 시스템과는 차별화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정당이 복잡한 정책 쟁점에 대해 더 숙고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당 내부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이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네트워크 등과의 디지털 거버넌스 실험을 통해 정당은 내부 민주주의의 범위를 넘어 외부 민주적 생태계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당이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공동 개발·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외연을 시민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당 디지털 민주주의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이는 참여 구조, 숙의 수준, 기술의 공정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포함해야 하며, 정당들이 자율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정당 간 건강한 민주주의 경쟁을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수단적 변화가 아니라 민주적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정당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더 숙의적이고 대표성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 민주주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4 절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 구조 개선

1.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 회복 해외 사례

21세기 민주주의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선거, 정당, 의회와 같은 전통적 정치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알고리즘 기반 정보유통 구조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인 시민 참여와 정치적 경쟁의 규범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Levitsky & Ziblatt, 2018). 특히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에서 관찰된 민주주의 퇴행은 전통적 공고화 이론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켰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제도적 위기가 아니라, 오늘과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보환경과 기술 구조가 민주주의의 질적 기반을 어떻게 약화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절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 회복(resilience)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과 설계 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 제시한 디지털 폴리아키 분석틀을 적용한다. 디지털 폴리아키는 참여의 포용성,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형성한다. 포용성이 결여되면 경쟁은 특정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경쟁이 불공정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신뢰가 약화되면 참여 자체가 위축되거나 극단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차원의 균형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외 사례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성공 사례의 나열’에 있지 않다. 민주주의 회복 전략은 각국의 정치문화, 제도 구조, 사회경제적 조건, 기술 인프라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증(e-ID)과 블록체인 기반 행정은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소규모 국가에서 제도화되었기에 가능했지만, 인구 대국이거나 디지털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맥락적 제약과 기회 요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민주주의 회복의 필수 조건인지, 아니면 보조적 촉진요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분석 대상인 우크라이나, 독일, 에스토니아, 대만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 유형, 인구 규

모, 경제·기술 발전 수준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모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 구조를 개선하려는 실험을 제도 차원에서 시도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일부 국가는 디지털 폴리아키의 세 차원을 균형 있게 구현했고, 다른 국가는 특정 차원에서 독창적 혁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공통된 설계 원리와 차별화된 경로를 동시에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절은 각 국가 사례를 다음 세 가지 분석 질문에 따라 검토한다.

〈표 3-5〉 디지털 폴리아키 분석틀 3대 평가 축과 질문

시민참여의 포용성	디지털 전환이 청년, 소수자, 지방 거주민 등 전통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을 참여로 끌어들이었는가?
민주적 경쟁성	정보 접근과 표현 기회가 정치적 경쟁을 왜곡하지 않고 공정하게 보장되었는가?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	디지털 전환이 시민과 제도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기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는가?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해외의 선진사례를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형 디지털 민주주의 회복 전략 수립에 적용 가능한 원리와 설계 조건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기반 시민 참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알고리즘 편향, 정보 신뢰성 저하, 정치적 양극화 등 디지털 환경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포용성 확대, 공정한 경쟁 보장, 제도 신뢰 구축의 조건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법·제도·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혁 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해외 민주주의 회복 사례를 디지털 폴리아키 분석틀에 따라 시민참여의 포용성,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회복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정책적 근거로 제시된다.

2. 우크라이나-Diia 플랫폼: 리더십 회복 사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제도적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물리적 폭격은 행정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였고,

대규모 인구 이탈은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2022년 3월 기준,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체 인구의 25%가 국내외로 이주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구 대표성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행정 효율성도 급격히 저하됐다(Axios, 2022). 전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 기능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 제도적 정당성 유지, 사회적 통합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를 방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Collier & Levitsky, 1997).

이러한 위기 대응의 철학은 사실상 인터넷의 기원과 궤를 같이한다. 인터넷은 1960년대 말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ARPA)이 핵 공격 상황에서도 통신망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ARPANET에서 기원했다(Leiner et al., 2009). 당시 설계 철학은 ‘중앙이 파괴되어도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분산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는 군사적 회복력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네트워크 유지에 오늘날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 참여를 유지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설계 원리로 확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Diia 플랫폼은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자신분증 발급,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운전면허증 관리 등 일상 행정 서비스 중심이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침공 이후 전시 특화 기능을 추가하며 재편되었다. 피란민 지원 신청, 피해 신고, 전쟁채권 구매, 선거 절차 유지, 정부 공지 전달 등 위기 대응 기능을 신속히 통합하였다. 이는 전통적 오프라인 행정 체계가 붕괴될 때에도, 디지털 네트워크가 중앙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 사례는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 기반이 손상된 상황에서도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인터넷의 군사적 기원에서 비롯된 ‘위기 속 네트워크 유지’라는 설계 철학이,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현대적 회복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킨다(Howard, 2020). Diia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단절 위기에 놓인 정부-시민 간 연결고리를 복원했고, 물리 인프라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가능하게 했다.

Diia의 작동 방식은 디지털 폴리아키의 민주주의 회복 메커니즘을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시민참여의 포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Diia 앱은 약 1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2022년 말까지 등록 사용자 수는 2,170만 명으로 증가했다(EGA, 2021). 이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시사한다. 해외 피난민 역시 온라인을 통해 행정구역 이동 후에도 동일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교육·보건 혜택을 계속 신청할 수 있었고, 해외 피난민 역시 온라인을 통해 정부 공지를 받고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구조는 ‘물리적 거리의 단절’을 ‘디지털 연결’로 대체하며, 전시 상황에서도 정치·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라는 한계는 뚜렷했다.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 중 상당수는 스마트폰·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되어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포용성의 완전성을 저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iia가 전시 참여의 문턱을 낮춘 대표 사례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민주적 경쟁성의 시각으로 살펴볼 때,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일부 정치적 권리—특히 집회와 선거—가 제한된다. 우크라이나 역시 2022~2023년 동안 전국적 선거를 연기했지만, Diia를 통해 유권자 등록 데이터 유지와 정치 정보 제공은 지속되었다. 이는 향후 선거 재개 시 행정 복구 속도를 높이는 토대가 되었으며, 정치 경쟁성의 완전 중단을 막는 역할을 했다. 특히, 해외 피난민이 국외에서 유권자 정보를 갱신할 수 있었던 점은, 전후 선거의 포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었다. 즉, Diia는 정치 경쟁성을 ‘전면 보존’하지는 못했지만, 제도적 기반의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Howard, 2020).

셋째,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보고서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플랫폼 Diia를 “전례 없는 전시 상황에서 핵심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며, 정부-시민 간 신뢰를 유지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Diia가 전쟁 중에도 약 120개의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사회보장 수당 신청, 전자 신분증 발급, 피해 보상 신청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절차를 신속·안정적으로 지원한 점을 국가 회복력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World bank et al., 2023). 특히 전쟁 속에서도 선거 준비와 시민권 보장을 지속한 점을 민주주의 회복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Diia 사례는 디지털 폴리아키의 세 축—시민참여의 포용성,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을 전쟁이라는 극한 조건에서도 구현해낸 보기 드문 사례다. 물리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치

절차 기반을 유지하며,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플랫폼 기술의 한계 또한 뚜렷하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은 플랫폼 활용이 제한되었고, 사이버 보안 위협은 상시적인 위험 요소였다. 또한 계엄령 하에서는 일부 정치적 권리, 특히 집회와 정기 선거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Diia가 민주주의의 전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Diia 플랫폼은 위기 상황에서의 ‘부분적이지만 필수적인’ 회복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이 사례는 향후 다른 국가들이 위기 대응형 디지털 민주주의 전략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조 모델이 될 것이다.

3. 독일—연방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정당 회복 사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법(Grundgesetz)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복원하였으나, 21세기 들어 정당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응답성에 대한 의문이 누적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연방의원과 주요 정당은 투표율 하락과 당원 수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Bundeswahlleiter, 2021). 이는 시민들이 전통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치 과정에서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드러난 여러 정당의 재정 스캔들, 대표적으로 기민당(CDU)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사회민주당(SPD) 내 공천 비리 논란은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민들의 정당정치 불신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정당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확산시켰다. 이는 단순히 정치 참여 저하에 그치지 않고, 정당 정치 자체의 대표성과 응답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뢰 위기를 정당이 제도개혁으로 흡수하려 한 시도가 바로 연방의회 온라인 청원제도(Elektronische Petition beim Deutschen Bundestag, 이하 e-청원)이다. 이 제도는 2002년 사민당(SPD)-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연정의 정치개혁 아젠다 속에서 기획되었으며, 2003년 청원위원회 대표단의 스코틀랜드 현지 실사를 거쳐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Riehm, Böhle, & Lindner, 2011). 당시 연정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도 신뢰 약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원제도의 디지털화

를 논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의 온라인 청원 운영 경험이 직접적으로 참조된 것이었다. 이후 2005년 8월 온라인 청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8년 10월 독일 연방의회에서 정식 제도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순히 외부 동원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당과 의회가 시민참여를 제도적 틀 속으로 포섭·재구성한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단순한 청원 절차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공론통합모델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있다. 일정한 서명 요건(도입 당시 5만 명/4주, 2004년 개정 이후 3만 명/6주)을 충족한 청원은 청원자가 직접 연방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형성된 공론이 제도권 심의 과정과 결합되면서, 시민 참여가 단순한 서명 동원을 넘어 제도적 속의 구조속에 통합되는 경로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일시적 동원이나 다수결 청원제도와 같은 포폴리즘적 경향으로 흐르지 않고, 입법동의청원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전환시켰다. 즉, 시민 요구가 거리시위나 여론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라는 숙의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의 회복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송정재·장우영, 2020).

실증적으로도 제도의 성과는 확인된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거주 인구의 약 70%가 연방의회 청원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e-청원 플랫폼 등록자는 약 330만 명에 달했다(Riehm, Böhle, & Lindner, 2011).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약 31%가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 사회정책,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청원위원회 접수 건수는 9,26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고, 지지서명 건수 역시 약 72만 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의 활용도가 최근 다소 감소 추세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온라인 청원이 시민참여의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해당 사례는 디지털 폴리아키의 세 축을 균형적으로 구현한다. 첫째, 시민참여의 포용성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이 청원과 토론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요건 완화를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었다. 둘째, 민주적 경쟁성에서는 다양한 청원 주제가 의제화되어 다수 정당과 정치 행위자가 이를 둘러싼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셋째,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 차원에서 독립된 청원위원회가 청원의 심사와 공청회를 감독하며, 공개 절차를 통해 시민·정당·의회 간 신뢰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독일 e-청원은 단순한 디지털 행정혁신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가 스스로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참여 구조를 회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당이 민주주의 위기의 주체가 아니라 회복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 역시 디지털 참여 역량은 높지만 정당 민주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사례는 정당이 시민참여를 단순 동원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숙의적·제도적 과정에 편입시킬 때 포용성·경쟁성·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당 민주주의 회복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설계 원리가 될 수 있다.

4. 에스토니아—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선거 회복 사례

1991년, 에스토니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는 극도로 낮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은 제한적이었다. 이 시기 에스토니아에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민주주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국가 재건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당시 에스토니아의 행정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치 참여의 기반은 취약했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행정 인프라는 종이문서 기반 수작업에 의존했고,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은 시민 참여의 구조적 장벽이 되었다(Kitsing, 2011). 이러한 제약 속에서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라는 국가 비전을 세웠다. 1990년대 후반 추진된 ‘타이거 리프(Tiigrihüpe)’ 프로젝트는 교육과 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여 디지털 정부의 기초를 다졌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현대화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었다.

2002년,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신분증(e-ID) 제도를 도입했다. e-ID는 행정 서비스, 세금 신고, 건강보험, 은행거래, 그리고 전자투표까지 단일 인증체제로 연결하는 범용 인프라로 기능했다(박용범, 2018). 이를 통해 국민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시민 간 상호작용이 표준화되면서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 기반이 형성되었다(Kitsing, 2011). e-ID는 단순한 신분 확인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간의 디지털 사회계약(digital social contract)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였다.

이번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에스토니아의 민주주의 회복사례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i-voting(원격 전자투표)제도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전 국민 온라인 투표 제도로, e-ID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Madise & Vinkel, 2014, 문은영, 2022). 해외에 거주하는 에스토니아인과 물리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투표를 제고와 함께 선거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i-Voting은 지리적·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포용적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한 제도적 혁신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 전환은 민주주의 회복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첫째, 해외 거주자,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시민 등 물리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참여 경로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오프라인 선거가 가지는 지리적·물리적 장벽을 해소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전체 투표자의 약 44%가 i-Voting을 사용했으며, 이는 물리적·지리적 제약을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높였다(Valimised, 2019). 둘째, 정치 경쟁의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보장은 투표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을 사실상 제거하였으며, 이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동등한 규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 행정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였다. 모든 공공 데이터 접근·변경 기록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다(Tikk et al., 2008). 이는 행정 투명성을 ‘정책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의 i-voting은 포용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e-ID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참여 격차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 모델은 ‘물리적 제약의 해소’라는 긍정적 성취와 ‘디지털 접근성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의 경험은 국가 재건기에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민주주의

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독립 직후 제도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에스토니아는 e-ID-블록체인-전자투표라는 3단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투명성·참여·효율성을 제도화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했고, 에스토니아를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사례는 민주주의 회복이 단지 정치적 의지나 제도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혁신과 제도 설계가 맞물릴 때 얼마나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입증한다.

5. 대만-vTaiwan: 참여(공론장) 회복 사례

2014년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CSSTA)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없이 처리하려 하자, 시민들은 입법원을 점거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기를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정책 선호의 불일치”가 아니라 공론장의 제도적 신뢰 붕괴이자 대표, 참여, 숙의라는 민주주의 핵심 기능의 약화로 볼 수 있다(Habermas, 1996; Dahl, 1989).

이후 대만 사회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 의사결정에 재통합할 것인가”였다. vTaiwan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론장 재건 프로젝트로 등장하였다. 2014년 말,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해커 집단 ‘g0v’와 일부 정부 관료, 그리고 당시 신임 장관이었던 오드리 탕(Audrey Tang)의 주도로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는 온라인 숙의 플랫폼이 설계되었다(Tang, 2019). vTaiwan은 전통적인 청원제나 공청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숙의와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Pol.is’라는 AI 기반 토론 분석 도구를 활용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시각화하고, 쟁점별 공감대와 분열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갈등 사안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접근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폴리아키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시민참여의 포용성이다(Dahl, 1989). vTaiwan은 참여의 물리적·시간적 장벽을 크게 낮췄다. ‘g0v’ 해커 커뮤니티, 오드리 탕(Audrey Tang) 장관, 그리고 일부 개방적 관료가 협력하여 설계한 이 플랫폼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근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Tang, 2019).

특히 AI 기반 토론 분석도구 Polis의 도입은 기존 온라인 토론의 소모적 대립을 줄이고,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의견 교차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구조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물리적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포용성의 한계도 존재한다.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집단(주로 젊은 층, 도시 거주자)에 참여가 집중되었으며, 고령층이나 농촌 거주자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디지털 포용성의 확장이 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 접근성 지원 정책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폴리아키의 두 번째 축인 민주적 경쟁성 시각으로 vTaiwan을 살펴보면, vTaiwan의 설계는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쟁점별 합의 형성과정을 핵심에 두었다. 예를 들어 2015~2016년 우버(Uber) 도입 논란에서, 택시업계·우버 이용자·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안전 규제, 세금, 보험 기준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Polis가 제시한 시각화 데이터는 각 집단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논의를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정책 대안 경쟁의 장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경쟁성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상호 설득과 타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나, 합의안이 반드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안에서는 합의 결과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관료적 절차에서 변형·축소되어 반영되었고, 이는 경쟁성의 효과가 정치적 의지에 의존함을 드러냈다.

디지털 폴리아키의 마지막 축은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이다. vTaiwan은 투명한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했다. 모든 토론 내용, 데이터, 정책 권고안은 공개 저장소에 기록되며,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완전 개방형 투명성’은 플랫폼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였다(OECD, 2020). 또한 합의된 정책 권고가 관련 부처로 이관되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참여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 의사결정 과정에 연결되도록 했다. 다만, 최종 채택 여부가 정치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vTaiwan의 신뢰성은 운영 투명성과 기록 공개를 통한 ‘절차적 신뢰’는 확보했으나, ‘결과적 신뢰’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vTaiwan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경로는 명확하다. 첫째, 해바라기 운동 이후 붕괴된

시민-정부 간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 둘째, 온라인 환경을 통해 참여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론장의 대표성을 높였다. 셋째, AI 도구를 통해 합의 기반 정책 형성이 가능해졌다. 다수와 소수 의견의 접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했다. 넷째, 합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민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례는 기술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방적 정치 리더십이 결합될 때 디지털 공론장이 민주주의 회복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술만으로는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치적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절의 비교·분석을 통해 드러난 해외 민주주의 회복 사례들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정치제도적 맥락 속에서 기능하며,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제도 신뢰성, 참여 포용성, 민주적 경쟁성을 회복·강화하였다.

첫째, 우크라이나 Diia는 전시 상황이라는 극한 위기 속에서도 행정·참여 기능을 유지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정치제도의 지속성(sustainability)과 위기 대응 회복력(resilience)이 어떻게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 안보, 주권 수호, 시민권 보장을 통합하는 방식은 전시 민주주의(wartime democracy)의 제도 설계 측면에서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둘째, 독일의 e-청원제도는 제도적으로 복원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정당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룬 사례다. 독일의 e-청원은 단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서명 요건을 충족한 청원자가 직접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는 단순한 청원 제출을 넘어 공론통합모델 속에 편입되었으며, 정당·의회와의 상호작용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였다. 즉, 독일 사례는 정당 민주주의가 스스로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 참여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다.

셋째, 에스토니아 i-voting은 국가 정체성 재구성과 민주주의 회복의 과정에서 국가 e-ID와 PKI 기반의 블록체인 서명 체계를 결합해 선거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권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참여층을 확보하고 재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투

표의 자유와 정확성을 동시에 담보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자정부 전반에 걸친 법제·기술 인프라의 고도화와 장기적 신뢰 축적이 뒷받침되었으며, 투표의 무결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도에 내재화시켰다. 이는 기술 인프라가 민주주의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만, 여전히 디지털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는 포용성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

넷째, 대만 vTaiwan은 사회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공론장을 재구성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AI 기반 토론 분석과 시각화는 감정 대립을 완화하고 합의 형성을 촉진했으나, 최종 제도 반영 여부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 신뢰의 안정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디지털 공론장이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제도적 수용 메커니즘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분석 사례가 시사하는 공통점은 민주주의 회복이 단순히 국가적 위기 극복이나 제도 재 정착에 그치지 않고, 정당·선거·공론장 등 다양한 정치 영역에서 맥락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술적 도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치 제도와 결합될 때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개로 작동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강화 전략은 단일한 해외 모델의 적용이 아니라, 정치·사회·기술·문화 환경에 부합하는 복합적 설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표 3-6〉 해외 민주주의 회복 사례 비교

국가/프로그램	주요 목표	주요 수단	분석틀 3대 축
우크라이나 Diia	위기 상황 제도 기능 유지	모바일 플랫폼 기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위기 시 참여 연속성 확보 신뢰 회복
독일 e-청원	정당 민주주의와 제도 신뢰 회복	온라인 청원제도 청문회 제도화	시민참여 포용성 강화 경쟁성 확대 제도 신뢰성 강화
에스토니아 i-voting	선거 보안· 효율성 강화	국가 e-id pki 기반 블록체인 서명	참여율 제고 제도 신뢰성 강화
대만 vTaiwan	사회 갈등 합의 형성	온라인 속의 AI 분석·시각화	포용성 강화 합의 기반 신뢰 회복

제5절 민주적 회복력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불안정이 아닌, 정보환경·사회구조·정치문화 전반에 걸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알고리즘 편향, 허위정보 확산, 사회적 양극화, 권위주의적 통치 경향은 서로 맞물리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전제했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 유통의 속도와 범위가 압도적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위기의 확산과 증폭이 순식간에 발생하며, 사후 대응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개념이 민주적 회복력이다. 민주적 회복력은 단순히 훼손된 제도를 원상 복구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제도의 질적 향상과 시민 역량 강화로 전환시키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더 강인한 구조로 재설계하는 적응적 혁신(adaptive innovation)이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다.

최근 한국 민주주의는 네 가지 핵심 축—① 정당 민주화의 후퇴(팬덤정치), ② 공론장의 분열(태극기집회), ③ 리더십의 위기(비상계엄 사건), ④ 선거 신뢰성 저하(드루킹 사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고, 기술과 제도가 결합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해외에는 이미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성공적 회복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의 e-청원은 온라인 청원제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통합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대만의 vTaiwan은 AI 기반 디지털 속의 플랫폼으로 분열된 공론장을 재구성하였고, 우크라이나의 Diia 플랫폼은 전쟁 상황에서도 정부-시민 간 신뢰와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도화했다.

본 절에서는 리더십, 정당, 선거, 참여의 범주에서 국내 민주주의 위기 사례와 해외의 회복 사례를 매핑하고, 한국 적용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틀은 예방, 대응, 회복의 전 주기를 포함하며, 다중행위자 협치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

1.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위기 유형별 해외 사례－한국 적용 매핑

디지털 폴리아키의 세 축, 즉 시민참여의 포용성, 민주적 경쟁성, 제도적 통제와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구성하는 핵심 틀이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 세 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민주적 회복력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계기로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역량을 확장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prevention)·대응(response)·회복(recovery)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응 단계는 위기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신속·정확한 조치를 말하며, 법치와 인권 보장의 균형이 핵심 과제다. 디지털 시대의 위기는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얹혀 나타나므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시민사회·플랫폼 기업·언론이 함께 대응하는 협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위기 이전보다 제도·사회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도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신뢰 회복, 제도 개혁, 기술 인프라 개선, 시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딥페이크나 플랫폼 권력 집중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때, 신속하게 제도를 조정하고 실험할 수 있는 정책 샌드박스형 접근이 효과적이다.

① 예방: 위험의 조기 탐지와 사전 차단 메커니즘

민주적 회복력의 출발점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적 조치를 의미한다. 정치학적으로는 제도적 투명성, 정보 검증 시스템, 시민 교육,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의 ‘근본적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기에는 정치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적 혐오표현이나 온라인 조직적 허위정보 캠페인의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위험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2022년 출범시킨 ECAT(European Centre for Algorithmic Transparency)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는다(European Commission, 2022). ECAT의

분석 결과는 EU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 규제기관에 제공되어, 선거 시기 허위정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패턴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정치정보 위험 조기경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선거 시기 정보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알고리즘 작동방식과 정치광고 노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편과 연계될 수 있다.

② 대응: 교차적·통합적 거버넌스

디지털 위기는 기술적·제도적·사회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하므로, 단일 기관이나 영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시민사회, 언론, 플랫폼 기업이 협력하는 다중행위자 협치(multi-stakeholder governance) 구조가 필요하다(Macintosh, 2004). 우크라이나의 Diia 플랫폼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서비스, 시민 피드백, 개인 정보 보호, 전자투표 기능을 단일 디지털 허브로 통합하여 민주주의 기능을 유지한 대표 사례다. 이러한 모델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능적 연속성을 보장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한국 사례에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재난·정치 위기 시 시민이 실시간 신고·토론·정책 제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회복: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제도 유연성과 실험적 정책

위기의 형태와 경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치 딥페이크, 데이터 조작, 플랫폼 독점 구조는 기존 제도가 설계될 당시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샌드박스형 제도가 필요하다. 대만의 vTaiwan은 새로운 디지털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전문가, 시민이 온라인 속의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제도안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서도 지역 기반 디지털 공론장과 결합해 실험·확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3단계 모델을 각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별 매핑이 가능하다.

〈표 3-7〉 해외 사례와 대응 단계

범주	국내 위기 사례	해외 회복 사례	대응 단계
리더십	비상계엄 사건	우크라이나 Diiia 플랫폼	대응 회복
정당	팬덤정치	독일 e-청원	예방 대응 회복
선거	드루킹 사건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선거	대응 회복
참여	태극기 집회	대만 vTaiwan	예방 대응 회복

국내의 비상계엄 사건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우크라이나의 Diiia 플랫폼은 대응, 회복 단계의 상징적 사례다. 전쟁 상황에서도 행정·선거·공공서비스 기능을 디지털로 유지하며, 위기 이후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기적 위기관리뿐 아니라 장기적 제도 회복과 국가 재건의 기반을 제공한 경우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의 경우, 독일 연방의회 e-청원제도는 예방-대응-회복 전 주기에 걸쳐 작동한 사례다. 독일 e-청원은 정당 민주주의의 침식과 제도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플랫폼을 도입했고, 일정 서명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제도권 청문회로 이어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참여 요구에 즉각 대응했으며, 이후 제도화 과정을 거쳐 시민 참여를 안정적으로 흡수·통합함으로써 장기적인 회복과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

선거 신뢰성 위기에 대응한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는 대응-회복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드루킹 사건과 같은 여론조작·해킹 위협에 직면했을 때, 에스토니아는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했고,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장해 민주적 회복력을 제고했다(Madise & Vinkel, 2014)

마지막으로, 공론장 분열 상황에서 대만의 vTaiwan 플랫폼은 예방, 대응, 회복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다. 태극기집회와 같이 극단적 정치 양극화와 사회 분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vTaiwan은 AI 기반 속의 플랫폼과 다중이해관계자 협력 구조를 통해 갈등 의제를 조정하고, 정책 설계에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국내의 위기 거버넌스 적용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보면, 리더십 위기로 인한 정보 부재 상황에서는 중앙-지방 공동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서는 당내 의사결정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특정 지지층 독점 방지를 꾀할 수 있다. 선거 신뢰성 위기에는 유권자 인증·투표·개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론장 분열에는 AI 분석·합의 형성 시스템을 통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다.

2. 민주주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

위기 대응 전략은 위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국제 분쟁,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거시적 위기에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럽연합의 ECAT(European Centre for Algorithmic Transparency)와 같이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국제 감시 기구에 참여하거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통해 국가안보·정보보호·시민권 보장을 아우르는 대응을 설계해야 한다. 반면 정치 스캔들, 지역 재난, 특정 선거구에서의 사이버 공격과 같은 국지적 위기에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신속 대응 네트워크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온라인 정보 조작 의혹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감시단, 플랫폼 기업이 공동으로 조사와 정보 공개를 수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결국 디지털 전환기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crisis response governance)는 단순한 방어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를 민주주의 질적 도약의 계기로 전환하는 구조여야 한다. 기술과 제도, 국내외 협력, 시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민주주의는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폴리아키가 지향하는 포용성, 경쟁성, 신뢰성이 위기 속에서도 유지·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민주적 회복력은 기술과 제도의 결합, 국내외 협력,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한국형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예방-대응-적응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폴리아키의 세 축이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이 세 요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처·기관·영역 간 정보 단절, 책임 회피, 대응 속도

지연이 빈번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 거버넌스는 예방-대응-적응의 전 주기를 아우르며, 정부, 시민사회, 언론, 플랫폼 기업, 국제기구가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Macintosh, 2004).

이러한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중행위자 협치다. 국가안보, 정보통신, 선거관리, 시민역량 강화 정책이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전략 틀 안에서 연계·조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정책 설계, 감시, 실행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감독받는 자율성’이 구현된다.

〈표 3-8〉 한국 적용 및 협치 구조

위기유형	한국 적용 시나리오	다중행위자 협치구조
위기 리더십 부재	중앙·지방 공동 디지털 플랫폼 실시간 정보 공유	정부+학계+시민+언론
정당 민주화 위기	당내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도입 투명성 확대 특정 지지층 독점 방지	정당+기업+선관위+시민
선거 신뢰성 저하	유권자 인증·투표·검증 블록체인 적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선관위+기업+시민
공론장 분열	AI 분석·합의 도출 갈등 사안 온라인 속의 시민-정부 간 정책 공론화	시민사회+정부+기업+학계

위기 리더십 부재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정보의 부재’와 ‘정보 비대칭’이다. 재난,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의 확산 등 복합적 위기 환경에서는 초기 대응 시점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Haddow et al., 2021). 한국형 대응 시나리오는 중앙-지방 공동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플랫폼의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는 데이터 분석 및 위기 상황 예측 모델을 제공하며, 시민언론은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보도를 통해 정보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다중행위자 협력 구조는 정보의 신뢰성과 확산 속도를 동시에 높이며, 위기 대응의 골

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지만,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특정 계파의 권력 독점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한다(Michels, 2001). 한국 적용 시나리오는 전자투표와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IT기업과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가 함께 기술적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은 참여의 장벽을 낮추지만, 동시에 보안과 조작 가능성의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다중행위자 간의 견제와 협력은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혹과 불신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한국형 대응 시나리오는 유권자 인증, 투표, 개표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선거 사례는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적 효과를 동시에 보여준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적용할 경우,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전환은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선관위, 정치권, IT기업, 감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 구조는 이러한 제도화 과정을 견인하며,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디지털 공론장은 의견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열과 극단화를 심화시키는 장이 되기도 했다(Sunstein, 2018). 한국형 시나리오는 AI 분석과 온라인 속의 플랫폼을 활용해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시민-정부 간의 정책 합의를 촉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시민사회, 학술기관, 플랫폼 기업,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공론의 질을 높이고,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넘어, 신뢰 회복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된다. 대만의 vTaiwan 플랫폼은 이러한 접근이 사회적 신뢰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회복력은 기술·제도·시민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낸다.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방어적 대응을 넘어, 위기를 민주주의 질적 도약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촉매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해외 성공 사례의 제도·기술·참여 구조를 조합하고, 이를 자국 환경에 맞춰 법·제도로 제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회복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국내 정치제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 진단 및 평가

1.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의 재구성

디지털 전환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 운영 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정치 참여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치소통이 확대되었다. 제20대 및 21대 대통령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며 유튜브, 소셜 미디어 기반 정치 담론이 제도 정치 담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정치제도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디지털 폴리아키의 개념을 차용한다. 본 연구에서 다원적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 환경과 결합해 다양한 참여 경로와 권력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Berg et al., 2021; Tucker et al., 2017). 이와 같은 매개적 이해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거버넌스와 제도적 조정 역량을 모색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서술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위기의 층위(미시, 중시, 거시)와 디지털 폴리아키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경로를 연계하여, 한국 정치제도의 대응 수준을 참여 및 대표성, 공론장 질서, 거버넌스 적응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기술 인프라는 새로운 디지털 참여 양식을 제도권 참여와 접합시키며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정보의 질적 관리·책임성·조정비용 등의 과제를 제기한다(Berg et al., 2021).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행위자에게 발화권을 부여하고 전통적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지만(Nelson et al., 2017), 플랫폼은 규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도구로 기능하며, 동일한 매개 구조가 동원·감시·배제 등 상반된 효과를 보일 수 있어 권력이 분산뿐 아니라 재배치, 경합의 형태로도 나타난다(Tucker et al., 2017).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 노출과 네트워크 속성은 정보 확산과 참여 간 상호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분극화와 허위정보 확산 위험을 증폭시켜 공론장의 질을 위협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송경재·장우영, 2023). 디지털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 인프라 생태계는 민주주의 제도·실천을 단순 보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비선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규범적 위험을 포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Pfetsch, 2020). 이에 본 연구에서 1) 참여 및 대표성-비용 절감과 표현의 확장에 따른 진입 구조의 변화(Yamamoto et al., 2020; Deseriis, 2021), 2) 공론장 질서 - 알고리즘·콘텐츠 조정과 시민 규범의 긴장 관계(McCarthy et al., 2023), 3) 거버넌스 적응력-기술과 제도적 응답성 간 관계(Chung & Wihbey, 2024)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국내 정치제도의 대응 현황과 문제

가. 참여·대표성

1) 다수결 기반 청원으로 인한 여론 왜곡과 양극화 고조

한국의 온라인 청원제도는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참여 비용의 급격한 절감과 표현의 확장을 제도 참여에 접합시키며 정치적 진입 구조를 재편하였다. 이는 과거 오프라인 기반 청원이 가진 접근성·동원 비용의 제약을 크게 낮추어, 다양한 사회집단이 비교적 손쉽게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의회를 상대로 요구를 표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저비용·대규모 동원이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은 역설적으로 수치 기준 중심의 다수결 논리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합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편향된 집단 동원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청원 성공이 곧 합리적 논증이나 사회적 타당성의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참여의 양적 확대가 대표성의 질적 심화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단절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소셜미디어의 노출 구조는 감정적·분쟁적 이슈를 과대표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확증편향·선택적 노출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극단적 주장에 대한 관심과 동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다만 실제 온라인 정치 뉴스 소비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념적으로만 폐쇄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들이 주류 언론과 대안 매체, 소셜미디어를 오가며 교차적으로 소비하는 특징을 보인다(Nelson & Webster, 2017).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구조는 감정적·분쟁적 이슈를 과대표집하고 허위정보가 빠르게 증폭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잠재성을 갖는다(Tucker et al., 2017). 결과적으로 청원→플랫폼 확산→정치적 동원의 순환이 분극화의 가속과 여론 왜곡으로 귀결될 위험이 커진다. 즉, 청

원 성립 이후 제도적 심의·검증·피드백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을 경우, 참여로 표상된 ‘다수의 의사’는 정책결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일시적 여론으로 소비되며, 오히려 참여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참여가 제도와 연결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취약해진다는 지적과, 알고리즘과 플랫폼 구조가 절차적 책임성 없이 참여와 동원을 증폭시킬 경우 민주주의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온라인 청원은 참여 기회의 평등을 확대했지만, 출구(심의·책임·연계)의 부재가 겹치면 여론의 왜곡·양극화·정치적 피로를 동시에 유발하는 이중적 효과를 낳는다.

2) 공직선거 신뢰 저하와 선거현대화 정책

공직선거는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 축이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나타난 정보환경의 불안정성은 선거 과정·결과에 대한 인지적 의심을 구조화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정보·조작·조직적 동원이 낮은 비용으로 확산되며, 이용자들은 선택적 노출과 반향실을 통해 상반된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연구에서 과장된 측면이 지적되기도 하지만(Nelson & Webster, 2017),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양극화와 허위정보 확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존재한다(Tucker et al., 2017).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진위와 무관하게 제도 전반의 신뢰가 저하되며, 선거 이후 불복 정서가 사회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

신뢰 회복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auditability)과 절차 투명성을 제도 설계에 내재화하는 데 달려 있다.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원격 전자투표(i-Voting)를 도입하면서도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가 정확히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사후 감사 체계를 결합해 기술 혁신과 민주적 정당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물론 이러한 검증 가능성은 무기명 투표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으나, 에스토니아는 재투표 제도, 제한적 검증 앱, 독립적 사후 감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시사적이다. 또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반의 무결성 담보 기술은 거버넌스 설계·책임·표준화와 결합될 때 비로소 신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지배구조(거버넌스)와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양지수, 2024). 즉, 한국의 선거 현대화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검증 가능한 데이터 경로, 투명한 공개 절차

차, 독립적 감사, 위협 대응 훈련을 묶은 제도적 패키지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도입 그 자체보다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우선 요구한다.

3) 숙의형 시민참여 정책과정 플랫폼 비활성화

참여의 양적 확대가 대표성의 질적 심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제 발굴-정보 제공-토론-합의 형성-정책 반영의 일련의 숙의형 정책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노출·확산 알고리즘과 콘텐츠 조정 규범(표현의 자유, 이용자 권리, 공익 보호)이 충돌하고, 즉각적 관심과 반응을 극대화하는 단기적 주목경제가 심층 토론을 주변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공론장은 정파적 매개 구조 속에서 이슈가 빠르게 소비·대립되며, 생활정치 차원의 숙의적 참여가 제도적 절차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단순한 참여의 양적 확대가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로 자동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참여와 숙의의 제도적 설계, 알고리즘·거버넌스의 규범적 조정, 공론장의 자율성 보장이 상호 결합되어야만 민주적 정당성의 심화를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의견 표출·투표형 플랫폼을 넘어, 정보의 질 관리·상호이해 촉진-합의 도출-책임 있는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설계가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 조건이다. 디지털 참여는 비용 절감과 표현 확장의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를 대표성과 책임성으로 전환하려면 (1) 사실 정보와 근거 제시를 촉진하는 설계, (2) 상반된 관점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숙의 촉진 구조, (3) 결과를 정책 과정과 연계하고 피드백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규범·알고리즘 투명성과 시민 규범이 제도적으로 접목되지 않을 경우, 숙의는 다시 선별적 확산과 분열의 논리에 흡수되어 겉모습만 남고 실질적 기능을 잃은 형식적 숙의로 전락하기 쉽다. 한국의 참여 플랫폼은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숙의·정책 연계·책임의 사다리가 취약해 대표성의 질적 개선이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단순 참여 확장이 아니라, 정보·규범·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갖출 때 비로소 민주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공론장 질서

1) 행정기구 주도 온라인 내용규제 기능 부전

전통적으로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는 사회와 미디어의 두 차원이 교호하며 추진되어왔다. 뉴미디어 등 온라인 내용규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차원은 내재적 논리와 외재적 논리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즉 해당 사회의 사회정치적 전통, 관행,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표준적 준거를 수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미디어 차원은 유형별 특성과 이용자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구분이 대표적이며 온라인 내용규제는 매우 논쟁적이다.

한국의 내용규제는 역사, 원칙, 실행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과거 정보화 추진에서 물질 발전에 경도되어 그 역기능을 성찰하지 못한 채 행정 주도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의 소위 정보통신확립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도화 이후 경로의존적으로(path-dependently) 방송통신위원회로 기능이 계승되었다. 둘째,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적 자원-특히 시민사회의 감시와 교육 및 시장의 구속력 있는 행동강령-을 규제시스템으로 구조화하지 못하고 행정규제에 경도됨으로써 특히 정치적 논란이 큰 이슈를 더욱 악화시켰다. 셋째, 이러한 실태는 점차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상기의 문제점에 토대해서 플랫폼·AI 고도화 환경에서 내용규제 개선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심의 권한의 탈행정화를 목표로 전향적인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통신심의 기능을 합리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국내 제도와 글로벌 규제 정책의 정합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와 자국의 이익과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대립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의 정책을 정립해야 하는가에서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셋째, 허위조작정보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팩트체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현실을 진단하고 보완적 혹은 대체적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는 현행 정보통신심의 기능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규제 입법의 불안정성과 규제 효용 저하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근거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으나, 방만한 중복 입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점차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수렴되는 동향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2025. 6. 4.) 이후 9월까지 제안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두 31건이었고, 이 중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의안은 6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안은 다음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4-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현황

주요 내용(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12948)	차지호	2025.9.12.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 도입(12936)	한민수	2025.9.12.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버לק카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12818)	조인철	2025.9.9.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12605)	정일영	2025.9.2.
유튜브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12388)	김우영	2025.8.26.
정치이슈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12378)	한정애	2025.8.26.

첫째, 최근의 허위조작정보 입법 동향은 문제인 정부에서 제도정치와 언론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한 가짜뉴스 정국을 연상케 한다. 당시 가짜뉴스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20대 국회에 수십건의 의안이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등 근절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입법 실적 0건¹²⁾과 팩트체크시스템 서비스 종료가 현재의 실적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가짜뉴스 개념의 모호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로 집약할 수 있다. 덧붙이면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의 엄정성을 경시한 채 여론몰이식으로 접근한 탓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는 현

12) 20대 국회의 가짜뉴스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두 법안-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5인),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등 29인)-으로 통합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허위조작정보를 법률적 개념으로 정교화하는 것과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상쇄하느냐가 관건이다.

둘째, 법안은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세계적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주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된다. 가령 언론을 포함시킬 경우 저널리즘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잠재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자로 규정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유튜버로 대상을 축소할 경우 공적 영역은 배제함으로써 형평성에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언론도 정규 프로그램이나 기사 외에 유튜브용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정치채널의 경우 인플루언서 채널과 큰 차이 없이 정과 저널리즘의 속성이 지배적이다. 그 외에 중과실과 손해배상액(산정)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요청된다.

셋째, 현재 플랫폼과 AI라는 고도화된 지능정보 환경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종래의 규제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제도 설계를 의미한다. 그 중 알고리즘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지만, 실효적 대안이 부재하였다. 그것은 플랫폼과 AI 알고리즘이 기업간 국가간 경쟁을 포함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사회에서 수익의 원천 기술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의 높은 문턱을 조성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탈취당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낳는다. 그리고 기술적 특성상 플랫폼과 AI 유형이나 서비스별로 알고리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플랫폼과 AI 업체의 투명성 보고서의 검증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정파간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의 실증적 검토와 공개 수준에 대한 제도적 합의 없이, 국회(의원)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특정 내용이 발췌되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검증·활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

3) 플랫폼 공론장의 공영성 및 정보 투명성 강화

유튜브를 위시한 플랫폼이 온라인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정보의 생산·유통·소비는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었다. 온라인 공론장의 중심 또한

포털과 종래의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적 흡인력이 만개한 유튜브로 확연히 기울었다. 유튜브는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욕구, 관심, 이해를 자극하거나 충족하는 채널들이 집적되고 범주화되며 거대 규모로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역동적인 동영상 정보의 소구력, 쇼츠같은 정보 분절을 통한 이슈 파급력, 라방을 통한 실시간 상호작용, 구독과 멤버십을 통한 정체성 추구, 슈퍼챗과 후원금 같은 상업적 동기는 정보순환과 공론활동을 넘어 유튜브 채널을 유동적 커뮤니티(fluid community)로 정립시키고 있다.

일련의 연구(장우영·송준모, 2022; 장우영·송경재·유승현 2023; 장우영, 2025)에 따르면 유튜브의 뉴스·정치 채널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현황을 보인다. 첫째, 뉴스·정치 채널은 공직선거, 특히 각 대선 전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1,000개 안팎의 채널이 형성되었다. 둘째,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기성 언론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채널로 공론장이 양분되어 있으며 제도정치 채널은 규모와 비중이 가장 왜소하다. 셋째, 동영상 생산과 소비 규모 면에서 인플루언서 채널이 압도적이지만, 동영상의 신뢰도와 동영상의 평균 소비량은 언론 채널이 더 크다.

뉴스·정치 채널의 확장은 다양한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공론의 진실성과 공명성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널리즘의 규범의 관행을 벗어나 인플루언서 채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인플루언서 채널은 정치적 중립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한편, 과도한 이념 편향적 정파 추종적 동영상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소구하고 있다. 이는 유사 저널리즘 혹은 정파 저널리즘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둘째, 인플루언서 채널은 게이트키퍼와 저널리즘 준칙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의혹을 살만한 정보들이 여과 없이 혹은 전언 형식으로 양산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채널 동영상 내용분석 연구는 높은 비율로 동영상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유사한 정파 지지를 추구하며 정보·주장·구독자들 공유하는 채널들이 일종의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하며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참여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공천과 정책 노선 개입, 부정선거론과 같은 극단의 주장, 청담동 술자리 사건·대법원장 사건과 같은 가짜뉴스의 진원, 수박과 배신자론 등 소수 정파에 대한 정치적 억압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다섯째, 소위 평론가로 불리는 정파화된 출연진이 유튜브와 공영방송을 오가며 저널리즘 경계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진행자로 등장하기도 하며 정파성

을 노출하고 있다. 여섯째, 기성 언론도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인플루언서 채널과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정치 채널 생태계 전반의 정과 저널리즘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문제사례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동향이 확인된다. 첫째, 이용자의 동영상 소비는 먹합수법칙에 따른 롱테일 곡선의 양태를 보인다. 즉 상위 10~20%대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동영상을 소비한다. 둘째, 이용자의 동영상 소비는 알고리즘(기술적)과 선택적 노출(주체적)이 결합한 결과로, 동질적 이념 성향의 채널과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반향실 효과와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응답률이 2/3에 달한다. 이는 2023년 한국정치학회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데, 유튜브의 의제설정과 이슈과급 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다매체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는 그 자체보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내용을 언론 수준으로 신뢰하는 개연성을 엿보게 한다. 넷째, 허위조작정보나 편향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은 비방향성 동기화(indirectional motivation)의 경향을 보이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방향성 동기화(directional motivation)의 경향성을 띌 수도 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 채널의 문제점과 이용자의 동영상 소비·반응성에 따라 인플루언서 및 동영상에 대한 책무성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나 대법원장·국무총리 비밀 회동 사건과 같이 사회정치적 폭발력이 대단히 큰 문제들이 정파성이 강한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를 언론으로 간주하느냐 여부를 넘어 정보 생산자에 대한 책무성이 보다 명확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이슈도 정보 생산 책무성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거버넌스 적응력

1) 플랫폼·AI 내용규제 거버넌스 부재

한국의 플랫폼·AI 규제 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다. 플랫폼 시장 경쟁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콘텐츠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

지만 콘텐츠 위험 관리나 알고리즘 투명성에 관한 제도적 대응은 공백과 중첩이 공존하며 지속적 검토가 요구된다. 알고리즘 투명성은 감독의 목적, 이용자 권리 보장, 산업 발전 등의 문제가 균형을 요하는 다차원적 성격의 과제이다. 이에 단일 규제 기관이나 단일 법률로 운영화가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었다(Nannini et al., 2024). 유럽연합의 경우 AI 행위규범과 플랫폼 규제가 위험기반 접근, 설명가능성, 사후감시를 축으로 통합적으로 설계(Gasser, 2023)되는 반면, 국내는 부처별 소관법 체계로 작동됨에 따라 실행 단계에서 충돌과 해석의 분절성이 재현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새로운 법제 도입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 공동규제(co-regulation)적 보완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불법·유해정보 대응과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를 포괄하려는 제도적 시도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월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업무계획으로 발표하고, 플랫폼 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 근절, 콘텐츠 노출 기준 마련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AI 기술 확산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법 제정 역시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EU 등 AI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생성형 AI에 대해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25). 다만, 이러한 시도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체계와의 적용 범위 중복·기준 모호성, 그리고 EU DSA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반하므로, 위험기반, 비례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설명가능성의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네이버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알고리즘 조작은 불공정 거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한국일보, 2022). 한국은 2021년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공포했다.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플랫폼 장애가 사회 인프라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전자신문, 2025). 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 단

축,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발생 등 대응 및 투명성 강화 조치들을 마련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25).

플랫폼 규제는 국내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플랫폼 간 규제 수용성과 책임 부담의 비대칭을 가시화한다. 네이버 자사우대 사례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경쟁질서 왜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사법 판단이 연속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알고리즘 투명성, 설명가능성의 규범을 시장 공정성과 접합시키려는 국내 규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투명성 요구는 이용자 권리 및 영업비밀 등의 문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바, 사후감사 체계로의 구체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Larsson & Heintz, 2020).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구글·애플의 수수료 체계 전환은 플랫폼 거버넌스 설계를 더 개방적, 중립적으로 만들고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제기술적(techniques of regulation) 처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Heimbürg & Wiesche, 2023).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와 관행을 아우르는 개선이 요구된다. 법제화 측면에서는 위험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이의제기 절차 등의 도입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초국적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 위험 기반 개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U가 책임배분, 사후감시 통합 규제 아키텍처를 통해 국경을 넘는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식은 한국 거버넌스를 내재화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Gasser, 2023).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의 통합 거버넌스 허브를 구축하고, 허위조작정보 상시 모니터링, 사후감사, 시정의 공동규제 루프를 제도화할 수 있다(Judge et al., 2025). 기술 운영의 면에서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 출처 진위 검증 등 이용자 보호, 불공정 상행위 규율과 접합점을 검토해 한국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Haupt & Marks, 2024). 한국의 플랫폼 AI 거버넌스는 문화적 차원에서,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내재화, 사회기반형 플랫폼으로서의 인식 구축, 공공미디어의 신뢰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취약성

한편, 한국의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는 디지털 전환기에 요구되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 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선거 사례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시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 부재, 서버 접근 권한 관리의 미흡,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검증 체계 부재 등 선

거 행정이 사이버 위협에 취약함을 보여주었다(KBS, 20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감사나 국회의 모니터링도 사건 발생 시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이고 엄정한 보안 평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KBS, 2025). 최근 수년간 국내 외에서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고려하면(조선일보, 2025), 선거 데이터 역시 반복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망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단순한 기술 문제뿐 아니라 권력 형성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선거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선거 결과 불복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Lubis et al., 2016).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로 ‘부정선거론’을 해명하거나 법적 대응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을 뿐,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에서는 미흡했다. 따라서 단순 부정 논란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 관리 및 보안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서술에서 인용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화된 선거 환경에서 부정행위와 개인 프라이버시가 결합 될 때 생기는 복합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인증 절차, 디지털 서명, 투표 저장 등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Ehin et al., 2022). 또,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독립적 보안 전문 기구, 정부 기관 등이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 및 보고서를 발행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Willemson, 2025). 미국 역시 2017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중심으로 선거 인프라를 ‘핵심 기반시설’로 지정해 선거 시스템의 보안 평가, 위협 대응 훈련 및 사이버 보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DHS, 2017). 이들 사례는 데이터 보안 강화를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닌 제도적, 문화적 신뢰 구축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선거 데이터 보안을 단순히 기술적 결합의 보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 회계 신뢰를 재구성하는 거버넌스 과제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상시 운영되는 선거 보안 감독기구를 지정해 선거 데이터 전 주기에 걸친 위협평가, 취약점 진단, 침해 사고 포렌식,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시행하고, 국제 표준을 결합한 적합성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IFES, 2022).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미디어, 학계와 연계한 위협 징후 정보 공유, 교차플랫폼 모니터링 등 기술정보의 복합 리스크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Mazurczyk et al., 2024). 선거 데이터 보안의 신뢰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술 진흥 거버넌스의 취약성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대체로 규제 중심 요소가 강하며,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규제, 사이버 보안 등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어 왔다(남상준·조은진, 2020, 59). 반면, 신기술을 정치, 산업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진흥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지능정보 기술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투자하거나 혁신을 시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4, 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46).

블록체인 사례를 예로 들면, 한국은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2017년 ICO(가상화폐공개)를 전면 금지하고(Kim, 2017), 거래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및 실명계좌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법제처, 2024).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육성이나 공공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약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1).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으나(World Bank Group, 2021), 제도적 지원과 표준화 부족으로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KSI 블록체인을 행정 기록 관리에 적용해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e-Estonia, 2025), EU도 EBSI(European Blockchain Services Infrastructure)를 통해 디지털 신원과 전자 자각 증명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등 공공 신뢰를 제도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 한국은 공익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틀을 유지하되, 위험기반 거버넌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AI 기술의 공공 부문 적용을 위한 표준 진흥 수단을 병행하여(Beck et al., 2018), 혁신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전환을 본격화할 시점에 있다.

또한, AI와 데이터 활용 영역에서도 유사한 제약이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필수적인 기반이지만, 가명정보 활용 같은 합법적인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통해 데이터 확보 어려움, 절차 부담, 안전성 문제 등 현장의 제약을 개선하고, 공공·민간의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그러나 기업과 학계에서는 책임 범위 불확실성, 절차적 부담,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의 제약 등의 문제를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성 데이터, 질의형 데이터 접근 등 현대적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연동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실용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Gadotti et al., 2024).

혁신 기술 거버넌스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규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실험적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 역시 선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여 정치,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저작권 문제, 산업별 상이한 규제로 인해 학습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합된 데이터 전략의 시급성이 지적되었다(초거대AI추진협의회, 2025). 선거 행정 영역에서 역시 블록체인 기반 투표 검증이나 AI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산업적 활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혁신 기술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이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기술 표준을 포함한 집행구조를 제시하고, 민간을 포섭하는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제언 및 단계별 영역별 실행전략

1. 참여 및 대표성 강화

참여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청원제도의 제도적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국민동의청원은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진입 경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보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질적 입법으로 연결된 사례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결국 참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신뢰도는 오히려 저하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단순 다수결 기반의 청원 성립 방식을 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보고, 정부의 공식 답변으로 이어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의 입법청원 모델은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제도적 논의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국 청원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용 절감과 표현 기회 확대를 제도권 참여와 접목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 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발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성의 외연을 넓힌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참여가 제도적 절차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의사표출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청원, 온라인 투표, 숙의 토론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국회 입법지원 시스템이나 정당 의사결정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의 양적 확대가 곧 대표성의 질적 심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핵심적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극단적 여론 동원에 대응하는 숙의형 절차 병행이 요구된다. 현재 다수결 중심의 참여 구조는 특정 집단의 조직적 동원을 통해 실제 사회적 합의와 괴리된 의제가 부각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참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전문가 검토, 시민배심원단과 같은 숙의 절차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여론 왜곡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제언을 토대로 한 단계별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연계성 강화 단계에서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식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획득한 안건은 반드시 정부 답변 또는 본회의 보고로 이어지도록 한다. 둘째, 참여-제도 연계 단계에서는 청원·투표·토론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전자 의정지원 시스템에 통합하여, 디지털 참여가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셋째, 숙의 절차 병행 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참여 의제를 숙의형 시민패널과 연계하여 단순한 여론조사적 참여가 아닌 집단적 숙의와 합의 형성을 제도화한다.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숙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문가·시민사회의 중립적 검증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참여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참여의 양적 확대를 대표성의 질적 심화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원의 입법 연계성 강화, 디지털 참여와 제도권 정치의 접합, 숙의형 절차의 제도화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 전략은 참여제도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AI 고도화 환경에서 내용규제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 책임은 행정규제 중심에서 주요 규제 주체와 장치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공동규제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능 이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포털·플랫폼·AI 등 게이트키퍼가 책임성 있는 시장 자율규제 주체로 역할하고 시민사회의 핫라인이 교육·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기능을 복원하여 전문화하는 과제도 제기되는바, 지속가능한 독립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법률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효용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그동안의 입법 관행은 정치한 공정과 숙의를 거치지 않고 여론몰이에 편승하는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짜뉴스 입법은 개념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과의 양립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현재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통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여전

히 국민 기본권과의 양립 문제와 함께 규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의 정의, 범위, 경제적 이해, 국가 경쟁력 등 다면적 요인을 고려하고 문제를 해소한 토대 위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 공론장의 공영성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채널의 책무성을 부과하고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인플루언서 채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반면, 그 영향력과 수익 추구 활동으로 말미암아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에 대한 책임, 채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후원금·멤버십·광고·협찬 등 윤리성 확보, 공영언론과의 관계 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도 유튜브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인플루언서 채널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과 저널리즘화가 촉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 채널은 언론법과 저널리즘 준칙 준수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요청된다.

상기의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 정책의 단계별 영역별 실행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 행정 중심 공동규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국회, 시장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TF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내용규제 원칙, 정책, 입법의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중 핵심은 심의 기능을 제 3섹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독립성·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정치적 독립성은 심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빅테크·플랫폼·AI를 망라한 시장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동 기구의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기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사업자 행동강령(practice code), 정부의 감독·승인,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 등을 의무화한다.

둘째, 팩트체크 시스템의 복원과 시민사회의 핫라인 활성화를 제안한다. 기존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콘텐츠 분석에서 진위 판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정치적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진위 판단보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분류, 판별, 해석 등 다양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실하다. 이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 학회 등 중립적 기관과의 연계를 구조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핫라인은 비정치적 생활이슈에 관련한 콘텐츠 감시를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분업화하여 전문적인 감시 기관으로의 발전을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의안 발의자들이 공동으로 전문가 협업과 시민 공청회 등 합리적 절차를 수행하여 실행가능한 의안을 합의·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명료한 개념화, 국민기본권의 침해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선정,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와 집행액의 합리적 제시 등 쟁점의 해소가 필요하다. 특히 법 개정의 대전제인 허위조작정보의 '조작'범위가 넓어서 임시조치되는 정보들이 크게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라인 내용규제 입법은 법률을 양산하기보다 단일 법률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을 모범으로 내용규제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심의 기능의 이관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법률을 보완해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알고리즘 개념의 해석 여지가 크고 기술적 범위도 논쟁적이다. 따라서 '추천'알고리즘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알고리즘 추천 방식의 공개와 설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외부 감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능동적 선택과 사회적 감시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독립적인 심의 기관이 이를 검증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의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규정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보장하되, 허위조작정보 및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정보는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유튜브는 언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으로 인해 2022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문제성 정보에 대한 열람 차단, 정보 삭제, 댓글 피해구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채널의 수익활동에서의 상업 윤리를 정립하여 후원금·멤버십·광고·협찬 등 수익과 그 배분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세무 등의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덧붙이면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채널의 수익 규모가 클 경우 별도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사회적 감시와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활동하는 출연자의 경우 공영방송 스스로 출연을 제한하는 자정과 준칙이 요청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기 자단에 친여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들-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여야간 혹은 이념집단간 균형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해당 매체들이 엄격하게 저널리즘 기반의 보도를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감시가 요청된다.

3. 거버넌스 적응력 강화

가. 신뢰 기반 규제 디자인 및 투명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노출 추천 기준에 대한 사후 감사 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대형 플랫폼의 추천, 랭킹, 광고 타게팅 로직에 대해 독립적 사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 수준에 기반해 책임 수준을 검증한다(Heimbürg & Wiesche, 2023). 본 연구에서 언급한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나 AI 법안이 채택하는 위험 기반 접근과 설명 가능성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알고리즘 책임성은 공표, 감사, 시정의 단계에 따라 실질화될 수 있다. 기술 복잡성이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독립 감독과 공동책임 구조가 필요하다(Garfinkel et al., 2017). 인터페이스 차원에서도 타임라인 정렬, 출처 라벨링 등 이용자 선택권을 확장해 민주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Faris & Donovan, 2021).

데이터 보안 관련, 선거 행정에서 전자개표기 무결성 검증, 개인정보보호 강화, 서버 접근권 관리 등은 민주주의 절차적 신뢰 확보와 관련된다(Willemsen, 2025). 유권자의 신뢰는 감사가능성, 이해가능한 투명성,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 사회적 설계가 함께 작동할 때 형성된다(Merchan, 2025). 미국 국토안보부 경우 선거 인프라를 핵심 기반 시설로 분류해 상시 점검, 공공·민간 위협 대응을 강화하였다(Masterson, 2019). 이는 선거를 민주주의 핵심 인프라로 재위치시키는 선행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활용과 보호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인 동형암호, 차등프라이버시 등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Gadotti et al., 2024; Xu et al., 2023).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절적 규제를 통합하기 위해 다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계,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규제 루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 디지털 플랫폼 제도 관련 상설 다자 거버넌스 포럼을 구성하고 기술, 공공, 경제 메커니즘의 총체적 논의를 진행한다(Taeihagh, 2025).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도모하고, 공공, 비영리, 민간의 혼합 구조를 배치해 제도 집행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Taeihagh, 2025). 허위정보 대응 문제에 대해 매체 리더러시, 연구데이터 제공 등 다층적 처방을 결합해 사회 전반 대응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기술, 제도 통합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제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내재화 장치를 도입해 기술과 정치사회 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분산된 플랫폼, 데이터, 미디어 권한을 조정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허브를 구성하고,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이의제기 절차·위험평가를 단일 체계에서 운영한다(Farrell, 2025).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편향, 오남용, 지식 재산 문제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규범, 조직, 기술을 지속 업데이트하는 참여적, 선제적(anticipatory)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Janssen, 2025).

또한 블록체인 기반 투표 검증, AI 행정 데이터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과 같은 실험적 제도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여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한다(Beck et al., 2018; Chung & Wihbey, 2024). 위험도 기반 콘텐츠 거버넌스 프로토콜 등을 마련해 사회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플랫폼 구조 관련 개방성, 네트워크 효과, 보안 사건 등 위험 지표를 측정해 규제 모델을 정교화하는 방식을 고려한다(Wirtz et al., 2022). 기술, 데이터, 분석적 위험, 정보 소통, 경제 및 사회, 윤리 등의 범주에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상호운용 표준, 포괄적 기준점 제공 등 장기적 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Wirtz et al., 2022).

AI 알고리즘 기술이 민주주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토대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민주주의 영향평가(Democracy Impact Assessment)를 시행하여 신기술 도입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제안한다(Amarasekara, 2021). 민주주의 영향평가는 기술 성능 지표뿐 아니라 공공가치, 사회영향 지표를 동시에 반영하고, 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표현

의 자유, 정보다양성 등 핵심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Jungherr & Rauchfleisch, 2021).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과 기준을 설명가능성 수준에서 공개하고, 오류나 차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집단이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알고리즘이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출을 위축시키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노출 내지는 추천 메커니즘이 공론장의 다양성을 보장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Berg & Hofmann, 2021; Jungherr & Rauchfleisch, 2021). 이를 통해 기술의 민주적 적합성을 다층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디지털 폴리아키의 개념을 디지털 맥락에 적용하여, AI 플랫폼을 사회기반형 플랫폼의 의미로 재인식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이러한 평가 체계가 참여 경로와 권력 분산을 확장하는 체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권혁용(2023),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한국정치학회보》, 57(1), pp. 33-58.
- 김민정(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가짜뉴스 규제 관련 국내 법안과 해외 대응책에 나타난 용어 및 개념정의 비교,” 《미디어와 인격권》, 5(2), pp. 43-81.
- 김여라(2025),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제,” NARS 현안 분석 제351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용학(2024),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우주(2015),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서울: 카오스북.
- 김일우(2025), “디지털시대 포용의 의미와 향후 과제,” 《중앙법학》, 27(1), pp. 7-36.
- 김지혜(2023),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정책 동향: 디아(Diia) 프로젝트 성과를 중심으로.” KISDI Perspective.
- 김현섭(2023),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 진행되며, 왜 문제인가?: 조망과 평가,” 《한국정치연구》, 32(3), pp. 29-67.
- 문은영(2022),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9(4), pp. 67-90.
- 박용범(2018),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영주권부터 국가코인까지 미래를 추월한 나라』.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백영민(2017), 『R을 이용한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 고급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경재·장우영(2020), “온라인 입법청원과 민주주의: 영국과 독일의 비교,” 《국제정치연구》, 23(2), pp. 155-178.
- 양지수(2024), “블록체인 투표의 정치학적 고찰: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중심

- 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1) pp. 383-404.
- 이용호(2025), “하버마스의 디지털 공론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합적 다원주의’의 수용과 ‘정동적 공론장’의 탐색,” 《한국정치연구》, 34(1), pp. 169-200.
- 이정민(2023),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시리즈 2023-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장우영(2024), “문제성 정보 규제제도의 합리성과 민주주의,” 《시민정치연구》, 8, pp. 31-64.
- 장우영·류승현(2023), “국회의원·정당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이슈와 양극화 특성 분석”.
- 장우영·송준모(2022), “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위한 여론 형성”.
- 최경미(2025),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선거: 마이크로 타겟팅 규율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53(4), pp. 235-268.
- 홍석한(2024), “인공지능 발전이 선거에 미치는 위협과 규범적 대응,” 《공법연구》, 53(2), pp. 185-214.

[국외 문헌]

- Axios.(2022, March 20). UN: 10 million Ukrainians have fled their homes since invasion began.
<https://www.axios.com/2022/03/21/un-10-million-ukrainians-fled-homes-since-invasion-began>.
- Aytac, U.(2024). Big Tech, Algorithmic Power, and Democratic Control. *The Journal of Politics*, 86(4). 1431-1445.
- Bakir, V. & McStay, A.(2021). Empathic Media, Emotional AI, and the Optimization of Disinformation. in Boler, M. & Davis, E. eds. *Affective Politics of Digital Media: Propaganda by Other Mea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rtels, L. M., Daxecker, U. E., Hyde, S. D., Lindberg, S. I., & Nooruddin, I.(2023). The Forum: Global Challenges to Democracy? Perspectives on Democratic Backsliding.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5(2), viad019.

- Bartlett, J., Smith, J., & Acton, R.(2018). *The Future of Political Campaigning*. London: Demos.
- Baskara, F. R.(2025). Conceptualizing Digital Literacy for the AI Era: A Framework for Preparing Students in an AI-Driven World. *Data and Metadata*, 4(530). 1-13.
- Bennett, W. L.(2012).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Political Identity, Social Media, and Changing Patterns of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4(1), 20-39.
- Bermeo, N.(2016).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7(1), 5-19.
- Biale, E., & Bistagnino, G.(2024). Enhancing Democratic Expertise Through Intra-Party Deliberation. *Constellations*, 0.
- Biddle, N., Fischer, A., Angus, S., Ercan, S., Grömping, M., & Gray, M.(2025). Democratic Resilience: Moving from Theoretical Frameworks to a Practical Measurement Agenda. *Australian Resilient Democracy Research and Data Network Discussion Paper* 5.
- Brown, T. A., & Moore, M. T.(201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ick H. Hoyle,(eds.)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361-379.
- Canache, D., Mondak, J. J., & Conroy, A.(1994). Politics in Multiparty Context: Multiplicative Specifications, Social Influence, and Electoral Choice. *Public Opinion Quarterly*, 58(4), 509-538.
- Chambers, S.(2003).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6(1), 307-326.
- Cheeseman, N., Desrosiers, M-E., Cianetti, L., & Gehrke, M.(2024). How to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Five Lessons for Democratic Renewal. European Democracy Hub.
https://europeandemocracyhub.epd.eu/wp-content/uploads/2024/12/How-to-Strengthen-Democratic-Resilience-Five-Lessons-for-Democratic-Renewal_final.pdf.
- Chiao, V.(2019).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Notes on Algorithmic Decision-making in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15(2),

- Cho, J., Ahmed, S., Hilbert, M., Liu, B., & Luu, J.(2020). Do Search Algorithms Endanger Democracy?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Algorithm Effects on Political Polariz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64(2), 150-172.
- Christiano, T.(2022). Algorithms, Manipulation, and Democrac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52(1), 109-124.
- Cíbik, M. & Hardoš, P.(2022). Conspiracy Theories and Reasonable Plural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21(3). 445-465.
- Citron, D. K. & Eichensehr, K. E.(2024). Resilience for a Digital Ag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https://legal-forum.uchicago.edu/print-archive/resilience-digital-age>.
- Collier, D., & Levitsky, S.(1997). Democracy with Adjectives: Conceptual Innovation in Comparative Research. *World Politics*, 49(3), 430-451.
- Cummings, D.(2017). Dominic Cummings: How the Brexit Referendum Was Won. *The Spectator*, January 9.
- Cupać, J. & Sienknecht, M.(2024). Regulate against the Machine: How the EU Mitigates AI Harm to Democracy. *Democratization*, 31(5). 1067-1090.
- Dahl, R. A.(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ersity Press.
- Danaher, J.(2022). Techno-optimism: An analysis, an evaluation and a modest defence. *Philosophy & Technology*, 35(2), 54.
- de Zeeuw, D.(2024). Post-truth Conspiracism and the Pseudo-public Sphere. *Frontiers in Communication*, 9. 1384363.
- Della Porta, D., Fernández, J., Kouki, H., & Mosca, L.(2017). *Movement Parties against Austerity*. Polity Press.
- Donnelly, J.(1999).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21(3), 608-632.

- Dryzek, J. S.(2001). Legitimacy and economy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theory*, 29(5), 651-669.
- EGA(e-governance academy).(2021). Diia Mobile Application Evaluation Report.
- Elstub, S. & Escobar, O.(2019). Defining and Typologising Democratic Innovations. in Elstub, S. & Escobar, O. eds. *Handbook of Democratic Innovation and Governanc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 Erman, E., & Furendal, M.(2022). The glob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me normative concerns. *Moral Philosophy and Politics*, 9(2), 267-291.
- _____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olitical legitimacy of global governance. *Political Studies*, 72(2), 421-441.
- European Commission.(2022). *European Centre for Algorithmic Transparency(ECAT): Mission and Activiti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araoni, S.(2023). Persuasive Technology and Computational Manipulation: Hypernudging out of Mental Self-determination. *Fronti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6, 1216340.
- Farrell, D. M.(2025). Democratic Innovation Without Political Parties Should Be Unthinkable. *Party Politics*, 0(0).
- Gamito, M. C.(2024). The Role of ETSI in the EU's Regulation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7(5), 1425-1440.
- Gerbaudo, P.(2021). Are Digital Parties More Democratic Than Traditional Parties? Evaluating Podemos and Movimiento 5 Stelle's Online Decision-Making Platforms. *Party Politics*, 27(4). 730-742.
- Gorwa, R.(2021). Elections, Institutions, and the Regulatory Politics of Platform Governance: The Case of the German NetzDG. *Telecommunications Policy*, 45(6). 102145.
- Gorwa, R., Binns, R., & Katzenbach, C.(2020). Algorithmic Content Moderation: Technical and Political Challenges in the Automation of Platform Governance. *Big Data & Society*, 7(1), 2053951719897945.

- Grønsvund, T., & Aanestad, M.(2020). Augmenting the Algorithm: Emerging Human-in-the-loop Work Configurations.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29(2), 101614.
- Habermas, J.(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Press.
- Haddow, G., Bullock, J., & Coppola, D. P.(2021).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7th ed.). Butterworth-Heinemann.
- Hair Jr, J. F., Howard, M. C., & Nitzl, C.(2020). Assessing Measurement Model Quality in PLS-SEM Using Confirmatory Composit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09, 101-110.
- Hibbing, J. R. & Theiss-Morse, E.(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 Ming-sho.(2022). Exploring Worldwide Democratic Innovations: A Case Study of Taiwan. *European Democracy Hub*. 1-13.
- Holloway, J. & Manwaring, R.(2023). How Well Does 'Resilience' Apply to Democracy? A Systematic Review. *Contemporary Politics*, 29(1). 68-92.
- Howard, P. N.(2020). *Lie Machines: How to Save Democracy from Troll Armies, Deceitful Robots, Junk News Operations, and Political Operatives*. Yale University Press.
- Hoyle, R. H.(200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oward E.A. Tinsley and Steven D. Brown,(eds.) *Handbook of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and Mathematical Modeling*, Academic Press. 465-497.
- Invernizzi-Accetti, C. & Wolkenstein, F.(2017). The Crisis of Party Democracy, Cognitive Mobilization, and the Case for Making Parties More Deliberat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1(1). 97-109.
- Jungherr, A.(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cy: A Conceptual Framework. *Social Media+ Society*, 9(3), 20563051231186353.
- Jungherr, A., & Rauchfleisch, A.(2025).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liberation: The AI Penalty and the Emergence of a New Deliberative Divide. arXiv preprint

arXiv:2503.07690.

- Jungherr, A., & Schroeder, R.(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ublic Arena. *Communication Theory*, 33(2-3), 164-173.
- Katzenbach, C.(2021). "AI will Fix This"–The Technical, Discursive, and Political Turn to AI in Governing Communication. *Big Data & Society*, 8(2), 20539517211046182.
- Kavoliūnaitė-Ragauskienė, E.(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 Manipulation: The Significance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Baltic Journal of Law & Politics*, 17(2), 116-141.
- Khan, U. B. N. & Zaheer, M. A.(2024.) Digital Polyarchy: The Rol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Shaping Democratic Resilience. *Political Horizons*, 2(2). 115-124.
- Kim, B., & Hoewe, J.(2023). Developing contemporary fac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60(4), 862-876.
- Kino, S., Bernabé, E., & Sabbah, W.(2017). Socioeconomic Inequality in Clusters of Health-related Behaviours in Europe: Latent Class Analysis of a Cross-sectional European Survey. *BMC Public Health*, 17(1), 497.
- Kitsing, M.(2011). Success without Strategy: E-government Development in Estonia. *Policy & Internet*, 3(1), Article 4.
- Kokshagina, O., Reinecke, P. C, & Karanasios, S.(2023). To Regulate or Not to Regulate: Unravelling Institutional Tussles around the Regulation of Algorithmic Control of Digital Platform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38(2). 160-179.
- Küppers, A.(2024). Anything but Representative Democracy: Explaining Conspiracy Believers' Support for Direct Democracy and Technocracy. *Politics and Governance*, 12.
- Laux, J.(2024). Institutionalised Distrust and Human Oversigh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wards a Democratic Design of AI Governance under the European Union AI Act. *AI & society*, 39(6), 2853-2866.
- Leiner, B. M., Cerf, V. G., Clark, D. D., Kahn, R. E., Kleinrock, L., Lynch, D. C., Postel, J., Roberts, L. G., & Wolff, S.(2009). A Brief History of the Internet. *ACM*

- SIGCOMM Computer Communication Review*, 39(5), 22-31.
- Levitsky, S., & Ziblatt, D.(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Publishing Group.
- Lim, M.(2021). Algorithmic Enclaves: Affective Politics and Algorithms in the Neoliberal Social Media Landscape. in Boler, M. & Davis, E, eds. *Affective Politics of Digital Media: Propaganda by Other Mea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ima, V.(2025). Strengthening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Resilience and Tech-Enabled Democratic Innovations. *Journal of Deliberative Democracy*, 21(1). 1-14.
- Lindman, J., Makinen, J., & Kasanen, E.(2023). Big Tech's power, politic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gul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38(2), 144-159.
- Lünenborg, M.(2019). Affective Publics. in Slaby, J. & von Scheve, C. eds. *Affective Societies: Key Concep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20). Affective Publics: Understanding the Dynamic Formation of Public Articulations beyond the Public Sphere. in Fleig, A. & von Scheve, C. eds. *Public Spheres of Resonance: Constellations of Affect and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cintosh, A.(2004). Characterizing E-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I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pp. 1-10). IEEE.
- Madise, Ü., & Vinkel, P.(2011). Constitutionality of Remote Internet Voting: The Estonian Perspective. *Juridica International*. 18(4). 1-16.
- Manias, G., Apostolopoulos, D., Athanassopoulos, S., Borotis, S., Chatzimallis, C., Chatzipantelis, T., ... & Kyriazis, D.(2023, June). AI4Gov: Trusted AI for Transparent Public Governance Fostering Democratic Values. In 2023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in Smart Systems and the Internet of Things(DCOSS-IoT)(pp. 548-555). IEEE.
- McLaughlin, N.(2014). Escapes from Freedom: Political Extremism, Conspiracy Theories, and the Sociology of Emotions. in Chancer, L. & Andrews, J. eds. *The Unhappy*

- Divorce of Sociolog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cSwiney, J., Ercan, S. A., Dryzek, J. S., & Balint, P.(2025). Building Democratic Resilience: Protecting the Public Sphere from Violent Extremism. *Crime & Delinquency*, 71(3). 769-794.
- Michels, R.(2016).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E. Paul & C. Paul, Trans.). Free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1).
- Mittendorf, W.(2023). Conspiracy Theories and Democratic Legitimacy. *Social Epistemology*, 37(4). 481-493.
- Mossberger, K., Tolbert, C. J., & Stansbury, M.(2003). Virtual Inequality: Beyond the Digital Divid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ueller, R. O., & Hancock, G. R.(201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e Reviewer's Guide to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pp. 445-456). Routledge.
- Muirhead, R. & Rosenblum, N.(2024). Conspiracy Everywhere. *Political Studies Review*, 22(2). 260-271.
- Munck, G. L.(2016). What is Democracy?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Democratization*, 23(1), 1-26.
- Novelli, C., Formisano, G., Juneja, P., Sandri, G., & Floridi, L.(2024).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Internal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Minds and Machines*, 34: 36.
- OECD(2020). *Innova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New Democratic Institutions: Catching the Deliberative Wave*. OECD Publishing.
- Palmiotto, F.(2025). The AI Act Roller Coaster: The Evolution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Future of the Regulation.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24.
- Panditharatne, M., Norden, L., Zdanys, J., Weiner, D. I., & Abusaif, Y.(2025). An Agenda to Strengthen U.S. Democracy in the Age of AI. Brennan Center for Justice. <https://www.brennancenter.org/media/13711/download/ai-and-democracy-agenda-report-jan-2025.pdf?inline=1>.

- Pantazi, M., Papaioannou, K., & van Prooijen, J-W.(2022). Power to the People: The Hidden Link Between Support for Direct Democracy and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Political Psychology*, 43(3). 529-548.
- Papacharissi, Z.(2015). *Affective Publics: Sentiment, Technolog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pacharissi, Z., Lünenborg, M., & Röttger-Rössle, B.(2024). Affective Publics and Their Meaning in Times of Global Crises. in Lünenborg, M. & Röttger-Rössler, B. eds. *Affective Formation of Publics: Places, Networks, and Med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eter, F.(2009). *Democratic legitimacy*. Routledge.
- Pirro, A. LP & Taggart, P.(2023). Populists in Power and Conspiracy Theories. *Party Politics*, 29(3). 413-423.
- Radnitz, S.(2022). Why Democracy Fuels Conspiracy Theories. *Journal of Democracy*, 33(2). 147-161.
- Riehm, U., Böhle, K., & Lindner, R.(2011). Electronic Petitioning and Modernisation of Petitioning Systems in Europe(TAB-Report No. 146). Berlin: Büro für Technikfolgen-Abschätzung beim Deutschen Bundestag.
- Romanishyn, A., Malytska, O., & Goncharuk, V.(2025). AI-driven Disinformati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mocratic Resilience. *Fronti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8. 1569115.
- Sánchez Medero, G. & Sánchez Medero, R.(2025). Impacts and Consequences of Digital Democratic Innovations in Political Parties. *Colombia Internacional*, 123. 3-29.
- _____ (2025). Diagnosis of the Digitalization of Intraparty Democracy in Southern European Political Parties.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7. 1580687.
- Sánchez Medero, G. & Sánchez Medero, R.(2025). Impacts and Consequences of Digital Democratic Innovations in Political Parties. *Colombia Internacional*, 123. 3-29.
- Sandri, G.(2025). Intra-party Democracy. in Nai, A., Grömping, M., & Wirz, D. eds. *Elgar Encyclopedia of Political Communication*. Cел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Scudder, M. F.(2023). Deliberative Democracy, More than Deliberation. *Political Studies*, 71(1), 238-255.
- Seubert, S., & Becker, C.(2021). The Democratic Impact of Strengthening European Fundamental Rights in the Digital Age: The Example of Privacy Protection. *German Law Journal*, 22(1), 31-44.
- Sobieraj, S. & Berry, J. M.(2011). From Incivility to Outrage: Political Discourse in Blogs, Talk Radio, and Cabl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28(1). 19-41.
- Sørensen, N. G. W.(2021). Revitalising Intra-Party Democracy Through Digital Democratic Innovations: The Case of Danish Political Party Alternativet. PhD diss., Newcastle University.
- Sun, H.(2023). Regulating Algorithmic Disinformation.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46(4). 367-418.
- Sunstein, C. R.(2018).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ssler, M. H., Evans, G., Bakker, M. A., Gabriel, I., Bridgers, S., Jain, R., Koster, R., Rieser, V., Dragan, A., Botvinick, M., & Summerfield, C.(2025). Can AI Mediation Improve Democratic Deliberation?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https://kfai-documents.s3.amazonaws.com/documents/7564915616/AI-Mediation-Final--.pdf>.
- Tikk, E., Kaska, K., & Vihul, L.(2008). International Cyber Incidents: Legal Considerations. NATO CCDCOE.
- Tsarouhas, P. & Grigoriadis, K.(2025). Building Trust in AI for Public Administration: A Strategic Framework for Transparency, XAI, Participation, and Digital Literacy. 2025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Optimization and Robotic Applications(ICHORA). IEEE.
- Uscinski, J. E. and Enders, A. M.(2023). What Is a Conspiracy Theory and Why Does It Matter? *Critical Review*, 35(1-2). 148-169.

- Uscinski, J. E. and Parent, J. M.(2014). *American Conspiracy Theo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limised.(2019). Statistics about Internet Voting in Estonia – Parliamentary Elections 2019.
- Von Eschenbach, W. J.(2021). Transparency and the Black Box Problem: Why We Do not Trust AI. *Philosophy & Technology*, 34(4), 1607–1622.
- Waldman, A., & Martin, K.(2022). Governing Algorithmic Decisions: The Role of Decision Importance and Governance on Perceived Legitimacy of Algorithmic Decisions. *Big Data & Society*, 9(1), 20539517221100449.
- Warthon, M.(2024). Restricting Access to AI Decision-Making in the Public Interest: The Justificatory Role of Proportionality and Its Balancing Factors. *Internet Policy Review*, 13(3).
- Williams, G. A., & Kibowski, F.(2016). Latent Class Analysi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In: Jason, LA and Glenwick, DS,(eds.) *Handbook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Community-Based Research: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43–151.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ropean Union, & United Nations.(2023).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February 2022 – February 2023.
- Yong, A. G., & Pearce, S.(2013). A Beginner's Guide to Factor Analysis: Focusing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9(2), 79–94.
- Yun, C. H., Teoh, A. P., & Khaw, T. Y.(2024, February). Artificial Intelligence Integration in E-government: Insights from the Korean Case. In 2024 IEE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Big Data and Algorithms(EEBDA)(pp. 1159–1164). IEEE.
- Zajko, M.(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Social Inequality: *Sociological Contributions to Contemporary Debates*. *Sociology Compass*, 16(3), e12962.

[기타 자료]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25),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가치 확산을 위한 '25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논의 개시”. 3월 27일.

Q01. [정치 관심도]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 ② 대체로 관심이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관심이 없다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Q02. [선거 관심도]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었다
- ② 대체로 관심이 있었다
- ③ 보통이었다
- ④ 별로 관심이 없었다
- ⑤ 전혀 관심이 없었다

Q03. [선거결과 만족도]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Q04. [투표참여] 선생님께서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

- ① 투표했다
- ② 투표하지 않았다

Q05. [투표참여자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
셨습니까? 보기는 기호순입니다.

- ① 이재명
- ② 김문수
- ③ 이준석
- ④ 권영국
- ⑤ 기타 후보
- ⑥ 밝히고 싶지 않다/잘 모르겠다

Q06. [투표참여자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에
참가하셨습니까?

- ① 본투표에 참가
- ② 사전투표에 참가
- ③ 기타 투표방식으로 참가

Q07. [투표 사유](투표했다 응답자 만) 선생님께서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에게 투
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당선되기를 원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누가 당선되어도 상관 없었다
①	②	③

Q08. [정당 지지]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rotation]

- ① 더불어민주당
- ② 국민의힘
- ③ 조국혁신당
- ④ 개혁신당
- ⑤ 기타 정당
- ⑥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⑦ 잘 모르겠다

Q09. [정당 선호]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선택해 주십시오. 0은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은 대단히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경우는 50입니다.

- ① 더불어민주당
- ② 국민의힘
- ③ 조국혁신당
- ④ 개혁신당

Q10. [정치이념] 사람들은 보통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정당, 정치인들 및 선생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매우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냅니다.

구분	매우 진보	<-	---	---	---	중도	---	---	---	->	매우 보수
	0	1	2	3	4	5	6	7	8	9	10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											
③ 조국혁신당											
④ 개혁신당											
⑤ 이재명											
⑥ 김문수											
⑦ 이준석											
⑧ 본인											

Q11. [Youtube Use 1] 선생님께서는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매일 시청하지 않더라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횟수 응답)

- ①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 ②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시청한다
- ③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으로 시청한다
- ④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시청한다
- 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시청한다

Q12. [Youtube Use 2](위 질문 2,3,4,5 응답자의 경우) 선생님께서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 채널은 몇 개입니까?

- ① 1~2개
- ② 3~4개
- ③ 5~6개
- ④ 7개 이상

Q13. [Youtube Use 3](위 질문 2,3,4,5 응답자의 경우) 선생님께서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 채널 중 선생님과 이념성향이 다른 채널의 비중은 몇 %입니까?

- ① 0%
- ② 약 10% 이하
- ③ 약 20% 이하
- ④ 약 30% 이하
- ⑤ 약 30% 초과

Q14. [Youtube Use 4](위 질문 2, 3, 4, 5 응답자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과 이념성향이 같은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을 얼마나 남기십니까?

전혀 남기지 않는다	별로 남기지 않는다	가끔 남긴다	자주 남긴다	거의 매번 남긴다
①	②	③	④	⑤

Q15. [Youtube Use 5](위 질문 2,3,4,5 응답자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과 이념성향이 다른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을 얼마나 남기십니까?

전혀 남기지 않는다	별로 남기지 않는다	가끔 남긴다	자주 남긴다	거의 매번 남긴다
①	②	③	④	⑤

Q16. [Media Trust](위 질문 2,3,4,5 응답자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과 이념성향이 같은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Q17. [Media Trust](위 질문 2,3,4,5 응답자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과 이념성향이 다른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Q18. [Youtube as a media](선생님께서는 ‘유튜버 정치/시사 방송’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KBS·MBC·SBS 등 공중과 언론의 뉴스에 해당한다
- ② YTN·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 언론의 뉴스에 해당한다
- ③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언론의 뉴스에 해당한다
- ④ 새로운 유형의 언론 뉴스에 해당한다
- ⑤ 언론 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Q19. [SNS Use]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시사 관련 뉴스나 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주일에 1~2회 정도 약간 이용한다	1주일에 3~4회 정도 이용한다	1주일에 5~6회 자주 이용한다	매일 이용한다
종이신문	①	②	③	④	⑤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①	②	③	④	⑤
연합뉴스, YTN 등 보도전문채널	①	②	③	④	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①	②	③	④	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①	②	③	④	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페이스북 등 문자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유튜브 등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Q20. [Media Trust]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정치/시사 관련 뉴스나 정보”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종이신문	①	②	③	④	⑤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①	②	③	④	⑤
연합뉴스, YTN 등 보도전문채널	①	②	③	④	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①	②	③	④	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①	②	③	④	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페이스북 등 문자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유튜브 등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Q21. [disinformation]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로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유통된다	많이 유통된다
종이신문	①	②	③	④	⑤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①	②	③	④	⑤
연합뉴스, YTN 등 보도전문채널	①	②	③	④	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①	②	③	④	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①	②	③	④	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페이스북 등 문자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유튜브 등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Q22. [disinformation]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로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정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만들어 지지 않는다	거의 만들어 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들어 지고있다	많이 만들어 지고 있다
종이신문	①	②	③	④	⑤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①	②	③	④	⑤
연합뉴스, YTN 등 보도전문채널	①	②	③	④	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①	②	③	④	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①	②	③	④	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페이스북 등 문자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유튜브 등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Q23. [Information Adoption] 다음의 진술에 선생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확증 편향	1. 뉴스나 정치정보를 찾을 때 평소 접하는 것과 다른 관점의 뉴스나 정치정보를 확인한다					
	2. 뉴스나 정치정보를 찾을 때 찾은 정보를 다른 소스를 통해 검색한 정보로 확인한다					
관용	3.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에서도 수용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Q24. [polarization] 선생님께서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국정과제 협의와 공동 운영을 정례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집권당 대표와 야당 대표 간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하여 허위조작정보를 통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정당을 허용하여 기성 정당들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를 개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참가를 강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국민통합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국가기관이나 선거캠프의 댓글조작과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행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Q25. [perceptions of AI]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선거나 정치광고에서 AI 혹은 알고리즘이 나의 관심사에 맞는 메시지를 선별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뉴스나 SNS에서 보여지는 정치정보가 내 기존 성향에 맞춰진 결과임을 인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알고리즘이나 AI가 정치·행정 결정(예: 정책 우선순위 선정, 복지대상 선별 등)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I 기술이 공공정책 결정에 도입되는 것에 불안이나 우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알고리즘 기반 기술이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Q26. [Fundamental Rights]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온라인 상에서 내 정치적 신념· 성향이 수집되고 있음을 불안하게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알고리즘 기반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정치적 의견 개진 등)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원하는 정치정보 접근이 알고리즘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AI 정치기술이 특정 사회집단에만 이익이 되거나 차별적으로 작동한다고 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AI·알고리즘이 시민의 참여권 등 기본권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Q27. [Procedural Legitimacy]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AI·알고리즘이 적용된 공공결정과정에서 판단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공개된다	①	②	③	④	⑤
알고리즘 판단에서 오류(예: 차별, 실수)가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소재를 알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중요한 결정에서 비(非)인간적 자동화가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절차가 불투명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알고리즘에 의한 주요 결정에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할 경로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간적 심사에 통제되지 않는 AI· 알고리즘의 개입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Q28. [Substantive Democracy]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알고리즘은 내가 관심을 가진 동영상을 편리하게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알고리즘 또는 AI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만 강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알고리즘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인해 다수 시민의 정치적 자기결정(집단 판단 등)이 약화되는 사회가 될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데이터·알고리즘 환경에서 실제 시민참여가 ‘형식’에만 그친다	①	②	③	④	⑤
AI 기반 정보 환경은 정책결정에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AI와 알고리즘 기술로 인해 선거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Q29. [인공지능 규제방식]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AI)이 혐오·차별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공지능이 혐오·차별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개발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② 개발자나 기업이 혐오·차별 표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절차에 따라 차단해야 한다
- ③ 인간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혐오·차별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Q30. [기술과 민주주의 관계]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권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31. [선거관리 신뢰도] 선생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 선거관리에서 우려할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32. [정치효능감]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문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외적 효능감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내적 효능감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Q33. [이념 및 가치관]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권위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수주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성장주의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소득 및 돌봄의 불안정을 대응하는 것이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능력주의 (한국사회)	능력있는 사람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엘리트주의 (포퓰리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배경 질문

마지막으로 귀하에 대한 간단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보려 합니다.

DQ1. [1인가구] 현재 귀 닥은 1인 가구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Q2. [가족구성]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배우자
- ② 영유아 자녀(0~3세)
- ③ 미취학 자녀(4~7세)
- ④ 초등 1~3학년 자녀(8~10세)
- ⑤ 초등 4~6학년 자녀(11~13세)
- ⑥ 중학생 자녀(14~16세)
- ⑦ 고등학생 자녀(17~19세)
- ⑧ 대학생 이상 자녀(20세 이상)
- ⑨ 부모님(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부/모 중 1명만 있어도 체크)
- ⑩ 조부모님(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님, 조부/조모 중 1명만 있어도 체크)
- ⑪ 형제/자매(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1명만 있어도 체크)
- ⑫ 기타

DQ3. [직업]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 등)
- ②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③ 기능/숙련공(중장비, 선반/목공 등 숙련공, AS기술자, 운전자 등)
- ④ 일반작업직(토목 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⑤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 교사, 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 ⑥ 경영/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⑦ 전문/자유직(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 ⑧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가족 종사자 포함)
- ⑨ 전업주부
- ⑩ 학생
- ⑪ 퇴직/무직
- ⑫ 기타

DQ4. DQ3=1~8, 12일 때 [고용 형태] 귀하의 고용 형태(종사상 지위)는 어떠한가요?

- ① 상용 근로자
- ② 임시 근로자
- ③ 일용 근로자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DQ5. [가구세전소득] 귀 닥의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자 소득, 보너스 등 모두 합쳐서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299만원 |
| ③ 300~399만원 | ④ 400~499만원 |
| ⑤ 500~599만원 | ⑥ 600~699만원 |
| ⑦ 700~799만원 | ⑧ 800~899만원 |
| ⑨ 900~999만원 | ⑩ 1,000만원 이상 |

DQ6. [가구자산] 선생님 가구의 총재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5천만원 미만 | ② 5천만원~1억원 미만 |
| ③ 1억원~2억원 미만 | ④ 2억원~3억원 미만 |
| ⑤ 3억원~4억원 미만 | ⑥ 4억원~5억원 미만 |
| ⑦ 5억원~6억원 미만 | ⑧ 7억원~8억원 미만 |
| ⑨ 8억원~9억원 미만 | ⑩ 9억원 이상 |

DQ7. [주거형태] 선생님 가정의 현재 주거형태는 어떠한가요?

- ① 가족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 ② 가족 소유 주택이 있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 ③ 가족 소유 주택 없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 ④ 가족 소유 주택 없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DQ8. [응답자학력]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중퇴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재학/졸업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부록 2] 빅카인즈 대표기사 세트 목록

1. ‘디지털+민주주의+리더십’ 대표기사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1	MBN	2017.03.10	[박근혜 탄핵] 박근혜식 ‘불통 리더십’…8대 0 파면의 제1원인
2	데일리안	2024.12.04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행위’, 퇴진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 돌입”
3	투스타뉴스	2024.12.04	김어준 ‘계엄군 체포조가 집 앞까지 왔다’ 주장…계엄령 후폭풍 속 갈등 증폭
4	투스타뉴스	2024.12.05	김민석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민주주의 파괴 행위…탄핵 불가피”
5	글로벌 이코노믹	2024.12.06	美 국무부 “한국 계엄·탄핵 과정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계속지지”
6	매일경제	2024.12.07	‘탄핵 지지’ 집회에 100만 운집…탄핵 무산되자 “민주주의 무너져” “과거 계엄령 떠올라”
7	지디넷코리아	2024.12.07	외신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긴급 보도…“韓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8	이투데이	2024.12.10	이재명 “윤 대통령, 계엄령 재시도 위험…탄핵하고 민주주의 회복해야…”
9	서울신문	2024.12.13	[서울광장] 6시간 계엄 속 민주주의 지킨 ‘시민의 힘’
10	KBS	2024.12.13	탄핵 표결 하루 앞으로…“대통령 자격 없다”
11	YTN	2024.12.14	계엄사태 바라보는 한반도 주변 4강 엇갈린 반응
12	이데일리	2024.12.15	美 “韓민주주의 회복력” 지지했지만…트럼프 시대 ‘리더십’ 실종[尹탄핵소추]
13	프레시안	2024.12.15	가디언 특파원 “탄핵 가결 후 안도…계엄령 선포, 서울 취재진 오작하게 만들었다”
14	경남도민일보	2024.12.15	내란 막고 탄핵 이끈 시민, 민주주의 지킨 주권자
15	매일경제	2024.12.15	“이번에도 민주주의 지킨 韓 … 극단 분열 이겨내면 진짜 성공”
16	채널A	2024.12.16	[세계를 가다]워싱턴도尹 대통령 탄핵 ‘몸살’
17	매일경제	2024.12.16	“韓 민주주의 회복? 이제부터가 진짜”…정의란 무엇인가 쓴 세계적 석학의 메시지
18	폴리뉴스	2024.12.18	[이슈] ‘트럼프 2기’ 내년1월 출범.. 계엄·탄핵정국에美 정가 ‘한미, 국방·외교·안보 우려 목소리’ 한가득
19	데일리한국	2024.12.18	미국 국무부 “한국 대통령 탄핵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
20	천지일보	2024.12.25	[정치필답] 윤 탄핵, 급행열차… 이재명 재판, 완행버스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21	문화일보	2024.12.26	尹은 헌정질서 흔들고李는 국정 무력화... '민주주의 회복력' 가물가물[Deep Read]
22	아주경제	2024.12.27	[데스크 칼럼] 세계 '슈퍼 선거의 해' 대미를 장식한 한국 계엄령 사태
23	문화일보	2024.12.31	계엄·연쇄탄핵은 헌법적 위기... 검사정치·운동권정치가 민주주의 망쳐[Deep Read]
24	머니투데이	2025.01.01	계엄·탄핵이 시장경제 위협...40대 남성의 우려가 가장 컸다
25	머니투데이	2025.01.01	국민 61% "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가능"...시급한 건 '경제적 안정'
26	뉴시안	2025.01.01	[2025 신년기획] K-팝·K-콘텐츠 이은 'K-민주주의', 지구촌 감동시키다
27	머니투데이	2025.01.02	상처받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시민이 몸으로 느낀 위기
28	뉴스1	2025.01.09	[인터뷰]김성태 "국민의힘, 8년 전 탄핵 있어서 이렇게 된 것"
29	국민일보	2025.01.13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후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
30	문화일보	2025.01.14	걱정되는 탄핵정국 종착점[뉴스와 시각]
31	한국경제	2025.01.19	극단정치가 부른 폭력사태..."탄핵만큼 대외신인도 치명적"
32	KBS	2025.01.20	[창+] 세계의 석학이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말하다
33	한겨레	2025.01.23	"탄핵 외치면 중국인으로 매도에 민주주의 위기 절감"
34	노동과세계	2025.02.04	'탄핵 버튼' 달았다고 신상 털고 험박까지... 마트노조, 극우세력 고발
35	헤럴드경제	2025.02.25	최재형 "탄핵은 불가피, 아니라면 1960년대로 퇴행"
36	연합뉴스TV	2025.02.28	"한국, 계엄여파로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37	뉴스1	2025.02.28	"탄핵 찬성도 태극기 들자"...3·1절 태극기로 가득찬 집회 풍경 나오나
38	조선일보	2025.03.05	아시아기자협회 1000명, 한국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
39	시사IN	2025.03.06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시민들을 만나다 [유권자인식 조사후속' FGI]
40	위키트리	2025.03.11	계엄·줄탄핵 모두 비판한 한동훈... 좌우 네티즌 모두에게서 비판 쏟아...
41	국민일보	2025.03.11	[돋을새김] 다시 자유민주주의
42	아주경제	2025.03.12	[광화문부]尹 석방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
43	프레시안	2025.03.13	계엄 100일 맞은 시민들 "내란수괴 탄핵되는 날까지 광장 지킨다"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44	한겨레	2025.03.16	[사설] “윤석열 탄핵되면 극좌 판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45	뉴스토마토	2025.03.16	(정치원으로 진단) “승복이 민주주의 시작…불복 땀 파국”
46	머니투데이	2025.03.17	전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계엄·탄핵’ 한국도 후퇴
47	인천투데이	2025.03.19	[탄핵 분수령] 국회·선관위 침탈 ‘헌법수호 의무’ 저버린 윤석열 탄핵...
48	가톨릭신문	2025.03.19	“분열과 증오의 겨울 끝내고 민주주의 씨앗 뿌리는 봄 맞이해야”
49	신동아	2025.03.21	“탄핵 찬반은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정치권 전체 책임 물어야”
50	중앙일보	2025.03.22	대중 지지가 기반, 민주주의와 파시즘은 ‘동전의 양면’
51	업다운뉴스	2025.04.04	탄핵 불확실성은 견뎠지만...리더십 교체기에 절실한 ‘협치’ 추경
52	매일신문	2025.04.04	尹 파면 외신들도 긴급 타전...“박근혜 탄핵한 자신도 같은 운명”
53	강원도민일보	2025.04.05	[사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력 확인했다
54	광주일보	2025.04.06	“법치 존중이 민주주의다”
55	브레이크뉴스	2025.04.07	2025·리더십 전환의 시대...6·3대선에 박근혜 등장할 수 있을까?
56	아주경제	2025.04.09	[데스크칼럼] 통합 리더십 시험대 오른 조기 대선
57	아주경제	2025.04.13	[위기의 대한민국, 왜 리더십이 중요한가①]尹 탄핵 정국 123일간 경제...
58	아주경제	2025.04.14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 안돼...대통령다운 리더십 갖춰야
59	아주경제	2025.04.14	[이춘구 칼럼] 국민의 민주주의 학습과 한국적 ‘상식’의 탄생
60	전남일보	2025.04.15	“탄핵 광장 뜨거운 열기...민주주의 발전 동력 삼아야”
61	세계일보	2025.04.22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하기로
62	한겨레	2025.04.24	“아버지가 계엄해도” “윤석열에 사과”...한동훈-김문수, 탄핵 공방
63	JTBC	2025.04.24	문형배, 블로그에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 책 구절 올려
64	한겨레	2025.04.25	병상의 교황, 윤석열 계엄 때 “걱정...한국서 어떻게 그런 일이” [영상]
65	뉴시스	2025.04.25	문형배,尹파면 후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 책 구절 올려
66	한국경제	2025.04.25	지귀연 판사도 탄핵?...구야권 “尹에게 前 대통령이라고 해”
67	서울신문	2025.04.25	김문수 “탄핵은 韓 책임” 한동훈·안철수 “계엄, 국민께 사과하라”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68	노컷뉴스	2025.04.26	최형두 “한덕수 만든 8할은 민주당…탄핵때문[한관승부]
69	MBC	2025.04.27	[스트레이트] [헌법재판관의 무게] 어른을 따라,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다
70	MBC	2025.04.27	[스트레이트] [헌법재판관의 무게] ‘선택적 월권’과 재판관 ‘알박기’
71	신동아	2025.04.27	“현재 탄핵심판 타당성 제도적으로 검토할 때”
72	프레시안	2025.04.28	“尹 파면 이끈 주권자 혁명의 뿌리는 5·18 정신, 반드시 헌법에 수록해야”
73	헤럴드경제	2025.04.28	대통령·검찰·사법권력 ‘새로고침’, 헌법 ‘새이름으로 저장’
74	한겨레21	2025.04.28	현재는 ‘윤석열 말이 거짓말’이라고 여덟 번 말했다
75	대전일보	2025.04.28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지방정부 권한 이양…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연”
76	미디어오늘	2025.04.28	문형배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
77	이데일리	2025.04.28	안철수 “비상계엄 옹호 후보론 대선 필패[만났습니다①]
78	뉴시스	2025.04.29	계엄일 경찰 간부들 통화 법정서 재생…“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나”
79	서울신문	2025.04.29	[세종로의 아침] 과제 남긴 헌법재판 제도… 제대로 고치자
80	뉴스1	2025.04.29	檢, 조지호·김봉식 내란 재판서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
81	기자협회보	2025.04.29	“대통령 지시 거부하면 쿠데타?”… 문민통제 퇴보하다 계엄
82	노컷뉴스	2025.04.29	어린이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이야기…‘아빠, 비상계엄이 뭐예요?’
83	디지털타임스	2025.04.29	‘野’ 예산 감액이 윤석열 계엄 원인? 최상목 “아니라고 생각한다”
84	오마이뉴스	2025.04.29	민주주의에 드리운 그림자, 나는 그날 파시즘을 보았다
85	부산일보	2025.04.30	[데스크 칼럼] ‘탄핵 포비아’가 이끈 역주행의 결말은
86	프레시안	2025.04.30	국제앰네스티 “한국, 계엄령 선포로 국민 기본권 침해”
87	동아일보	2025.04.30	반탄 강성당원 결집 김문수 vs 찬탄 중도층 흡수 한동훈…‘탄핵의 강’서 승부
88	무등일보	2025.04.30	1980년 광주, ‘12·3 계엄’ 단죄… 5월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89	동아일보	2025.04.30	[광화문에서/박훈상]출마 ‘노코멘트’ 한덕수, 탄핵 찬반 분명히 해야
90	동아일보	2025.04.30	계엄날 “뭘 체포하냐” 묻자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91	동아일보	2025.04.30	김문수, 반탄 강성당원 결집-한동훈, 찬탄 표심 몰려… ‘탄핵의 강’ 극과극 대결
92	머니 이코노미뉴스	2025.05.04	지금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93	미디어스	2025.05.12	민주주의 요체는 참여인가, 숙의인가
94	경향신문	2025.05.14	“완전 엉망이 된 나라…극도의 효율적 리더십 가진 지도자 필요”[박주...
95	무등일보	2025.05.14	“계엄은 위헌, 탄핵은 정당”...무책임한 정치권엔 균형 비판
96	내일신문	2025.05.15	[국가 대개조를 시작한다 ③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계엄·탄핵...
97	폴리뉴스	2025.05.15	[21대 대선 전망 토론회①] “시대정신은 민주주의·경제회복, 기성정치...
98	내일신문	2025.05.15	[국가 대개조를 시작한다 ③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계엄·탄핵...
99	내일신문	2025.05.27	깜깜이 앞서 ‘세몰이’에 탄핵 당한 전직까지
100	뉴스1	2025.05.27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최고 명령자’ 아닌 ‘최고 설득자’

2. ‘디지털+민주주의+정당’ 대표기사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1	헤럴드경제	2008.07.23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디지털시대의 성숙한 민주주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2	뉴스1	2013.04.08	이용섭, ‘전당원 투표제’, ‘디지털 정당화’ 제안
3	경인일보	2013.05.23	[경인정가]최재성, ‘디지털융합시대 새로운 리더십’ 인천대 특강
4	헤럴드경제	2016.10.05	정의화 “한국정치 비효율적·민주주의 기능상실, 대선 전 국내최초 디지털 정당 만들 것”
5	연합뉴스TV	2016.10.05	김병준, ‘한국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정당’
6	한겨레	2016.11.14	엘리트정치의 벽 뚫는 디지털전사들의 ‘해킹’
7	아주경제	2016.12.12	[단독] 정의화 전 국회의장, 내년 1월 초 ‘디지털 정당’ 창당 ! 아주경제
8	폴리뉴스	2018.06.26	바른미래당, 6.13지방선거 패인은 ‘계과갈등’...세대교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9	내일신문	2019.07.02	여당 온라인정당 실험 “성공”
10	뉴스투데이	2019.12.29	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다짐
11	중앙일보	2020.03.10	[장훈 칼럼니스트의 눈] 데이터 홍수시대에 투명성도, 개방성도 없는 정당 공천
12	한겨레	2021.04.05	세대 갈등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가 ‘촛불’의 계승
13	노컷뉴스	2022.06.14	진중권 “수박 논쟁? 내부 총질과 같은 의미..나치즘 연상” [한판승부]
14	JTBC	2022.06.16	더미래 “민주당 얼굴 바꾸겠다”...이재명 당권 도전은?
15	서울경제	2022.06.18	정치보복’ 논란 ...최민희 “尹 ‘본·부·장’ 의혹은 다 무혐의”
16	매일경제	2022.07.09	비대위마저 눈치 보는 개딸...민주당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
17	KBS	2022.11.30	[주진우 라이브] 박영선, “당대표 필요 없는 정당으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시대 열어야, 공천제도 폐지”
18	폴리뉴스	2022.12.02	박영선 “민주당 분당 가능성” 경고...“당대표 없고 당공천 없는 디지털 정당 필요”
19	국제뉴스	2022.12.18	한·독 보수 싱크탱크,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당’ 정책 보고서 발간
20	더팩트	2023.03.03	민주당, 내부 ‘균열’에 통제불능 ‘개딸’까지 골머리
21	이데일리	2023.03.08	‘당원’이 정당의 주인? 여의도 뒤흔드는 당원 민주주의의 역습
22	YTN	2023.03.15	[나이트포커스]尹, 일본 방문 예정...“정상회담 뒤 공동회견”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23	주간경향	2023.03.17	민주당 ‘지지자 리스크’ 탈출 가능할까
24	경향신문	2023.03.18	‘지지자 리스크’의 덫…민주당, 탈출구 있나
25	JTBC	2023.03.27	개혁의 딸’서 ‘계륵의 딸’로?...‘개딸’ 딜레마 빠진 민주당
26	한국경제	2023.04.12	천하람 “전광훈은 극우 유튜버”…김남국 “개딸들 재기 발랄”
27	YTN	2023.04.12	[나이트포커스] 중진들, 출범 한 달 ‘김기현 체제’에 쓴 소리
28	중도일보	2023.04.13	[사설] 극렬 지지층 득세, 중도층 못 잡는다
29	뉴데일리	2023.05.18	재명이네마을’ 이장 좀 그만두시라… 이원욱, 의총서 이재명에 ‘쓴소리’
30	시사저널	2023.05.22	개딸에 선전포고한 非明… “이재명, ‘남국의 늑’ 벗어나려면 손절해야”
31	파이낸셜뉴스	2023.05.24	개딸 악성문자’에 당 내홍 격화...“허위사실 유포”vs“옹호 의원 징계”
32	머니S	2023.05.24	민주당, ‘개딸’ 내홍 심화... ‘악플 테러’에 결별 목소리 커져
33	뉴스타파	2023.05.30	[특집 다큐]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
34	MBC	2023.06.22	[시선집중][이제는말한다] 조웅천 “이재명 사퇴? 시기의 문제. 이낙연, 가혹하지만 낙향하길...”
35	일요서울	2023.06.30	[집중분석] 양향자가 쏘아 올린 ‘K-플랫폼 정당’의 빛과 그림자
36	신동아	2023.07.07	이재명, 개딸 향한 “또금만 더 해두며여”에 담긴 깊은 뜻
37	중앙일보	2023.08.24	“배신자!” 카메라 들고 기습...‘개딸’ 불러도 그들은 평균 52세
38	서울신문	2023.09.22	개딸 ‘수박 색출’에 민주 의원들 “나는 부결” 인증 릴레이
39	헤럴드경제	2023.10.28	野 지도부는 개딸?...李 통합 위해 개딸과 결별할까?[이런정치]
40	이데일리	2023.11.16	‘원칙과 상식’ 출범, 행동 나선 ‘비명계’... “개딸과 결별하라”(종합)
41	폴리뉴스	2023.11.28	민주 혁신계 ‘원칙과 상식’ “‘개딸빠시즘’으로 당 망해” 집중 공세...12월까지 ‘당변화’ 지켜볼 것
42	SBS	2023.11.28	[정치쇼] 이원욱·김종민 “방탄은 원칙, 막말은 상식...이재명, 당대표 또 나오나”
43	동아일보	2023.12.25	“개딸 악마화돼 파기” vs “누구 마음대로” 갈라진 李 강성 지지층[인사이드&인사이드]
44	서울신문	2024.03.08	[서울광장] 팬덤과 팬덤이 낳은 정치 퇴행
45	신동아	2024.06.09	‘말따행따 이재명’ 팬덤 키우려고 애쓴 윤석열·김건희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46	뉴스핍	2024.07.20	[노사모와 개딸] ③“권리당원 아닌 권력당원... 한동안은 극렬 목소리가 지배”
47	연합뉴스TV	2024.07.21	[여의도풍향계] 정치적 동반자? 극단 지지자? 팬덤 정치의 명암
48	한겨레21	2024.09.28	일상과 민주주의에 징검다리 놓은 30년
49	한겨레	2024.11.07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두를 품을 정도로 크다”
50	참세상	2024.11.12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51	한겨레	2024.12.05	K민주주의의 밤, 여의도로 갔다 [전범선의 풀무질]
52	세계일보	2024.12.07	‘민주주의정상회의’ 먹칠한 윤석열... 8달 전 했던 말 따져보니
53	오마이뉴스	2024.12.09	위기의 민주주의... 강경숙 “민주 시민 육성이 공교육 목표”
54	매일노동뉴스	2024.12.23	사회적 대화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①
55	한겨레	2024.12.28	민주주의 위기 ‘깜깜한 밤’, 우리를 이어준 언어의 힘 ② [txt]
56	중앙일보	2024.12.30	머스크, 나치 옹호한 극우정당 적극 지지...유럽정치까지 건든다
57	한국경제	2025.01.06	실용주의 노선 갈아타는 유럽 극우정당...이미지 세탁인가, 유연한 진화인가
58	글로벌 이코노믹	2025.01.07	2025 청사년: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59	로리더	2025.01.07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디지털시대 걸맞은 국가안전조치 필요”
60	한국일보	2025.01.10	“76분 대담서 ‘와우’ 연발”... 머스크, 독일 극우정당 ‘홍보 스피커’ 됐다
61	교수신문	2025.01.10	“친위 쿠데타에서 민주주의 회복까지”...극단의 정치 이후는?
62	아시아투데이	2025.01.14	정교모 “민주 ‘카톡 사찰’, 유사전체주의 정당 증명...전용기 사퇴해야”
63	뉴데일리경제	2025.01.14	野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 ... 전국교수모임 “민주당 행태는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
64	시사오늘 (시사ON)	2025.01.14	허은아 “黨 사당화는 내가 아닌 이준석...정당 민주주의 바로 세울 것” [정치오늘]
65	동아일보	2025.01.17	[김순덕의 도발]‘위조 민주주의’에 취했던 대통령 윤석열
66	폴리뉴스	2025.01.18	[정하룡 칼럼] 을사년에 달라지는 2025가지
67	오마이뉴스	2025.01.20	서부지법 폭동, 이젠 정말 정당이 잘해야 한다
68	YTN	2025.01.21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
69	월간조선	2025.01.23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우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70	문화저널21	2025.01.31	[박항준 칼럼] 국민입법,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힘
71	동아일보	2025.02.06	“내가 바로 광복 80주년 디지털 홍보대사!” 반크, 광복 80주년 기념 ‘광복 80주년 홍보대사’ 양성
72	뉴스위치	2025.02.17	[위치칼럼] 민주주의의 위기: 위기에 처한 시스템
73	프레시안	2025.02.24	탄핵이 낳은 거대한 갈등, 직접민주주의가 유일한 해결책[복지국가SOCIETY]
74	한겨레	2025.02.25	‘문형배 음란물’ 가짜뉴스 논란…조희수 장사에 명드는 민주주의
75	오마이뉴스	2025.02.27	국민이 두 번 구한 민주주의의… ‘자만의 덫’에 빠지면 극우 등장한다 [소셜 코리아]
76	경향신문	2025.02.27	[세상 읽기]극우 세력에 짓밟힌 ‘깨진 민주주의’ 찾아오기
77	슬로우뉴스	2025.02.27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 한국이 빠진 자만의 덫 - 슬로우뉴스
78	디지털타임스	2025.03.06	[고견을 듣는다] “李, 법치·민주주의 망가뜨릴 것… 민주, 대선 후보 바뀌야”
79	시사매거진	2025.03.08	국민의힘 서울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2025년 발대식 개최
80	강원도민일보	2025.03.10	[월요칼럼]민주주의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정보전의 위험
81	오마이뉴스	2025.03.14	‘민주주의’ 내세우며 벌인 일, 이게 말이 됩니까?
82	이투데이	2025.03.19	[논현로] 진화하는 K팝 ‘팬덤의 정치화’
83	미디어오늘	2025.03.27	음모론 퍼지는 커뮤니티… ‘디지털 공론장’ 이대로 괜찮나
84	MBN	2025.04.08	박찬대 “국민의힘,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낼 생각…위헌정당 확정”
85	한겨레	2025.04.08	우크라이나 난민 ‘9유로 티켓’, 독일 민주주의가 키우다
86	광주매일신문	2025.04.16	[의정칼럼]다시 시작하는 민주주의, 더 단단한 공화국으로 / 채은지
87	스카이데일리	2025.04.29	“국회·정당·권력구조·투명성·소통... 다섯 가지 과제 넘어서야”-② 정치
88	한겨레	2025.04.30	가짜뉴스, 전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왜냐면]
89	아주경제	2025.05.01	[문송천의 디지털 산책] 민주주의 위장한 ‘딥페이크 정치’…양원제로 줄을 끊자! 아주경제
90	파이낸스 투데이	2025.05.09	[박대석 칼럼] 입법 독재로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
91	중도일보	2025.05.11	[전문인칼럼] 정당의 재발견: “의제로 뭉치고 세대로 잇는 정치 혁명”
92	미디어스	2025.05.12	민주주의 요체는 참여인가, 숙의인가
93	기자협회보	2025.05.13	대선 국면, 화두 던지고 정책방향 제시… “민주주의 강화하는 언론의 길”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94	EBS	2025.05.19	EBS뉴스 - AI 시대, 선거는 여전히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가능성은?
95	헤럴드경제	2025.05.22	[헤럴드광장] AI 시대, 효율성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96	중앙신문	2025.05.25	이재명 “민생과 통합의 대선으로”...“경제 살릴 준비된 정당 필요”
97	헤럴드경제	2025.05.26	[이형석칼럼]한국을 노린 음모'와 K민주주의의 도전
98	매거진한경	2025.05.26	日 초고령사회의 ‘실버민주주의’...대선 앞둔 한국의 사정은?
99	브레이크뉴스	2025.05.27	[21대 대선 주요정당 후보 10대 공약 비교 분석]
100	쿠키뉴스	2025.05.31	정치적 혐오의 일상화,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혐오의 시대①]

3. ‘디지털+민주주의+선거’ 대표기사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1	중앙SUNDAY	2021.07.24	[한경환 曰] 디지털 민주주의에 경종
2	전자신문	2021.12.21	[미래포럼] 디지털 민주주의 선거일
3	뉴데일리	2023.09.06	16대 김대업, 17대 BBK, 19대 드루킹, 20대 김만배... 민주당, 대선마다 ‘선거공작’
4	아시아투데이	2023.09.10	[사설] 대선 가짜뉴스 ‘초고성능 스피커’ 네이버, 그냥 둘 것인가
5	스카이데일리	2023.09.12	“포털은 가짜뉴스 진앙지” 국민의힘 ‘대선게이트 허위 인터뷰’ 긴급토론회
6	파이낸스 투데이	2023.10.02	포털 여론조작 ‘빼박증거’ 나왔다, “한중전 축구에 중국 응원 더 많아”
7	조선비즈	2023.10.04	다음 中 응원, 해외발 매크로·VPN에 뚫렸다... 여론조작 ‘드루킹 시즌2’ 우려
8	조선비즈	2023.10.04	이동관 “포털 서비스,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범부처 TF 가동”
9	데일리안	2023.10.05	김장겸 “관치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우려...과잉반응일까요?”
10	세계일보	2023.10.05	[사설]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가짜뉴스 대책 마련 시급하다
11	YTN	2023.10.05	[뉴스앤이슈] 포털 “다음” 中 응원 댓글 논란... 與 “여론조작” vs 野 “포털 길들이기”
12	스카이데일리	2023.10.05	[조맹기의 언론 톨아보기] ‘대선 여론조작 공작’ 주범 문재인·이재명 왜 처벌 안 하나
13	문화일보	2023.10.05	‘여론조작 숙주’ 포털 대개혁 급하다[포럼]
14	아시아경제	2023.10.05	[시시비비]여론 조작, 포털보다 더 큰 구멍 있다
15	뉴스1	2023.10.05	총선 앞두고 중국 응원조작...국힘 ‘제2 드루킹’과 전쟁, 왜?
16	미디어오늘	2023.10.05	[아침신문 속아보기] 한겨레 “정부·여당, 호들갑 떨며 ‘여론조작 음모론’ 키워”
17	폴리뉴스	2023.10.05	[이슈] 與 ‘다음 中응원, 반국가세력 여론조작’...野 “여론통제 위한 억지”
18	세계일보	2023.10.05	국힘 “문제 근본 원인은 여론 영향력 지대한 포털”
19	연합뉴스	2023.10.05	與 ‘다음 中응원’ 의혹에 “총선전 여론조작 대책 마련 시급”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20	주간한국	2023.10.06	다음發 포털 여론조작 논란...‘제2의 드루킹’ or ‘침소봉대’
21	조선일보	2023.10.06	[사설]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
22	매일신문	2023.10.07	자유시민 배우 이영애...가짜뉴스 선거전략? Vs. 포털 여론조작 뭐가 문제? [석민의News픽]
23	펜앤드마이크	2023.10.08	도둑놈 감싸면서 경찰 욕하는 민주당, ‘다음’ 여론조작을 왜 웃어넘기려 할까
24	뉴시스	2023.10.09	가짜뉴스·여론조작·국감 호출...동네북이 된 포털[사이다IT]
25	디지털데일리	2023.10.10	[국감2023] 가짜뉴스로 똥똥 뭉친 방통위·與 “포털도 언론 영역 책임 물어야”
26	서울경제	2023.10.14	[사설] ‘엑스’에 칼 뽑은 EU... 우리도 포털에 가짜뉴스 관리 책임 물어야
27	뉴스웍스	2023.11.02	김영덕 “특정 정치세력, 가짜뉴스 제작·확산...포털·유투브, 막대한 영향력 비हे 책임 안 져”
28	신동아	2023.11.03	北,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韓 주권 침탈한다
29	세계일보	2024.01.08	홍석준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심의? 민주당 내로남불”
30	국민일보	2024.02.06	[사설] 총선 위협하는 여론 조작 세력... 유권자 목소리 지켜내야
31	머니투데이	2024.02.20	공정 선거의 적 ‘딥페이크’ 기승...與 “선관위·IT업계 대응 강화해야”
32	프레시안	2024.02.24	탄핵이 낳은 거대한 갈등, 직접민주주의가 유일한 해결책
33	오마이뉴스	2024.02.27	국민이 두 번 구한 민주주의... ‘자만의 덫’에 빠지면 극우 등장한다
34	강원일보	2024.03.10	[월요칼럼]민주주의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정보전의 위험
35	KBS	2024.03.18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북한 위협 공동 대응 필요”
36	파이낸셜뉴스	2024.03.19	AI 등 디지털 기술 부작용 확산... 선거·민주주의 위협에 대응해야
37	파이낸셜뉴스	2024.03.19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거와 민주정치 지키는 계기”
38	아시아경제	2024.04.18	[SCMP 칼럼]선거의 해, 디지털 교차로에 선 민주주의
39	펜앤드마이크	2024.12.14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① 한겨레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40	동아일보	2025.01.17	[김순덕의 도발] '위조 민주주의'에 취했던 대통령 윤석열
41	라이프인	2025.03.13	"극우 유튜버 수익 창출은 중단해야" 2천명의 시민이 고민한 민주주의 지킬 방법들
42	cpbc 가톨릭 평화방송	2025.03.21	한더클 I 분열의 시대, '광장 민주주의'가 답일까? [김준일의 뉴스공감-이관후·김윤철]
43	IFS	2025.03.24	이준호의 사이버보안 이야기 <34> 유발하라리(NEXUS)에게서 배우다: AI 시대, 민주주의와 사이버 윤리의 도전 > News Insight (사)국가미래연구원
44	참여와혁신	2025.04.02	[기고] 2024년 유럽 사회혁신 대회, 주제는 '디지털 민주주의'
45	국제뉴스	2025.04.06	[전문]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46	시민일보	2025.04.09	"대선 앞둔 민주주의 파수꾼, 선거공익탐정이 나서야 할 때"
47	아시아투데이	2025.04.10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확대 출범...이언주 의원 "지속적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성장 토대"
48	비즈니스 포스트	2025.04.16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이제명 'AI 100조 투자' 공약과 '디지털 민주주의'
49	일요서울	2025.04.18	[박찬현의 횡설종설(橫設從設)] K-민주주의, 이제 우리 정치를 수출해보자
50	스카이에일리	2025.04.18	[스카이 View] 부정선거 의혹 '시스템 위기' 시그널
51	YTN	2025.04.21	'어대명' 넘은 '구대명'에...국민의힘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Y녹취록]
52	디지털포스트	2025.04.23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파괴... '허위조작 정보' 답페이지와의 전쟁
53	KBS	2025.04.25	국민의힘 최형두 "AI 시대, 편파·허위 조작 뉴스 가려내야"
54	파이낸스 투데이	2025.04.27	[분석] SKT 유심 해킹 사태, 부정선거 우려까지...디지털 민주주의의 위기
55	THE FACT	2025.04.28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부정선거 빌미 원천 차단할 투표환경 조성해야
56	강원도민일보	2025.04.28	안철수 "강원, 해양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중심으로 육성"
57	한국NGO신문	2025.04.30	30개 시민단체 21대 대선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58	한겨레	2025.04.30	가짜뉴스, 전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왜냐면]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59	한국NGO신문	2025.04.30	30개 시민사회단체, 21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 한국NGO신문
60	디지털타임스	2025.05.01	[고견을 듣는다] “李 대법판결로 대선 이슈 급변… 당선 돼도 보궐선거 가능성“
61	아주경제	2025.05.01	[문송천의 디지털 산책] 민주주의 위장한 '딥페이크 정치' ...양원제로 줄을 끊자! 아주경제
62	로리더	2025.05.07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혁명의 역사에 비춰 본 디지털 혁명의 본질”
63	제주일보	2025.05.08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로 유권자에 보답 노력”
64	인더스트리뉴스	2025.05.08	[AI와 정치] AI, 부정선거 음모론 잠재울 묘약이 될 수 있을까? - 인더스트리뉴스
65	파이낸스투데이	2025.05.09	[박대석 칼럼] 입법 독재로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
66	머니투데이	2025.05.11	이재명의 광장, 김문수의 물류센터…6·3 대선 선거운동 막 오른다
67	여성신문	2025.05.12	장혜영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민주노동당, 성평등 공약 발표
68	경향신문	2025.05.12	민주노동당 권영국, 고공농성장서 선거운동 시작… “유일 진보 후보”
69	미디어스	2025.05.12	민주주의 요체는 참여인가, 속의인가
70	파이낸셜리뷰	2025.05.12	[오늘 통한 과거리뷰] 대통령 선거 공약史
71	뉴데일리	2025.05.12	국민의힘 제우도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선대위' 출범
72	프레시안	2025.05.13	여성 '금기어' 취급하는 대선판…권영국 “페미니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73	한국기자협회보	2025.05.13	대선 국면, 화두 던지고 정책방향 제시… “민주주의 강화하는 언론의 길“
74	데일리팝	2025.05.13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부 경고… “불법 선거행위, 끝까지 추적”
75	양평 시민의소리	2025.05.14	대통령선거와 소셜미디어
76	광주일보	2025.05.16	'6·3 선거 공감' 기고 <3> 선거, 권리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축제 - 박홍철 광주소비자연맹 부회장
77	뉴시스	2025.05.19	무소속 후보 TV 토론…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송진호 “정치 개혁 대통령”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78	매일경제	2025.05.19	이 정도면 '선거 필승카드' 수준...전세계는 지금 '反트럼프 열풍'
79	전북도민일보	2025.05.19	소셜 미디어 시대의 선거와 선거방송토론의 의미: 제21대 대통령 후보자토론회를 기다리며
80	EBS	2025.05.19	EBS뉴스 - AI 시대, 선거는 여전히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 가능성은?
81	세계일보	2025.05.20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이 나라 살릴 답”... 송진호 “정치 개혁 대통령 될 것”
82	전자신문	2025.05.21	[김호광 칼럼]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통한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론 통합 위한 제언
83	YTN	2025.05.21	“尹,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국민의힘 일각서 한숨 [Y녹취록]
84	한겨레21	2025.05.22	민주주의 훼손, 정경유착... '게이트'의 끝판왕
85	아시아엔 THE AsiaN	2025.05.22	RSF “공영방송 독립, 한국 민주주의 회복 출발점”...대선 후보 6인에 언론자유 5대개혁안 권고
86	충청타임즈	2025.05.22	후보자등록부터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87	오마이뉴스	2025.05.23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언론개혁 이뤄내야”
88	내일신문	2025.05.23	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강화”...당원주권주의→국민주권주의로
89	부안독립신문	2025.05.23	[윤장렬의 베를린에서 온 편지 - 18] 대통령선거와 소셜 미디어
90	대전일보	2025.05.25	이재명·김문수, 선거 중반전 이슈 선점 주도권 싸움
91	뉴스핍	2025.05.25	[전문] 이재명 “이번 대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선거... 절체절명의 순간”
92	헤럴드경제	2025.05.26	[이형석칼럼]한국을 노린 음모'와 K민주주의의 도전
93	매거진한경	2025.05.26	日 초고령사회의 '실버민주주의'... 대선 앞둔 한국의 사정은?
94	펜앤마이크	2025.05.26	[황우섭 칼럼]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민주주의의 기초다
95	중앙일보	2025.05.27	[중앙시평] 알고리즘 공론장, 민주주의·공화주의 위협한다
96	SBS	2025.05.28	경적으로 유세 방해하더니 사람 매달고...도 넘은 선거 폭력
97	시사저널	2025.05.30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으로 부정선거 논란 잠재울 수 있다 [김형자의 세상은 지금]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98	뉴데일리	2025.05.30	사전투표가 남긴 선관위 총체적 부실 ... '소쿠리 선거' 후에도 무능함 드러냈다
99	대한민국 국회방송	2025.05.30	[국회라이브]/정치한수] 유인태 “유권자 3분의 1 투표 마쳐…국민의힘, 단일화 미룬 버려야”, 김성태 “김문수 막판 전략? ‘윤·부정선거’ 선 긋기부터”
100	더퍼블릭	2025.05.31	선관위 총체적 부실 '도마 위'... '소쿠리 선거' 비판에도 무능함 드러나

4. ‘디지털+민주주의+참여’ 대표기사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1	주간동아	2017.03.08	“두 동강 난 국론 모으려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2	시민일보	2017.03.09	판도라 상자를 닫을 자신이 없으면 열어선 안 된다!
3	경남도민일보	2017.03.13	독재정권 찬양에 동조? 3·15기념사업회 뒷말 무성
4	브레이크뉴스	2017.03.23	역사바꾼 박영수 특검. 현재 재판관들에 훈·포장수여 하길...
5	중부일보	2017.03.27	시대에 맞는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필요
6	월간조선	2017.03.30	대통령의 불운이 곧 국가의 불행이다
7	전북일보	2017.04.09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김종영 사무처장 “5월 대선, 자유·정의로운 민주사회 다듬돌 되길”
8	아주경제	2017.04.10	[뉴스룸365] ‘진흥당 검증 전쟁’, 이젠 정책으로 승부하라.
9	법률저널	2017.05.04	오시영의 세상의 창-대선을 앞두고 우리, 토론 한 번 하자
10	주간경향	2018.03.21	[특집] “또 태극기 집회 가세요” 집안 갈등
11	우리공화당	2019.11.12	<브리핑> 우리공화당 태극기투쟁 3대 법안
12	아시아투데이	2020.04.19	범투본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총선 후 첫 ‘유튜브 집회’
13	한겨레	2020.04.21	“총선 통해 탄핵 완성됐지만 아직 주류세력 교체는 아니다”
14	뉴스톱	2020.04.21	‘태극기’ 의식해 선거부정 음모론에 ‘빨대 꽃은’ 전광훈
15	내일신문	2020.05.14	보수야권 아직도 ... 꿈수정당·부정선거·골프 ‘자폭’
16	시사오늘	2020.06.13	[폴인터뷰] 이준석 “해커개입 여지 없다...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허구”
17	아시아경제	2020.08.14	“박근혜 사면하라”, “친일파 파묘하라” 광복절, 갈등으로 얼룩지다
18	뉴시스	2020.08.28	통합당 ‘전광훈 싱크홀’에 허우적...‘태극기 손절’ 역풍도?
19	경향신문	2020.09.23	[이중근 칼럼]선거 불복종 부추기는 자 누구인가
20	서울신문	2020.11.11	하태경 “제명해야” 민경욱 “사대주의자”... ‘부정선거 의혹’ 설전 2R
21	경향신문	2020.11.14	부정선거 한미공조 ‘민트동맹’ 실현 가능한 주장일까
22	굿모닝충청	2022.11.21	[청년광장] 촛불집회 참석이 대선 불복인가?
23	서울경제	2023.02.12	황교안 “지난 실패 철저히 돌아봐...30년 자유민주정권 창출”
24	서울경제	2023.10.12	홍익표 “집권여당, 민심 그대로 수용해야...‘선거부정 주장’ 실수 반복 말길”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25	뉴스토마토	2023.10.13	이 와중에 부정선거 군불...일각선 '사전투표 폐지'까지
26	더팩트	2023.10.13	'보선 참패' 與, 선관위로 화살?...황교안 전 대표 전철 밟나
27	굿모닝충청	2024.01.25	뉴탐사, 尹 정부 관변단체 해외 지부 극우화 과정 포착
28	파이낸스 투데이	2024.02.23	부정선거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배제.. "국힘 제정신?"
29	디지털타임스	2024.05.11	'부정선거' 제기 황교안 "억울해 목구멍서 '짐승 울음' 소리만 나"
30	스카이데일리	2024.05.23	"4.10총선 부정 의혹... 탄핵정국 연관지어 이해해야"
31	라이브뉴스	2024.05.30	대구 부정선거 규탄집회, 약 5천여 명 참가해 정부에 철저한 조사 요구
32	아시아투데이	2024.06.06	현충일 서울 도심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집회...보수단체 집결
33	NGO뉴스	2024.06.18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시대정의
34	아시아투데이	2024.07.13	태극기 높이 든 안보시민단체... '혁명의 불꽃처럼' 부정선거 수사 촉구
35	아시아투데이	2024.07.27	전광훈 목사 "尹 대통령, 부정선거 전모 밝혀야"...8·15 광화문 대규모...
36	아시아투데이	2024.07.27	보수단체, 정전협정 71주년 집회서 '4·10 총선 부정선거' 주장
37	스카이데일리	2024.08.11	8월15일 '공명선거 쟁취 총궐기대회' 예고
38	아시아투데이	2024.08.15	[8·15국민대회] 팻말·태극기 흔들며 거리로... 광화문서 용산까지 3.4km 행진
39	아시아투데이	2024.08.24	"부정선거 의혹 밝히고 자유통일 이뤄내자"...쏟아지는 소나기에도 광화문 1만 운집
40	아시아투데이	2024.09.21	"국민 똑똑해...4·10 총선 부정선거 사실 국민이 다 안다"
41	아시아투데이	2024.10.05	부정·조작선거 수사 강력 촉구..."집회 계속 될 것"
42	아시아투데이	2024.10.05	"태극기 들고 광화문서 애국 함께 실천"
43	스카이데일리	2024.10.07	고 김재홍 대표 2주기 추모식 거행... "부정선거 규명 선봉"
44	시사저널	2024.10.18	'한강 노벨상' 반대 단체들의 정체는?...공통점은 '부정선거'
45	아시아투데이	2024.11.01	"선거재판 신속 진행"...대법원 압박 나선 애국시민들
46	아시아투데이	2024.11.02	[포토] '부정선거 수사촉구 범국민대회'...태극기·성조기 들고 도심 행...
47	아시아투데이	2024.12.04	[계엄령 후폭풍] "보수 괴멸만은 안된다"... 광화문 대규모 태극기 집회...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48	시사인	2024.12.06	[단독] 전광훈 “부정선거 의혹 수사 안 하면 윤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다.
49	크리스천 투데이	2024.12.09	천만 명 대한인 대연합 “탄핵 대상,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
50	노컷뉴스	2024.12.12	선거로 뽑힌 尹, 선관위 못 믿어 계엄...‘극우 음모론’ 판박이
51	식품외식경제	2024.12.13	‘광화문 태극기 보수’, 시대착오적인가. 대안보수 세력인가
52	YTN 라디오	2024.12.13	尹 담화 “난 박근혜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태극기 집회에 불 붙일 요...
53	MBC	2024.12.13	직접 꺼내든 ‘부정선거’... ‘극우’ 결집 유도
54	뉴스1	2024.12.14	광화문 보수단체도 尹처럼 ‘부정선거’ 주장...시민들 “탄핵이 상식”
55	헤럴드경제	2024.12.14	[르포] 태극기 물결 광화문은 탄핵 반대를 외쳤다 “현재 앞으로 갈 것...
56	한국일보	2024.12.14	[현장] 광화문 집결 보수단체 “국힘은 민주당의 2중대가 되지 말라”
57	디지털타임스	2024.12.15	김근식 “탄핵반대만 85표, 계엄·부정선거당 돼버려...韓 대표직 불필요...
58	폴리뉴스	2024.12.15	[이슈] 한동훈 16일 기자회견, 당대표 사퇴 가능성... 韓지도체제 붕괴...
59	한겨레	2024.12.18	국힘이 관망한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 보수 파고들어
60	한국경제	2024.12.21	“뉴스 말고 유튜브 봐라”...언론에 배신당했다는 태극기 집회
61	한국경제	2024.12.21	“뉴스 말고 유튜브 봐라”...언론에 배신당했다는 태극기 집회
62	한국경제	2024.12.21	“뉴스 말고 유튜브 봐라”...언론에 배신당했다는 태극기 집회
63	오마이뉴스	2024.12.21	“저들에겐 총, 우리에게엔 빛”... 8년 전 머문 ‘태극기’, 진화한 ‘응원봉’
64	민중의소리	2024.12.23	[사설] 부정선거론으로 탄핵 반대 세력 선동하려는 국민의힘
65	뷰스앤뉴스	2024.12.23	박성민 “권성동 비대위? 며칠 못 가 무너질 것”
66	JTBC 뉴스	2024.12.25	‘대수장’ 4년 전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그대로 배운 노상원
67	매일경제	2024.12.28	“尹 체포, 내란동조 국힘 해체” 탄핵봉...“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68	데일리안	2024.12.31	“반국가세력·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여인형 휴대전화 메모 살펴보니
69	조선비즈	2024.12.31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휴대폰에 ‘V님’ ‘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70	MBC	2025.01.01	‘체포 저지’ 윤 대통령 지지자 방어선도...이 시각 관저 앞
71	오마이뉴스	2025.01.06	시대의 걸림돌 ‘모피아’부터 청산하라
72	오마이뉴스	2025.01.09	우리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합리적 보수정당’
73	뉴데일리	2025.01.11	“집회에 청년 이리 많은 것 처음 ... 민주 ‘입법 독재’·줄 탄핵 막아 나라 지켜낼 것”
74	한국경제	2025.01.11	“윤석열 대통령 만세”...2차 체포영장 발부에 尹 지지자 대집결 [현장+]
75	이데일리	2025.02.01	尹 기소 이후 첫 주말...‘탄핵 찬반 집회’로 뒤덮인 서울 도심
76	국민일보	2025.02.09	8년 전보다 더 여론재판에 매달리는 尹 탄핵심판
77	KBS	2025.02.10	[사사건건] 이재명 연설 속 ‘계엄’ 내용과 반응은?
78	YTN	2025.02.10	[시사정각] 친윤 의원 5명,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접견...여야 여론전 촉각
79	일요시사	2025.02.13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극우발 부정선거론 뜯어보니...
80	아시아투데이	2025.02.15	태극기로 물든 광화문 집회...“윤 대통령 탄핵 반대”(종합)
81	뉴시스	2025.02.15	광화문 점령한 태극기... “탄핵 무효” 외친 지지자들
82	파이낸셜뉴스	2025.02.16	전국 민심 둘로 쪼개진 尹탄핵 찬반 집회..정치권까지 가세 국론분열 심화[전국 종합]
83	동아일보	2025.02.17	‘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84	세계일보	2025.02.27	찬탄도 반탄도 ‘3·1절 총동원령’... 광장·캠퍼스 시위로 ‘몸살’
85	뉴스1	2025.02.27	태극기 흔들며 부정선거 조사하라
86	중도일보	2025.03.11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대전서 찬반 갈등 고조
87	단다뉴스	2025.03.12	“부정선거, ‘좌시’하지 않겠다”...‘극우 망언’ 판박이 ‘애국’경상인 집회
88	스카이에일리	2025.03.13	[김태연칼럼] 법조계 내 친중·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나라 망친다
89	MBC	2025.03.21	[정치콕] 한덕수-윤석열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나...전망은?
90	뉴데일리	2025.03.28	폭행당한 우파 운동가 “경찰은 부정선거 배후인 中 공산당 하수인인가”

연번	언론사	게시일자	제목
91	이데일리	2025.04.03	“탄핵 기각 확신”...헌재 앞 태극기부대, 광화문·한남동으로
92	브레이크뉴스	2025.04.09	계엄반란에 대한 적폐청산은 졸속 개헌보다 더 긴급한 과제
93	파이낸스 투데이	2025.04.16	[단독] 2020년 블랙시위와 2025년 윤어게인 집회의 공통점 분석
94	뉴스핍	2025.04.18	[사회 통합 첫발은]① ‘尹 파면’ 후에도 광장 갈등은 ‘현재진행형’
95	JIBS	2025.04.26	광화문 집회서 전광훈 “2년 내 통일.. 윤석열 복귀” 주장
96	아이뉴스24	2025.04.26	서울 곳곳尹 지지 집회...전광훈 “2년 내 통일되면 윤 복귀” 주장
97	천지일보	2025.05.03	尹지지자들 광화문·교대 집회... 촛불행동은 대법원 앞서 집결
98	경향신문	2025.05.25	영화가 끝나자 “아멘”이 터져나왔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직접 봤더니
99	이데일리	2025.05.26	인천공항 입국장 메운 태극기·성조기, 모인 이유가..
100	뉴시스	2025.05.31	대선 전 주말 대규모 집회...“사전투표 조작”vs“내란세력 끝내자”(종합)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시리즈

- 25-28-01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총괄보고서 V: 2035 AI·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문아람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5-28-02 2035 AI·디지털 대전환 미래전략 (문아람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5-28-03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차세대 통신기술 및 양자기술 활용 방안 (이인규 외, 한국통신학회)
- 25-28-04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따른 혁신과 공정의 기업 생태계 조성 (양성병 외, 한국경영학회)
- 25-28-05 디지털 전환기 기업 동태 분석 기반 혁신성장 정책 방향 (이경원 외, 정보통신정책학회)
- 25-28-06 AI·디지털 전환기 노동 구조의 재편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설계 (임운택 외, 한국사회학회)
- 25-28-07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김범수 외, 한국정치학회)
- 25-28-08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복지서비스 개발 연구 (윤건 외, 한국행정학회)
- 25-28-09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남태우 외, 한국정책학회)
- 25-28-10 디지털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김현 외, 대한전자공학회)
- 25-28-11 디지털 전환기 AG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송길태 외, 한국정보과학회)

● 저 자 소 개 ●

김 범 수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 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현 한국정치학회 회장

양 지 수

- 브리티시컬롬비아대 국제관계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 현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장 우 영

- 건국대학교 의예과 수료
- 광운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정치학 석사
-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김 정 연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 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유 성 진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박사
- 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현 한국정치학회 정치발전연구분과위원장

조 계 원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 현 고려대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사업 RS-2025-02173110
정책연구 25-28-07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A Study of Changes to Political Institutions
Designed to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2025년 12월 일 인쇄

2025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Homepage: www.msit.go.kr

인쇄 인성문화
